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

- 때: 2012년 10월 12일 (금) 10:00-17:30
- 곳: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제1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제2부] 조선어학회 정신의 계승: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주최:  국립국어원

주관: 제1부 한글학회

제2부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개회식 및 기조 강연

사회 정희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 10:00 -10:20 개회
국민의례
환영사 민현식 (국립국어원 원장)
축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영상 조선어학회 수난의 기억
- 10:20 -10:50 기조 강연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민족사적 의의: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

제 1 부 |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 [주제 발표 1] 사회 박선자 (부산대 교수)
- 11:00 -11:30 외솔의 사상 형성과 그 실천: 김석득 (연세대 명예 교수)
- 11:30 -12:00 조선어학회 사건과 민족어 수호 운동: 고영근 (서울대 명예 교수)
- 12:00 -12:30 이인 변호사의 항일 투쟁과 조선어학회 사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2:30 -14:00 기념사진 촬영 · 점심 식사

- [주제 발표 2] 사회 정동환 (협성대 교수)
- 14:00 -14:30 조선어학회 투쟁의 역사적 평가: 박용규 (한글학회 연구 위원)
- 14:30 -15:00 일제의 동화 정책과 조선어학회의 항쟁: 허재영 (단국대 교수)
- 15:00 -15:30 조선어학회의 수난과 현대 한국어의 발전: 최경봉 (원광대 교수)

제 2 부 | 조선어학회 정신의 계승: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사회 윤여탁 (서울대 교수, 한국어교육학회 회장)

- 15:40 -16:00 기념 강연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의 필요성과 역할: 박창원 (이화여대 교수, 국어학회 부회장)
- 16:00 -16:20 기념 강연 한국어 세계화 시대의 국어 정책 과제: 조남호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 16:20 -16:30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경과 보고: 정병헌 (숙명여대 교수,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창립준비위원장)
- 16:30 -17:00 창립총회 정관 채택, 회장 · 감사 선출
- 17:00 -17:30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및 기자 회견

• 차례 •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 개회식 및 기조 강연

[환영사]

민현식(국립국어원 원장) 1

[기조 강연]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민족사적 의미 3

제1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주제 발표 1]

김석득(연세대 명예 교수) / 외솔 최현배의 사상 형성과 그 실천 13

고영근(서울대 명예 교수) / 조선어학회 수난과 민족어 수호 운동 29

한인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인 변호사의 항일 투쟁과 조선어학회 사건 45

[주제 발표 2]

박용규(한글학회 연구 위원) /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75

허재영(단국대 교수) / 일제의 동화 정책과 조선어학회의 항쟁 92

최경봉(원광대 교수) / 조선어학회의 수난과 현대 한국어의 발전 121

제2부 조선어학회 정신의 계승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기념 강연]

박창원(이화여대 교수)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의 필요성과 역할 141

조남호(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 한국어 세계화 시대의 국어 정책 과제 146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문] 157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회칙] 161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조선어학회 수난 70돌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70년 전인 1942년 10월 일제에 맞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조선어학회 회원 33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갓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말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 우리도 국어사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래진 선생 등이 출옥하여 제자들을 길러내 오늘의 국어학 연구와 국어 교육도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 조선어학회는 전국에 국어 강습회를 열어 80%에 이르던 우리의 문맹 상태를 일깨워 민주 국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서게 된 것은 목숨을 바쳐 우리 말글을 지켜 오신 이런 선열들 덕분입니다.

그동안 조선어학회를 계승한 한글학회가 조선어학회의 수난을 국어 수호 운동으로 승화시켜 기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학회만의 역사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될 항일 운동사의 크고 거룩한 자취입니다. 그래서 올해 70돌에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면서 한글학회와 전국의 어문학술단체가 주관하여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학회는 조선어학회 수난 70돌을 계기로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발족하고 조선어학회의 국어 수호 정신으로 국제화 시대에 국어국문학의 통합 발전을 도모하며 국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날 국어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희망과 위기를 함께 맞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류 덕분에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국어가 단군 이래 가장 타락하였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욕설의 범람, 언어 폭력, 이념 언어의 갈등도 국어의 위기 상태를 보여 줍니다.

일제 강점기의 국어 수난은 일제라는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국어 위기는 우리 스스로 국어를 학대하고 훼손시키면서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서로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니고 선열들의 뜻을 이어 받아 어문학술단체들은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어 수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문법도 정비하고 한국어 교수 학습 자료도 전 세계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국어 교양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국어 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저래의 말과 글조차 쓸 수 없음을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올해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행사가 범람하는 외국어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는 국어를 치유하고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한글학회 및 한국어문학술단체 연합회 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어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12일

국립국어원 원장 민 현 식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기조 강연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민족사적 의미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

kimjt@hangeul.or.kr

오늘 조선어학회 수난 70돌을 맞아 개최하는 학술 대회를 계기로 선열들의 피나는 투쟁이 우리나라 독립투쟁사의 가장 빛나는 역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일제에 국권을 찬탈당하자 직접 총칼을 들고 무장투쟁에 나서기도 했고, 임시정부를 세워 정치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나 어느 것 하나 기약 없는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 말글을 지키는 것만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며 이 길만이 장차 독립을 기약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닫고 수십 년간 모진 고초를 겪어가며 투쟁한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위대한 역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못한 후손들은 선조들의 위대한 투쟁사를 ‘조선어학회 사건’ 혹은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마치 ‘여순 반란 사건’, ‘대구 10·1 사건’처럼 치욕적인 이름으로 부르면서 역사의 그늘에 팽개쳐 왔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4월 한글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장실의 한쪽 벽에 걸려 있는 선열들의 초라한 영정들을 바라보며, 못한 후손으로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이 삼키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어른들의 위대한 사적을 역사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모실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첫걸음으로 김항식 국무총리를 면담하여 그 뜻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의 성원에 힘입어 오세훈 서울시장

을 면담하고 우선 세종로 큰길에 조선어학회 선열 추모탑을 건립해 줄 것을 청원 하였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는 세종로 일대에 걸쳐 한글문화 거리를 만드는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청원서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 건립의 일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 식민 통치가 자행한 가장 잔혹한 민족 말살 책동이었으며 우리로서는 가장 처절하고 치열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선열들은 암울한 식민 통치 아래서 장차 독립을 기약하는 길은 오직 우리 말을 지키는 데 있음에 뜻을 모으고 일찍이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신만고 끝에 무려 16만 어휘를 수록하는 최초의 ‘조선말큰사전’ 편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탐지한 왜경이 1942년 10월 사전 편찬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33인의 우리 말글 학자들을 함흥형무소에 구금하고 모진 고문을 가하여 이윤재, 한징 두 분이 옥사하고 다른 분들은 광복과 함께 반죽음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빛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아직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으니 어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상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피나는 투쟁을 한 사례도 없거니와, 그 빛나는 유업을 계승하고도 한 조각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못난 겨레도 없습니다.

듣건대, 서울시에서 세종로 일대를 한글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 한다 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종대왕께서 굽어보시는 세종문화회관 옆자리나 현대 역사박물관 뜨락에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을 크게 세워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문화혼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길이 전하는 역사의 표상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는 외형으로 꾸미는 것보다 역사로 채우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서는 우리 학회 칠천 회원이 백년 역사를 딛고 드리는 간절한 청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20.

한글학회 회장 김종택

바라던 대로 오세훈 시장도 늦었지만 당연한 사업이라며 추모탑 건립에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탑을 세우게 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선열 추모탑’이라는 이름에서는 선열들의 끝없는 투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뜨겁고 적극적인 이름인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 기념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난 70돌을 기념해서 출간하는 책 이름도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사’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늦게 착수한 투쟁사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처럼 벌써 훌륭한 책자로 나와 있는데, 기념탑은 예산만 확보한 채 아직 설계도도 나와 있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본래 그런 것인가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사’의 발간사와 조선어학회 간사장으로 항일 투쟁의 선봉에 섰던 고루 이극로 선생의 추모사, 그리고 세종시장님께 드리는 청원서를 보이면서 기조 강연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선어학회 선열들을 독립 투쟁사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모시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발 간 사

너무 늦었다. 겨레의 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민족을 지키고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생명을 걸고 싸웠던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피맺힌 투쟁사를 수난 70돌을 맞아 이제야 세상에 내놓는 것이 너무 늦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일제의 침략 세력에 국권을 찬탈당하자 직접 총칼을 들고 무장투쟁에 나서기도 했고, 임시정부를 세워 정치투쟁에 나서기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기약 없는 투쟁일 뿐 승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조선어학회 선열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만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며, 민족이 살아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 아래 모진 핍박과 감시를 받아가며 우리 말 글을 가꾸는 피나는 투쟁을 이어나온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말글 연구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끈질긴 민족운동이요 독립투쟁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일제는 마침내 선열들을 구금하였는데 그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었다. 혹독한 고문과 굶주림 끝에 한징, 이운재 두 분이 옥사하고 다른 분들은 광복과 함께 반죽음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왔으니 그 혹독한 참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흔히 조선어학회사건을 단순히 국어학자들이 우리 말글을 지키려다 일제의 탄압을 받은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처럼 큰 오해는 없다. 그것은 직접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된 33인 가운데는 국어학자보다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은 데서도 그 조직과 투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나라를 세울 때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된 이인, 초대 재무부 장관이 된 김도연,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된 안호상 등이 들어 있는 것만 보아도 조선어학회의 투쟁이 단순한 말글 투쟁이 아니라 독립투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분들이 당면 과제로 삼은 것은 『우리말큰사전』 편찬이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맞춤법 통일, 표준말 사정, 외래어표기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엄혹한 감시와 탄압 아래서도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것은 곧 국어의 현대화를 완성한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어 광복 이래 한글로 교육을 하고 한글로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불과 두 세대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 문화 강국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또 한 번 놀랍고 부끄러운 것은 그 위대한 선열들의 투쟁이 지금까지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잊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끈질긴 투쟁 기간으로 보나, 방대한 조직과 활동 범위로 보나, 그분들이 거둔 빛나는 성과로 보나, 그분들이 겪은 모진 고통과 희생으로 보나,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독립투쟁임이 분명한데도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돌비석 하나 세우지 않고 살아온 것이다.

수난 70돌을 맞아 이제야 광화문 앞뜰에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 기념탑’이 서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한글학회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 준 김황식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임을 밝히고 고마움을 표한다.

한글학회는 너무 늦었지만 수난 70돌을 맞아 선열들의 위대한 투쟁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 독립투쟁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받들고자 한다.

끝으로 오랜 세월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투쟁사를 중심 과제로 삼고 깊이 연구해온 박용규 박사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발간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2012. 9. 1.

한글학회 회장 김종택

영원한 민족주의자 고루 이극로 선생

지금부터 104년 전 이 땅에 국어연구학회가 결성된 것은 국어학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문명사의 사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대 언어학이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에 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결성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언젠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깊은 믿음이 우리 말글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국어연구학회는 언어학회이면서 처음부터 민족운동 단체이며 독립운동 단체였음을 알게 된다.

고루 이극로 선생이 오랜 망명, 유학 생활을 끝내고 1929년 1월 귀국하자마자 조선어연구회에 들어 국어운동에 혼신의 힘을 바친 것도 그 길이야말로 민족의 앞날을 기약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백성으로 만주 벌판, 시베리아, 광막한 중국 대륙을 누비며 쓰라린 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복에 대한 염원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선생은, 베를린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한국어 강좌를 열고 음성학을 연구한 것도 장차 고국에 돌아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29년 1월에 귀국하여 그해 10월에 108인의 뜻있는 분들을 모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이 된 것을 보면 고루 선생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어 1930년에는 조선어연구회 간사장이 되었고 1931년 1월에는 학회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고 간사장이 되어 조선어사전 편찬의 전 단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니,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 사정한 조선어표준말 모음(1936), 외래어표기법 통일안(1940) 등이 그런 일들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다. 표준말을 제정하기 위하여 남북 팔도에서 고루 학자들을 모아 낱말 하나하나를 심의하는 일이, 더구나 일제의 감시를 피해 가며 뜻을 모아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는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지금 생각만 해도 거룩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염을 금할 수 없다.

광복 후 두 세대 만에 그 처참한 6·25전쟁을 겪고도 오늘 우리가 가난의 멍에를 벗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것은 오로지 조선어학회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말과 글을 현대화했기 때문이다. 한글로 역사를 배우고 한글로 과학을 배우고 한글로 문화를 배워 비록 배가 고플지라도 두루 수준 높은 국민이 되었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한(恨)을 공유한 국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영도자가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며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하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

은 국민의 염원에 불길을 붙였으니 어찌 그것을 기적이라 말할 것인가. 오로지 조선어학회 선열들, 고루 이극로 선생의 눈물겨운 염원이 크나큰 결실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조선어학회의 피나는 투쟁이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었으니 어찌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겠는가. 이제 비로소 김황식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글학회의 눈물겨운 청원을 받아들여 광화문 앞뜰에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 기념탑’을 세우게 되었으니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겠는가.

독립군에 들어가서 총칼을 들고 싸운 분,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 독립을 호소한 분 모두 자랑스러운 독립투사들이지만, 수십 년간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우리 말글을 가꾸고 다듬다가 일제의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바친 조선어학회 선열들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조선어학회를 이끌어 온 고루 이극로 선생 같은 민족의 선각자이자 위대한 독립투사가 아직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남에 있건 북에 있건 오로지 겨레를 위하여 사신 위대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우러러 받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고루 이극로 선생님, 선생님과 조선어학회 선열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 되어 자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한글은 이제 세계인의 글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도 부디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한글학회 회장 김종택

이재홍 행복도시 건설청장님께 드리는 청원서

지금 온 세계 어디를 가나 한류 문화의 열풍이 뜨겁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드라마 대장금, 케이팝, …… 등등 한류 문화의 열풍은 끝없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드라마든 춤이든 한류 문화는 곧 한글문화요 한국어문화입니다. 그것을 방증하듯 지금 세계 도처에는 한글과 한국어를 교육하는 세종학당이 100여 곳, 그 밖에 자생적으로 3,000여 개의 교육기관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

계적으로 이끌어 방향을 제시할 구심점이 없습니다.

고대 회람문명처럼, 중세 로마문명처럼, 근세 영미문명처럼 세계 문화를 이끌어갈 한류 문화의 방향을 제시할 구심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나아가 세계 문명을 이끌어 나갈 한류 문화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비교되는 ‘한글회관’을 크게 세우

한글 · 한국어 교육의 구심점

한글 · 한국어 문화창조의 구심점

한글 · 한국어 세계화의 구심점

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조선어학회 선열 기념관’으로 지어주십시오.

오늘의 한글이 있기까지 목숨을 바치며 투쟁한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기념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어학회는 10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민족학회로 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어를 사정하고 『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국어 현대화를 완성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광복 후 두 세대 만에 처참한 가난을 떨치고 일어나 이제 문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해외에서 정치투쟁을 할 때 조선어학회는 국내에서 목숨을 걸고 민족투쟁을 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역사의 긍지를 선점하는 일이고 목숨을 바치며 투쟁한 선열들에게 진 무거운 빛을 갚는 길입니다. ‘조선어학회 선열 기념관’을 열어 한글문화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청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다리며 청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0.

한글학회 회장 김종택

끝으로, 조선어학회 수난 70돌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열어 준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 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 주제 발표 1 /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1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제 발표 1 || 발표문

외솔 최현배의 사상 형성과 그 실천

—학문과 우리 말글 문화 정책—

김석득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ksd31102@hanmail.net

역사를 이해하는 뜻은, 역사 흐름의 한 선 위에 있는 현재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창조의 이상을 세우는 데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 겨레와 나라사랑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외솔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한 그 사상이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대저 그때를 산 여러 선각들의 한결같은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는 상징의 뜻도 함께 한다.

외솔은 한 삶에 주어진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라 여러 사상서를 펴냈다. 그 가운데 특히 두 개의 큰 사상서가 꼽힌다. 왜정 저항기에는 죽어가는 겨레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길(생물을 넘는 생기 찬 살음)을 열어준 『조선민족 갱생의 도』를 지었고, 광복 뒤에는 이 길을 잃은 나라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나라사랑의 길』을 지었음이 그것이다. 사상의 속뜻(겨레 나라사랑)으로 보면 뒤의 것은 앞 것의 연속선 위에 놓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한 삶을 지배하는 사상의 형성은 일찍이 어릴 적부터 싹 트고, 주시경 선생의 말글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서 굳게 자리 잡아 자랐으며, 겨레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실천되어 실하게 열매 맺는다. 다

시 말하면, 조선어학회 수난을 역사의 축으로 볼 때, 그 수난 때까지는 죽어가는 겨레 얼과 말을 살리기 위한 창의를 실천이요, 그 뒤는 살아난 겨레 얼과 말을 펴 나가기 위한 창의를 실천으로 나타난다.

1. 사상 깨달음 시기

1) ‘서당 교육’의 시대 - 비과학적 교육의 비판과 새 교육의 길을 깨달음

외솔 사상의 형성 과정은, ‘깨달음의 시기’와, ‘정착 강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깨달음의 시기를 본다. 이 시기야말로 외솔 삶의 전환점을 이룬다.

외솔은 1899년부터 1907년까지 서당에서 한문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싹이 틈다. 이것은 외솔의 회고의 글에서 명시된다.

“말글이 밖의 자연계와 안의 관념계가 아무런 관계없다. 오히려 그것은 창의력, 독립성, 자주심을 저해할 뿐이었다.”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에서, 사상계, 1955. 6월호)

이러한 깨달음과 학문의 비판 의식은 새 교육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가 된다.

2) ‘새 교육’의 시대

(1) 초등학교(일신학교, 현 병영초등학교) 교육 시절 - 나라사랑의 싹 트임과 학문연구의 근본을 깨침

외솔은 열네 살 되던 해 새 교육 기관인 일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1907-1910) 새 교육을 받았다. 외솔은 이 시절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오적칠적을 타도하는 기사와 사설을 읽고 목 놓아 울기를 밤 깊이 하였다 한다. 외솔의 나라사랑의 싹은 이때 이미 트인 것이다. 외솔은 이 새 교육 과정에서 산수 과목과 그 분석법을 좋아했으며, 수리와 논리적 사고 방법에 매우 흥미를 가졌다. 이를 외솔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 산술 공부에서 수리와 논리적 사고의 방법을 익혀 나의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을 세웠다. …… 여기에서 일생의 학문 연구의 근본을 닦은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 든 글에서)

(2) 고보 시절, 특히 (국어)강습소, 조선어강습원 시절

— 말을 겨레의 세계상으로 인식하는 민족주의 언어관, 말의 창조능력, 겨레 나라 사랑의 길 잡힘

일신학교를 마친 뒤 한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1910. 4)했다(곧 경성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음). 그러나 이때는 일본의 야욕이 노출되어 있었던 터라 뜻있는 학자들이 우리 말글의 연구와 보급에 심혈을 기울일 때다. 외솔은 이때 고보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 잃은 울분을 안고 특히 주시경 선생의 강습소 교육을 함께 받는다. 이 강습소(상동청년학원 안에 열고 그 뒤 보성학교로 옮김)는 1908년 3월 31일에 창립된 ‘국어연구학회’가 연 1년 과정의 국어 교육 강습소이다. 외솔은 주시경 선생에게서 배운 이 강습소 2회 졸업생(1910. 10.-1911. 6. 27.)이다. 국어연구학회는 ‘국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회 이름을 ‘배달말글뎡음’(1911년 9월 17일, 『한글모 죽보기』의 ‘연혁’에 따름. ‘회록’에는 9월 3일)으로 고치고, ‘강습소’를 ‘조선어강습원’으로 바꾸면서 초등, 중등, 고등과를 둔다. 외솔은 이 조선어강습원의 중등과 1회 수업(1911. 9. 17.-1912. 3. 1.)과, 고등과 1회 졸업을 한다(1912. 3. ()-1913. 3. 2.).

외솔은 따라서 주시경 선생에게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셈이다. 이 시기에 외솔의 겨레 사상은 여물어갔다. 외솔의 다음 말은 이를 짐작케 한다.

“주 스승에게서 한글을 배웠을 뿐 아니라 우리말 우리글에 사랑과 그 연구의 취미를 길렀으며, 겨레 정신의 깊은 자각을 얻었으니 나의 그 뒤 일생의 근본 방향은 여기서 결정된 것이다.” (위에 든 글에서)

외솔의 한 삶의 근본 방향을 결정토록 한 것은 무엇이며, 겨레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의 오르고 내림을 나라의 오르고 내림과 상관관계로 본’(보충 침목 회보 1호, 1910. 6. 1), 또한 ‘한나라의 성하고 쇠함이나 있고 없음을 말의 그것과의 함수관계로 본’(『국어문법』 서, 1910) 주시경 선생의 언어관을 깨친 것이요, 또한 ‘말은 나라 독립의 성’(정신, 열)으로 판단한(위에 든 책에서) 주시경 선생의

‘말-글-얼 일체’의 민족 언어관을 깨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겨레 얼을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우리말을 창안할 수 있다는 능력의 실증(주시경 선생의 고유한 새말 만들기)을 그때 그대로 외솔은 깨쳤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시기의 외솔의 사상의 깨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말은 겨레의 세계상임을 인식하는 외솔이 민족 언어관과, 말의 창조능력(말의 힘)을 깨치고, 말글의 사랑과 연구를 통한 나라사랑의 길을 분명하게 잡은 때이다.”

【참고 1】 주시경의 언어관이나 외솔의 그것은, 언어철학자 훔볼트(1767-1835)의 다음의 언어관과 같다: “언어의 차이는 그 안에 새겨진 세계관 그 자체의 차이이다.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적인 외적표현이다. 언어는 다만 이루어져 있는 것(에르곤, ergon)이 아니라 지어내는 힘 곧 생성 창조 활동을 이어가는 있음(에네르게이아, energeia, 말의 힘)이다.” (글쓴이: 『우리말 연구사』 1983 : 13, 2009 : 22)

【참고 2】 외솔이 다니던 강습소와 조선어강습원의 때(1910-1913)는, 주시경의 『국어문법』이 펴나온 때이다. 따라서 그 책의 ‘서’ 안에서 밝힌, “세종께서 천종의 대성으로 국어 문자를 친제하심”과, 같은 책 ‘말의 소리’의 어학사에 해당하는 대문에서 밝힌, “훈민정음의 세종 어제 서문과 본문” 들은, 아마도 그때 제자들이 세종의 자주 민족 언어관과 창조주의 사상을 인식하는 데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사상 정착 강화 시기

- 고등교육 시절, 민족주의 줄기 사상의 정착 강화

외솔은 고등교육 과정(히로시마고등사범 1915-19, 교토대학 1922-5, 그 대학원1925-6)을 거치면서, 왜정의 압제 정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겨레의 확고한 정체성과 겨레 의식을 정착 강화한다. 이것은 대학원을 마치면서 지은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서 확인된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정복자의 압제 정치 아래에서 목숨을 살면서 공부를 하자니 압박과 설움, 수치와 통분 속에서, 현재를 견디며 장래를 근심하기에 남모르는 마

음의 고통은 끊일 날이 없었다. 살기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공부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조선민족 갱생의 도』 ‘머리말’ 중에서)

“아모(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선 사람이다. 세계는 넓건마는 조선만이 내 땅이다. 삼천리 강산 우(위)에 곳곳마다 피땀 흔적, 사천년 역사 속에 일일마다 사랑 자곡(곡), 이 강산 이 역사를 잊고 이어 다시 이어, 이천만 이억만이 영키영키 살아 보세.”(『조선민족 갱생의 도』 ‘끝맺는 말’ 끝 쪽에서)

이것은, 외솔이 고등교육을 받는 과정(시기)에서 늘 마음속에 사무치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대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결국 겨레와 나라사랑의 민족주의 줄기 사상을 확고하게 정착 강화한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사상은 그 사상의 실천철학으로 체계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상적 확고한 심정의 글이 대학원을 거치면서 나오기에 앞서 외솔은 교토대학 철학과의 교육학 전공 논문 ‘페스탈로찌의 교육사상’(1925)을 발표한다. 이 두 글은 대학의 논문과 대학원의 논문 ‘조선민족 갱생의 도’(1926)라는 시차는 있다. 곧 앞의 것은 결국 외솔의 ‘교육철학의 체계’ 확립이요, 뒤의 것은 우리 겨레의 삶의 실천 강령임과 아울러 외솔 스스로의 실천 강령이기도 하다. 민족을 구하는 길이 교육에 있음을 확신하는 외솔은 그러므로 조선 민족 갱생의 잠재의식을 가지고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교육철학에 관한 글을 쓴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제 이들의 속살을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1) 교육철학의 체계 확립 - 페스탈로찌의 설을 새긴(소화) ‘교육철학’

외솔은 교토대학 철학부에 입학한다.

“민족을 구하는 길은 교육이다.” 이는 외솔 교육관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밝힌다. 처음에는 사회학이 전공이었으나, 민족 개조와 사회 개량의 근본책이 교육에 있음을 알고, 철학, 윤리학, 사회학, 심리학을 배우고 언어학을 부전공으로 삼으면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졸업 논문으로는 ‘페스탈로찌의 교육학’을 썼다. 이 주안점은 “‘교육의 본질’은, 사람의 개성과, 인식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맞춤으로써, 사람의 본원의 창조적 힘의 개발과 도덕적인 힘을 기르되, 이를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마당은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 곧 학교나 사회가 바로 자연스러운 교육의 마당이라는 것이

다.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모든 능력과 소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킴에 있다.”(외솔은 실제로 억압을 당하던 1926년에 연전 교수로 임하였을 때 우리말 강의를 못하게 하였음에도 겨레의 이성에 호소하고 창조 능력을 개발하는 우리말 교육을 과외 과목으로 밀고 나아갔다. 광복 뒤에는 대학 입시에서 무시험 내신제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실천한 바 있다. 또한 외솔의 가르침의 고장은 교단뿐 아니라 교단 외적인 마당, 곧 학생과 마주치는 그곳이 바로 교육의 마당이었다.)

2) 겨레 삶의 실천 강령 체계 확립

— 『조선민족 갱생의 도』의 ‘살음(생)철학’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수치와 통분 속에서 이를 견디면서 겨레를 되살려 보겠다는 것, 이것이 『조선민족 갱생의 도』(논문:1926, 책:1930, 1971)의 동기요 목적이다. 그리하여 먼저, 심리 정신 병리학의 분석을 통하여 민족이 중병과 쇠약증에 걸린 환자임을 진단한다(1971판의 책 18-43쪽). 이 중병과 쇠약증의 원인(44-101쪽)은 완고 불치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병의 뿌리는 아직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 번 좋은 의사를 얻으면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치유의 근본 원리로 겨레 생명의 큰 길을 여는 ‘살음(생)철학’을 세운다. 그 뜻의 핵심은 이러하다: “우주 만상은 다 활동 중의 만상이다. …… 모든 만물은 모두 활동하고 항구한 진화 진행 중에 있다. …… 이러한 살음의 작용이 영귀한(가장 거룩하고 귀한)것이 곧 우리 인생이다.”(『조선민족 갱생의 도』 ‘서언’)

이 철학의 근본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정신은 물질보다 윗자리에 둔다.

나. 끊임없는 새로움의 창조 활동을 한다.

다. 민족적 삶의 생기와 높은 이상을 세운다.

라. 우리 민족의 특질, 곧 ‘지-정-의’의 탁월함을 고증한다.

그리고 겨레를 되살리는 기본 방법으로 외솔 자신은,

가. 민족 언어관(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적 산물)을 확고히 한다.

나. 위의 언어관을 배경으로 우리 말글 연구와 교육, 정리, 보급의 실천을 꾀한다.

3. 사상의 실천

1) 광복 전(조선어학회 수난까지)

(1) 민족 언어관, 생물을 넘는(초생물) 생기 찬 언어관 바탕의 민족학문관 실천

외솔의 사상의 실천은 ‘광복 전’과 ‘광복 뒤’로 이루어진다. 광복 전의 일제 저항기에 있어, ‘민족 언어관’은 구체적으로 ‘민족학문관’으로 나타난다. 또한 ‘생물을 넘는(초생물) 언어관’-생물의 죽음은 곧 죽음을 뜻하지만 말의 생명은 걸으로는 한 때 죽어도 속으로 살아 있다가 민족정신의 생기가 충족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언어관(문리 음향학 과정인 걸말 parole은 어떤 까닭으로 한 때 죽어도 뇌의 기본적인 심리적 속뜻의 속말 langue는 살아 있다가 걸말을 되살려 낸다는)-은 이 또한 민족학문으로 승화한다. 외솔의 민족학문관은 이 두 언어관(민족 언어관, 생기 찬 언어관)에서 말미암는다(학문뿐 아니라 말글의 교육, 말글의 정책에서도 이 두 언어관이 적용된다.).

학문은 다만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나라와 겨레를 위한 학문이라야 한다.
(민족 언어관을 바탕으로 한 민족학문관)

생물의 죽음은 곧 죽음이지만, 말의 생명은 한때 걸으로는 죽지만 속뜻으로는 살아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을 바탕으로 한 민족학문관)

‘생물을 넘는 언어관’이란 용어는 외솔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솔은 우리말이 침략자의 언어말살정책이라는 정치적인 억압의 원인(말이 죽어가는 원인에는, [1] 말할이 모두의 소멸이나 자연재해, 대량학살 등의 ‘물리적인 원인’, [2] 강한 경제활동의 압력이나 지배언어와 피지배언어의 계급성, 전통 활동의 폐기 등의 ‘경제 사회적인 원인’, [3] 국가의 극단적인 다언어주의나 국제적 언어 제국주의, 침략자의 언어 말살정책 등의 ‘정치적인 원인’ 등이 있다. 아제주 ‘죽어가는 말을 살리기’ Hagège. C.: Halt à la mort des langues, 2000에서)으로 죽음에 이르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말글의 미래의 이상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였다. 이 이상의 실천은 ‘생물을 넘는 언어관에 말미암는다. 외솔이 한 삶에서 끼친 큰 학문의 업적은 그 이상의 실천이다(외솔의 학문은 올 해 ‘외솔전집’ 1차분으로 28책이 나

왔다: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4. 30). 다음은 그 주요한 것의 몇 개이다.

외술은 우리 말글이 소멸에 직면하는 지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정신 안에 내재하는 속말의 법칙과 겨레 문화 창조의 역사적 이상을 지키는 『우리말본』(1937)을 펴냈다.

『우리말본』은 1929년에 그 첫째 매(소리갈)가 나오고, 1930년에 ‘조선어 품사 분류론’이 나왔으며, 1935년에는 그 온 책이 완성되어 1937년에 펴냈다. 이 책이 나오는 앞뒤의 우리나라 안은 우리 말글 말살에 맞서 그 연구 보급 정리에 비상 이 걸렸을 때다. 이때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의 하나가 통일된 사전의 편찬이다 (이는 뒤에 조선어학회 사건의 한 빌미가 됨).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 전제가 통일 된 말의 본이다. 외술의 말본은 외술이 유학할 때 부전공으로 한 언어학의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논리학과 심리학 그리고 경험주의 철학을 융합한 상승적 효과를 거둔 ‘준종합주의’ 체계이다. 주시경 선생 이후 형성되는 세 큰 말본 체계 의 하나다. 사전 처리에서의 논전(표음, 표의주의도 함께)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 다. 그러나 이 논전은 완성된 말본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상승적 효과를 거둔다는 융합의 원리 면에서 역사적이고 긍정적이다.

『한글갈』(1942)을 본다. 이는 외술이 1938년에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한 석 달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풀려났으나 연전 교수직에서는 강제 사직 당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선각의 문화 역사적 업적을 체계화해 놓아야, 훗날에 후학들이 이를 계 계승승하리라”는 비상한 각오로 지은 것이다. 1940년에 완성하고 1942년에 펴낸 것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기 얼마 전의 일이다. 이는, 외술은 속마음으 로 ‘생물을 넘는 언어관’을 품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보기로, 『한글갈』 초판 ‘머리말’에 내포한 속뜻을 보면, 거기에는 외술의 ‘생물을 넘는(초 생물) 언어관(또는 생기론의 언어관’, ‘말의 자연순환관’)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본다: “한글은 조선 사람의 지적 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인 동시에, 또 지 적 탐구의 가장 긴밀한 대상이 아니면 안 된다. … [다음은 왜정 아래 출판 허가 신청에서 쫓긴 것임] … 해가 남회귀선에서 돌아와서 한 양기를 던지는 것을 상 상하면서, 인왕산 아래 커다란 은행나무 천만가지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그 러나 끝끝이 푸른빛을 먹음은 듯한 저문 빛(모색)을 바라보면서.” 곧 이는 ‘자연의 순환법칙’을 빌어, 어떠한 악조건 아래서도 정신과 마음가짐에 따라 살아남은 ‘속 말’(랑그)은 시들어진 ‘겉말(빠푼)’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외술의 ‘생물을 넘는 언

어관’(또는 생기론의 언어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외솔은 『한글갈』을 다 짓고 “나는 나의 생명의 대가가 이 세상에 남게 된 것을 보고, 스스로 위안을 느꼈다.”라고 했다. 이 책이 나온 지 넉 달 뒤인 10월 1일 외솔은 동지와 함께 조선어학회 수난의 길을 걷는다.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을 믿었기에 외솔은 족쇄를 차고서도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또 다른 보기를 든다. ‘글자의 혁명적 옥중 연구’가 그것이다. 오늘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혹독한 감옥살이 안에서도 우리 말글의 과학적 이상을 세우기 위하여 30년 전부터 착수한 글자의 혁명 연구에 골몰했던 일, 그리고 생명 보존이 가능한 청년 안(安)과 서(徐)에게 이를 옥중에서 가르치던 일(‘나의 인생과 나의 학문’, 1965 『현대문학』 7월호) 들은 이 또한 외솔의 그러한 언어관에 바탕을 둔 학문관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학문관은 겨레말의 죽음을 막는 피나는 연구 노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겨레말의 죽음을 막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그 속말은 걸말과 함께 다 같이 아주 속절없이 죽고 마는 무기물이 된다는 것을 외솔은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이 옥중 연구 안은 광복 뒤 『글자의 혁명』(1947)으로 나온다(오늘날도 특히 심한 국제적인 언어제국주의로 말미암아 여러 겨레말이 죽어 가고 아울러 인류 문화가 소멸해 감을 바로 보고, 이에 대한 걱정의 글이 문화인류학적 면에서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주시한다. 렉스프레스: L'EXPRESS, no. 3169, 2012. 3. 28-4. 3., 내셔널 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 2012. 7월 호. 말의 죽어감을 막고 살리기에 대해서는 아제주(Hagège)의 앞에 든 책이 참고된다.).

(2) 겨레 문화 발전을 위하여,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에 바탕을 둔 말글 정책의 실천

‘말 글 얼 일체’의 민족 언어관과 생물을 넘는 생기 찬 언어관의 신념 아래 이루어지는 말글의 정리나 보급들의 언어정책은 겨레가 되살아나는 길을 밝힌 『조선민족 갱생의 도』의 필연적인 실천 이상이다. 이 이상의 실천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의 맞춤법 정리,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제정, 그리고 사전 만들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기로 나타난다. 저항기의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외솔은 먼저 민족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검거된다(석 달의 옥살이). 이른바 흥업구락부 수난(1938)이다. 그리고 우리말 정리 보급에 열중한 이들과 함께 조선어학회 수난

(1942-5)을 겪는다. 『조선민족 갱생의 도』는 ‘조선어학회사건 예심종결 결정문’에서 그 실천의 목적으로 저술된 독립운동의 죄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실로 말의 힘, 말의 열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선각들의 민족 언어관과 이를 잘 인지하는 왜정과의 막 부닥뜨림에서 빚어진 큰 수난 사건이었다(『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0.을 볼 것).

2) 광복 뒤(조선어학회 수난 뒤)

(1) ‘묵은 도덕’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새 도덕론’을 세움

외솔은 말한다. “세계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국민의 충만한 생기와, 굳센 도의심과, 왕성한 창의력에 달려 있다. 그러하건만 광복 뒤 국난의 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국민의 도의심은 무너져 가는 현실이다. 이 도의심을 잘 잡아 북돋우지 아니하면 나라의 앞길은 캄캄함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기에 외솔은 나라사랑의 충정에서 새로운 도덕론을 세운다. 그것은, 유교 사상에서 온 ‘묵은 도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뜻, 자유와 평등의 올바른 뜻에 맞는 ‘새 도덕론’(12가지 덕: 부지런히 일하기, 스스로 서기, 협력하기, 책임 다하기, 민중의 사랑과 섬기기, 너그러움, 평화, 규율, 공명, 정직, 창의, 소망)을 확립한 것이 그것이다(『민주주의와 국민도덕』 1953). 외솔은 그때의 도덕의 타락 현상 앞에서, ‘섬 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상’의 힘으로 이 ‘새로운 도덕론’을 세워, 널리 학교 교육에 이바지한 것이다. 참된 사람을 상징하는 외솔의 다음의 격언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네 자신을 알라.”

(2) ‘나라사랑의 길’을 밝힘

외솔에게 비친 광복이 된 뒤의 사회상은 온통 모순덩어리였다. 그 사회를 외솔은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서 표방한 생기는 없어지고, 애국자는 많으나 나라 일은 글러져 가고, 진실과 선행은 발붙일 자리를 잃은 채, 허세와 거짓, 우악, 도덕의 타락, 썩은 교육이 날개를 치고 있다”고. 이러한 그릇된 사회 현상이 동기가 되어 외솔은 우선 ‘새 도덕’을 세우기에 이른다(『민주주의

와 국민도덕』). 그리고 사회의 온갖 부정적인 현상을 고치고 참된 나라사랑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드디어 『나라사랑의 길』(1958)을 펴내기에 이른다(사실 이 책은 8년 만에 끝을 맺었다 하니, 짓기의 시작은 1950년인 셈이다.). 살피건대, 저 『조선민족 갱생의 도』가 지난 수 백년의 잠자던 역사적 현실과, 민족의 숨을 조여오는 왜정의 억압의 현실 속에서 빈사상태에 놓인 겨레를 되살리려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었다면, 『나라사랑의 길』은 해방된 조국이 비민주 비애국적인 사회 정치의 현실 속에서 숨죽여 가매, 이를 되살려 놓기 위하여 가야 할 의로운 길을 외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둘은 때와 환경의 다름에서 나타난 외솔의 두 큰 사상서라 하겠다. 그러나 이 둘에는 겨레와 나라의 영원한 발전을 절규하는 외솔의 ‘나라 겨레 사랑의 사상’이 한결같이 이어 녹아 든 공통의 속뜻을 안고 있다.

『나라사랑의 길』에서 제시한 참 개념은 무엇인가? 외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라사랑은 겨레 사랑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나라가 위급한 특수한 경우에는,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는 최대의 희생을 하는 것이다. 외솔은 이를 “최대의 희생으로서의 나라사랑”이라 한다. 그 밖의 경우로는, 개인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일치하는 나라사랑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 이는 나라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바뀌어 놓인 명제(역정리)는 참이 아니라고 한다. 곧 “개인의 이익은 바로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외솔은, “나라사랑의 최후의 진정한 대상의 초점은 나라의 이익과 권익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변함없는 행동이 나라사랑의 행위이니, 곧 나날의 살기에서 신변의 작은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함이 국민, 동포, 겨레 사랑에 귀착하는 것, 이것이 나라사랑이다.”라고 한다(22-27쪽). 이러한 나라사랑의 원리는 외솔의 한 삶을 통해 끊임없이 추구해 온 삶의 철학이요, 실천 사상이다.

(3) 교육에서, 교육관의 실천

광복이 되자 외솔은 국민을 새로운 자주, 자유, 민주 국민으로 발전시키고자 미리 준비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교과서를 편찬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정치적 여독에서 온 잘못된 교육관과 교육의 혼란상은 외솔의 교육관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비뚤어지는 것이었다. 곧 외솔은 그 필연적인 개선의 과제 앞에 선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외솔은 교육 사상의 이론서를 펴낸다(『나라 건지는 교육』 1963).

이것은, 자율, 자발적인 창조 능력, 개성과 소질, 도덕, 이성 등에 호소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있는 곳이 바로 교육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본디 외솔의 교육철학이다. 외솔은 이를 곧 실천으로 옮긴다. 가령 진학의 방법으로는 무시험 제도를 이상으로 하여(위의 책 137-144쪽) 이를 실천하고(대학에서 내신제 실시. 그러나 아쉽게도 그때 일선 교육계의 거짓된 내신으로 이 제도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교육의 마당은 교단 뿐 아니라 사회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육의 마당임을 늘 실천했다.

교육에서는 사람 생각의 논리적 짜임에 대한 교육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그 생각(사고)의 짜임의 보편적 규칙은 바로 말본의 통일 규칙이다. 여기에 외솔은 각급학교의 말본 책 펴내기(에 힘을 기울일 뿐 아니라, 기본 연구서인 『우리말본』의 집고 고침판을 이어낸다(1955, 1961). 이 즈음에서 말본의 진리 논쟁이 일어난다. 이른바 ‘말본파동’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솔은 후학들에게 ‘진리의 원리론’을 전한다.

“진리 추구는 다수결의 대상이 아니다. 한 사람의 참 이치는 다수의 허구보다 값지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하여 만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지구는 여전히 돈다. 코페르니쿠스 한 사람의 지동설은 참이다.”

(4) 정책에서, 민주 자유민 육성의 교재 편찬, 한글로만 쓰기, 우리말 순화, 한글 기계정보화, 한글의 세계화의 실천을 위한 배경 원리와 그 실천

외솔은 위의 각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먼저 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해결의 원리론을 세운다. 실천은 이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가) ‘한글로만 쓰기’의 원리론

한자폐지 반대론자를 병리학적으로 보아(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빌어서) 한자의 중독 환자로 진단한다. 이러한 중독환자의 낯은 머리에 는 늘 어리석은 반동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중독자의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편 중독 환자의 치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에 가까운 아픔 속에서도 아편 공급을 즉각 끊어라, 조금씩 주면서 끊는다는 것은 치유 불가능을 뜻한다. ‘서서히 끊자’는 심리는 영원한 누림의 무의식의 심리현상이다. (『한글의 투쟁』 1954)

(나) ‘한글 가로쓰기’의 합리적 원리론

이는 주시경 선생의 ‘가로쓰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로쓰기의 제일 처음은 주시경 선생의 고등과 1회 ‘마침보람’(1913)에 보인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1914) 끝부분(夾入)에는 풀어쓰기의 보기가 나온다. 외솔은 그 영향을 받아 30년 전부터 연구에 착수하고, ‘옥중 안’(함흥 감옥의 연구 안)을 거쳐, 광복된 뒤 바로 책으로 펴내니, 이것이 『글자의 혁명』(1947)이다(이는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음). 외솔은 한글 가로쓰기의 근거로 여러 가지 원리를 들었다. 다음에 중요한 것 몇 개만 밝힌다.

“해부학의 원리”: 눈알에는 좌우로 쉽게 움직이는 힘줄의 특성이 있으며, 눈의 좌우 배치로 말미암아 시각이 가로 퍼짐으로써 시야가 넓어진다.

“심리의 착각의 원리”: 같은 길이도 가로보다 세로가 7분의1 더 길어 보인다.

“사람의 팔꿈치의 움직임의 원리”: 운동 범위는 상하보다 좌우가 수배 넓다.

위의 (가), (나)는 겨레의 가로문화 형성, 한글의 정보기계화론, 나아가서 한글세대 형성과 한글세계화와 상관성을 이룬다. 특히 한글의 정보기계화는 이 상관성을 생성함에 더욱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힘의 작용은 외솔이 삼고 있는 이상이기도 하다. 외솔의 한글의 기계화의 이상은 다른 분야와의 녹아 합하는(융합성)을 과정을 통하여 상승적 열매로 거두게 된다. 일찍이 연구한 ‘한글 당·홀소리가 쓰이는 변수’(연희 전문학교 문과 연구집 제1집, 1930)는 『글자의 혁명』(1947)과도 연계되고, 이것이 스스로의 한글기계화 연구소의 운용으로 나타나며, 공병우 님의 기계론과 눈의 시각 확산과의 녹아 합침의 이론으로 나아가 공병우 님의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기계정보화의 길을 여는 타자기 발명으로 나타난다(글썸이의 ‘외솔 최현배 선생과 공병우 선생’, 『한글 새소식』 2012. 3.을 볼 것.). 오늘날 ‘소리반응글자’, ‘소리울림도글자’들도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정보기계화의 발전도 모두 이러한 융합 연구 과정을 거쳐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우리말 순화의 원리론(말다듬기, 말짓기 이론) - 합리주의 철학관과 창조주의 언어관

말의 순화란 말을 깨끗하게 하기, 곧 ‘말다듬기’(말짓기)이다. 500여 년의 사대적 한자문화와, 36년 동안의 식민문화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의 고유한 정신문화

는 헐벗은 빈칸의 현상 그대로였다. 이 고유문화의 빈칸 메우기의 기본적인 작업이 우리말 순화 곧 말다듬기이다. 말은 사람의 이성의 발전과 문화 발전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헐벗은 말을 그냥 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손을 대는 문제는 언어관의 대립을 불러 온다.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말의 힘’론을 바탕으로 한 ‘창조주의 언어관’이고,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자연생성주의 언어관’이다.

외솔은, 말글은 말의 힘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손질할 수 있다는 창조주의 언어관(주시경, 훔볼트 등과 같이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능력과 합리주의를 긍정)을 세운다:

“사람은 원래 본뜨는 기계가 아니요, 자유스러이 창조하는 정신을 가진 이이다.”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1951, 81쪽)

“말씨는 근본 개인의 자유스러운 애지음(창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다시 사회의 무리 떼의 실제스런 의지스런 부닥질(연마)로 말미암아 피어나는(발달하는) 것이다.”
(위의 책 93-95쪽)

“겨레 문화 창조의 역량은 그 겨레의 생기의 강약, 정치적 흥망과, 사회적 자유의 풍만함과 미약함에 비례함은 일반 공리이다.” (위의 책 98-99쪽)

이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창조의 능력(competence)을 가진 존재로 보는 ‘합리주의 인간관’과 ‘창조주의 언어관’이라 하겠다. 외솔은 이러한 인간관과 언어관 아래, 없어진 고유어를 도로 찾아 깨끗하게 하기, 어려운 말이나 학술용어 순화하기, 들은말의 중간세계에서의 걸러내기, 새로운 사리나 사물에 대한 새말 만들기, 들을 실천한다(위의 책). 이는 자연생성주의 언어관—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득권 보수주의와, 정신적 예속 근성과, 사람의 힘(인위적)으로 일삼아 손대기는 불가하다는 이기주의를 깔고 있는 언어관—과의 대결 구도를 이룬다. 외솔은, 주장에 대한 반 주장은 사회심리학적 필연 현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한다. 그러나 정론에 대한 낡은 머리의 반동이 정도를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치밀한 논리의 힘(저서나 논문)으로 이를 설득한다.

외솔의 말만들기(말짓기, 말의 순화) 원리로는, 다음과 같은 ‘곱어 자란 나무의 곧추기 방법’인 대담성에 순응하는 자연법칙과, 평범한 진리를 제시한다.

“굽어 자란 나무를 곧추는 방법은 반대편으로 180도 돌려 놓는다.” (자연법칙에 순응)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것이지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의 위대성)

외솔은 이러한 대담한 실천과 진리의 평범성의 보기로 볼프(Chr. Wolff)를 든다. “서양사회에서 중세기 이래 라틴말이 아니고는 학문도 종교도 할 수 없다고 믿어 왔다. 18세기의 독일 철학자, 볼프가 대학에서 독일말로 강의하니까 모두 신기한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 철학을 어찌 독일말로 할 수 있으랴? 예서이다. 볼프를 정신이 돈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위축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독일말로 철학 강의를 계속했다. 그의 주장은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뒤 칸트의 독일말로 쓴 새 비판서가 나타나기에 이른다.”(『한글의 투쟁』 1954에서)

(라) 우리 말글의 세계로의 번짐(세계화), 우리 중심잡기와 세계 인식의 이상 창조와 진취적 기상아래 터 잡은 외솔의 겨레 나라를 보는 눈(민족 국가관)과 온 누리를 보는 눈(세계관)은 분명하다. 겨레와 나라 사랑은 외솔의 한 삶을 통한 으뜸 사상이다. 이 으뜸 사상은 우리를 중심 잡아 온 누리에 우리 것 펴 번지기와 함께, 진화하는 온 누리의 인식으로 시야를 넓히려 한 외솔의 정신세계이기도 하다.

“세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조선인이 되라. 조선을 구함으로써 세계를 구하라 …… 세계 진화의 기운에 참여하는 것이 조선민족의 이상이다.”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서)
“우리 말글을 세계에 퍼지도록 하라.”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에서)

외솔은 일찍이 우리 말글을 세계로 펴기 위하여 곧 실천으로 옮긴 일이 있다. 외솔이 대학원 수학 동안(1925-6) 나라 외국어학교에서 1년간 조선어 교수를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아마도 정식 외국 교육기관을 통하여 우리 말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최초의 일이 아닌가 한다.

4. 맺음

외솔의 정신세계와 그 이상의 실천은 다만 지난 때의 그침이 아니라 이제도 올 제(미래)도 우리 겨레의 영원한 문화사에 참다운 본보기가 될 것이다.

㉮ 참고(주요)한 글

최현배: *이 글에 관계되는 외솔(최현배)이 펴낸 주요 논저들.*

김석득: (1)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1983.

(2) 『외솔 최현배 학문과 사상』. 연세출판부, 2000.

(3) 『우리말 연구사—언어관과 사조로 본 발전사』. 태학사, 2009.

(4) ‘국어순화에 대한 근원적 문제와 그 해결책’. 『국어순화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5) ‘조선어학회 수난사건’. 『애산학보』 32, 애산학회, 2006. 10.

(6) ‘외솔 최현배 선생의 말씀들’. 『새국어생활』, 2011. 제21권 제4호, 국립국어원.

(7) ‘외솔 최 현배 선생과 공 병우 선생’. 『한글 새소식』, 2012. 3

(8) ‘외솔 최 현배 선생의 생애와 교육 사상’. 『교육광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가을호(제45).

이규호: 『말의 힘—언어철학—』. 제일출판사, 1968.

『한국의 교육 사상가(하)』. 교원복지신보사, 1991. 12.

『한글모 죽보기』.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결정문.

조선어학회 사건 고등법원 최종 판결문(1982년 부산 지검 문서보관창고에서 찾아, 동아일보 1982년 9월 6일자, 7일자에 이어 실은 우리말 옹검 글).

아제주, 『죽어가는 말을 살리기』: C. Hagège. Halt à la mort des langues. Paris, 2000.

렉스프레스: L'EXPRESS. 2012. 3. 28 - 4. 3.

내셔널 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 2012. 7.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1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제 발표 1 || 발표문

조선어학회 수난과 민족어 수호 운동 — 일제강점기의 한글 운동은 국권 회복 운동이었다 —

고영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omorph@hanmail.net

1. 들어가기

올해는 “조선어학회사건”, 우리 측의 관점에 서면 “조선어학회수난”¹⁾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어문 운동을 독립 운동으로 규정하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 33명을 체포하여 모진 고문을 가하고 옥고를 치르게 하였다. 사실 일제가 어문 운동을 독립 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한 제국 시대에는 어문 민족주의와 역사 민족주의의 두 사상적 지주가 우리의 국체(國體)를 떠받치고 있었다. 주시경은 국가 형성의 세 요소로 “구역, 인종, 언어”의 셋을 들고 그 중 언어, 곧 말과 글이 가장 으뜸되는 속성임을 주장하면서

1) 한글학회는 오래 동안 불러 오던 “조선어학회사건”을 그 50주년을 맞아 “조선어 학회 수난”이라고 고쳐 불렀다 (한글학회 1993: 머리말). 그 사이 “조선어학회”도 “조선 어학회”(〈조선의 어학 연구 모임〉의 뜻)로 불러 왔으나 역시 한글학회의 띄어쓰기와 같이 “조선어 학회”로 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선어”의 자리에 “국어”를 대치하면 “국어 학회”가 되는 것을 보면 한글학회의 처사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말과 우리글의 연구와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개화기에 주시경과 취향(趣向)을 같이하는 인사로는 이상재(李商在), 지식영(池錫永), 박태서(朴太緒)(출생순) 등을 꼽을 수 있다²⁾. 한편 신채호(申采浩)는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심 원천의 가장 좋은 요소는 “역사”라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워 이를 보급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신용하 1984가: 96-109, 1984나: 151-154). 박은식(朴殷植)도 같은 계열에 속한다(신용하 1984나: 11-38). 이들은 모두 애국 계몽 사상가로서 크게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들이다.

우리의 민족어를 발견하여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멀리는 5세기 초의 광개토태왕 비문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우리 선인들은 비문을 통하여 우리의 고유 지명을 한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험하여 보았으며 8세기 초의 신라의 유학자 설총(薛聰)은 이두(정확히는 “석독 구결”)을 창안하여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신라 공통어의 보급에 기여하였고(안병희 2001), 대각국사 의천(義天)은 화엄경 등을 우리말(석독 구결)로 번역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고려 공통어의 보급에 기여하였다(박종홍 1972: 154, 158). 우리 선인들이 한문 경전과 불경을 민족어로 번역한 것은 자주 독립 국가의 보람 [徵表]이 민족 어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5세기 중엽의 훈민정음은 풍토가 다르면 언어·문자가 다르게 마련이라는 “언어 풍토설”에 영향을 받아 창제되었다(고영근 1999/2001: 17-30). 한글의 창제가 계기가 되어 서울 중심의 공통어의 보급이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밖에도 민족어를 중시하는 흐름은 향가를 한문으로 번역한 고려 시대의 최행귀(崔行歸)와 조선 시대 구운몽의 작자인 김만중(金萬重)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김만중은 한문 문학은 허위이고 국문 문학만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하였다.

근대에 와서 국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보급에 앞장선 사람은 19세기 말의 서재필(徐載弼)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얼마 전 미국인 헐벗(Homer B. Hulbert)이 서재필보다 6년 먼저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士民必知)를 통하여 한글 경시의 태도를 비판하고 한글 전용의 시범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³⁾. 민족 어문

2) 개화기의 인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언어관, 정확히는 해석학적 언어 철학은 고영근 (1995/2008: 4-17)을 보라.

3) 이는 헐벗박사 기념사업회 회장인 김동진 님이 한글학회 창립 104돌 기념 특강에서 『한국인보다 한글과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벗’』를 발표함으로써 알려졌다. 발표 내용은 『한글 새소식』 481호 (2012. 9)에 실려 있다. 이 곳에는 헐벗이 배재 학당의 출판 기관인 삼문출판사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주시경을 만났다고 증언하였다.

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한글만 쓰는 방향의 어문 정책은 그 뒤의 서재필, 주시경을 거쳐 일제 강점기의 민족 어문학자에게 계승되어 마침내 민족어 규범이 완성되고 사전 편찬이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족 어문이 국가·사회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⁴⁾라는 사실은 바로 국권 회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립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뒤에 나옴).

개화기에 정립된 두 민족주의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문화 민족주의”라는 차원 높은 사상 체계로 발전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환산 이윤재(李允宰)(1888~1943)와 고루 이극로(李克魯)(1893~1978)였다. 먼저 위의 두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문화 민족주의의 반열(班列)에 들어서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 보기로 한다.

2. 환산과 고루, 그리고 문화 민족주의

환산은 서당 시절에 역사 공부에 흥미를 느꼈고 8세 때에는 서당 훈장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중국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쾌감을 느꼈다고 술회한 바 있다(고영근 1998: 162/2008: 183). 또 환산은 김해보통학교에 재학하던 20세 때 농무회를 조직하여 4개월 동안 명예 교사로서 국문과 역사를 가르친 바 있다. 환산의 야학은 황성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그 뒤 환산은 마산 창신학교에서 김윤경을 통하여 주시경을 알게 되었으며 조선어 학회의 기관지 『한글』을 창간하고 『한글맞춤법통일안』이 공포되었을 때에는 주시경을 다시 찾아 학문과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경 유학 시에는 단재 신채호와 교우하여 역사에 관심을 기울였고 『聖雄 李舜臣』 등 역사 관계의 저술을 많이 남겼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환산의 사상은 어문 민족주의와 역사 민족주의에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산의 사상은 김윤경이 쓴 환산 무덤의 비문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격혁신과 정치혁명을 위하여는 해외에서 흥사단에, 국내에 와서는 수양동우회에 관계하여 실력을 다하였고 국사를 통하여 조선의 넋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진단학회를

4)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 『발문』(跋文) (1906)에서는 말과 글을 사회 형성의 “기관”이라고 하였고 『國語文法』(1910)에서는 “性”으로 바꾸었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 (1995/2008: 9)를 보라.

일으키었고 우리말과 글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조선어학회의 중진이 되었던 것이다.

곧 환산은 민족주의자이면서 어문과 역사를 통합한 “문화 민족주의”를 표방하였던 것이다.⁵⁾

환산의 사상이 문화 민족주의로 무장되는 과정은 중국 유학 시에 국내에 보낸 몇 편의 논설을 통하여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다. 환산은 1922년부터 24년 사이에 북경대학에 머물면서 시사 주간지 『東明』과 시대일보에 중국의 문자 개혁 운동, 문학 운동, 연극사, 학계와 정계의 충돌 문제, 학생 운동, 여권 신장 운동,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 중국 의회의 역사, 몽골의 독립 운동, 중국의 민의(民意) 조사 등을 기고하여 왔다. 제목만 보아도 환산의 관심이 어문학과 역사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에까지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영근(1992/1998: 180, 2008: 203). 환산의 논설은 동양 사학자들에게 주목되어 그 내용의 정확성과 수준이 평가되기도 하였다⁶⁾. 환산은 중국 유학을 통하여 어문과 역사를 통합한 문화 민족주의를 세웠으며 귀국하여서는 조선어 학회에서 민족어 규범 제정에 헌신하였고 진단학회를 창립하여 민족의 혼을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앞의 김윤경의 비문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산이 안창호의 흥사단과 수양 동우회에 관여한 것은 환산을 개화기 이후 줄기찬 흐름을 형성하여 오던 “애국 계몽 사상가”의 반열(班列)에 넣을 수 있음을 웅변한다고 하겠다. 환산과 같이 조선어 학회 수난을 겪은 일석 이희승(李熙昇)(1957/일석 전집 6:)에서는 환산이 의리(義理)를 잘 알았다고 평가한 일이 있는데 이는 도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환산의 인격의 일면을 대변한 것이라 믿는다(고영근 1993/1998: 173/2008: 196). 환산은 대중교 신자로서 단군을 경모하였으며 자신의 호인 ‘환산’의 ‘환’을 ‘환인, 환웅’에서 따 올 정도로 자아에 대한 역사 인식이 투철하였다(이희승 1957, 고영근 1998: 176, 2008: 199). 개화기의 주시경, 박은식, 신채호가 모두 민족 종교인 대중교 신자였다.

고루 이극로 역시 환산과 같이 문화 민족주의를 지향하였다. 고루는 마산 창신 학교를 마치고 서간도로 가는 길에 평안북도 어느 고을에서 고추장이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알아 듣지 못하여 방언 분화에 회의를 느꼈으며 이때부터 주시경의 제자인 김진, 박건병, 김백주, 김두봉과 교우하면서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고루는 환인현에 있는 동창학교에서 역사학자 박은식과 대중

5) 환산의 사상 형성에 대하여는 고영근 (1992/1998: 161-207, 2008: 181-201)를 보라.

6) 민두기 (1987)에 환산의 보고에 대한 평가를 접할 수 있다.

교 시교사(施教師)이며 동창학교 교주인 윤세복(尹世復)을 만났으며 광개토대왕 능을 참배하고 비문을 읽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주시경 등을 따라 대중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의 이극로 와, 김두봉, 최현배, 이희승 같은 분들이다(고영근 2010: 255). 군사학을 배우러 러시아로 유학을 가던 고루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勃發)로 다시 환인현으로 돌아왔다. 고루는 윤세복을 다시 만나고 역사학자 신채호를 만났으며 그뒤 상해와 북경에서 역사학자 신채호와 교우하기도 하였다. 고루는 8세 때부터 10여세에 이르기까지 동네 서당에서 개최한 백일장에서 3년 연속으로 장원을 하여 그 시재(詩才)를 일찍부터 발휘한 바 있으며 백두산에 올라가서는 한시를 읊는가 하면 <白頭山>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남기기도 하였다(고영근 2006/2008: 242-45,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2010: 204-206). 이러한 행적은 조선어 학회 수난으로 감옥 생활을 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런 경력들이 모두 고루의 문화 민족주의 형성에 자양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시절에 싹이 튼 고루의 문화 민족주의는 독일 유학을 통하여 열매를 맺었다. 고루는 상해 동제대학 예과(Gymnasium)를 마치고 1922년에 베를린 대학(Friedrich-Wilhelm-Universität) 철학부⁷⁾에서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언어학을 전공하였다. 학위 논문은 『중국의 생사 공업』이었다. 베를린 대학 재학 시절에 고루는 조선어 강좌를 설치하여 강사를 겸하기도 하였는데 학생들로부터 “당신네 말은 어째서 철자법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사전 한 권도 없느냐”라는 편찬을 받기도 하였다⁸⁾. 고루는 상해의 김두봉으로부터 분할체 활자를 얻어 이광수의 <허생전>을 몇 장 인쇄하여 베를린대학 『동방어학부 연감』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은 고루는 파리와 베를린에서 우리말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 그 실험 사진이 발견되어 고루를 한국 최초의 실험 음성학자로 매김하는 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였다⁹⁾.

다음으로 고루의 역사 민족주의의 면면을 보기로 한다. 고루는 베를린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인 1924년에 『조선의 독립 운동과 일본의 침략 정책』을 독일어로 써서 전 유럽에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고루의 이력서나 고루의 글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단 『朝鮮近世史』란 한 권의 책이 있다고 그의 이력서에 적은 것 밖에는 달리 기록된 것이 없다(고영근 2006/2008: 252,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2010: 213). 이 책의 저자는 ‘Kolu Li’로 되어 있어 그것이 ‘이극로’를 가리킨

7) 독일의 철학부란 우리의 “문학부”에 해당한다.

8) 이극로의 베를린 대학에서의 조선어 강좌 설치에 자세한 내용은 조준희 (2008/2010: 321-55)를 보라.

9) 인터넷 창에서 ‘이극로’를 치면 바로 볼 수 있다.

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며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 종결서>¹⁰⁾에도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일제는 고루가 ‘Kolu Li’란 이름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고발한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¹¹⁾. 이는 일제를 속이기 위한 고루의 의도적인 연막 전술로 보인다. 내용은 우리 나라의 역사 개관을 비롯하여 ‘조선의 개화와 외세의 제도/1910년의 강점과 그 이후/1919년 3월의 독립 선언과 그 이후’로 편성되어 있다. 고루는 이 책자를 통하여 높은 문화를 누려 온 한 민족이 어떻게 처음으로 외세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으며 다시 독립을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 책자의 내용은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용규 2008/2010: 368-72).

독일 유학시의 고루 이극로의 독립 운동은 1927년 2월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약소 민족대회에 참석하여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었다. 고루는 당시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 유학하고 있던 황우일, 이의경, 김법린과, 허 현(당시 유럽 여행중이었음)을 이끌고 조선의 독립을 확보하고 총독 정치를 철폐함은 물론,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하라는 3개 조항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반영(反英) 문제만 상정되고 반일(反日) 문제는 채택되지 않았다(고영근 2006/2008: 258-59,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2010: 218-19). 이어 고루는 같은 해 5월에 『조선과 대일본 제국주의 독립 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책자를 간행하였다. 1924년의 책자가 정치적 침략을 다루었다면 1927년의 책자는 경제적·문화적 침략을 고발한 것이다¹²⁾. 앞의 책자에 대한 보완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¹³⁾. 고루 역시 이윤재와 같이 애국 계몽 사상가의 반열에 넣을 수 있다. 각종 수상류의 글을 보면 근검 저축, 조혼 폐습, 미신 타파를 비롯하여 공중 도덕, 음식 도덕, 양사원의 설립 등이 주장되어 있어 사회 사상가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의 우리의 국체를 떠받치고 있던 어문 민족주의와 역사 민족주의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윤재와 이극로에 의하여 한 차원 높은 “문화 민족주의”로 승화하였다. 이에 의하여 “한글 운동”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권 회복 운동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어 학회가 재정비되고 진

10) <예심 종결문>(1944)은 일찍이 이극로(1947)에서 ‘이극로’의 것만 발췌하여 국문으로 번역된 바 있다. 그 뒤 『이회승 전집』2: 420-39에 전문이 번역되어 있고 『나라사랑』 42(1982)에 번역이 시도된 일이 있으나 잘못 번역된 것도 있고 하여 원문에 충실한 새로운 번역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11) ‘Kolu Li’는 ‘이극로’의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적은 것인데 우여곡절 끝에 필자가 두 표기의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밝혀 둔다.

12) 이 책자에 대한 내용 소개는 고영근(2008: 309-311,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2010: 309-311)를 보라.

13) 1927년의 책자에 대한 평가는 박용규(2008/2010: 373)을 보라.

단학회가 창립된 것이 이를 웅변한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어문 정리 사업과 이로 말미암아 빚어진 조선어 학회의 수난의 역사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3. 조선어 학회의 활동과 수난

3.1. 이운재 · 이극로의 귀국과 조선어사전 편찬위원회 조직

환산 이운재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1924년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이어 일본에 유학하던 최현배와 정렬모가 귀국하였다. 환산은 귀국과 동시에 사상, 어문, 역사, 문학에 관한 글을 많이 썼다. 1928년에는 국학 전문 잡지 『한빛』을 창간하였으며 박승빈(朴勝彬)(1880-1943) 주관의 <계명 구락부>의 조선어사전 편찬에도 관여하였다(고영근 (2006/2008: 230-31). 고루 이극로는 1927년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영국, 프랑스, 미국 본토, 하와이, 일본을 거쳐 귀국하였다. 미국에서는 서재필과 이승만을 만났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국어가 민족의 생명-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¹⁴⁾. 만나는 사람마다 고루는 국어 운동에 헌신하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1929년 1월에 귀국한 고루는 4월에 상경하여 조선어 연구회에 입회하고 다시 전국을 주유(周遊)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외국과 비교하여 지상 낙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영근 2006/2008: 269).

환산이 귀국하던 1920년대 중반에는 조선어 연구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글날 (첫 이름은 “가갸날”)을 제정하고 기념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안확, 박승빈, 홍기문 등의 반주시경학과와,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총독부와 대결하면서 민족 어문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협력하였다. 1928년에는 조선어 연구회 회원들이 동인지 『한글』을 냄으로써 주시경이 1913년 조선언문회(속칭 <한글모>)에서 기약하였던 학회지가 탄생되는 쾌거 (快舉)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극로가 귀국하던 1929년은 조선총독부에서 언문 철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론을 수렴 중에 있었다. 실제로 이극로는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도중에 조선일보사의 언문 철자법에 대한 설문에 답하기도 하였다(고영근 2006/2008: 373074).

14) 이 글은 이극로연구소 소장인 박용규 박사가 발견하여 어학전문 국제학술지 『형태론』 13.1(2011)에 전재되기도 하였다.

3.2. 민족어 사전 편찬과 규범 정리

1929년 10월 30일에 서울의 수표동 조선 교육 협회 회관에서 108명의 발기로 <조선어 사전 편찬 위원회>가 결성되고 32인의 준비위원과 집행 위원 5명이 선임되었다. 준비위원에는 김법린, 박승빈, 방정환, 백낙준, 안재홍, 유억겸, 윤병호, 이광수, 이병기, 이유식, 이윤재, 이희승, 장지영, 정렬모, 정인보, 조만식, 주요한, 최두선, 최현배 등이었다, 어문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소설가와 시인, 아동 문학가, 언론인, 법률가, 교육자, 종교인들도 참여하였다. 반주시경 학파인 법률가 박승빈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범민족 지성계를 망라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집행 위원에는 이극로, 이중건, 최현배, 신명균의 4명이었으며 위원장에는 이극로가 선임되었다. 집행 위원은 모두 주시경 후계 학파였다 15). 이렇게 대규모의 단체를 조직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한 것은 민족 운동에서 어문 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조선어사전 편찬이 단순한 사전 편찬이라는 차원을 넘어 민족 운동의 한 고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 1930년 1월 6일, 편찬회는 사전 편찬의 일반 업무인 어휘 수집 및 주해와 편집에 관한 일을 맡고 조선어 연구회는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인 표맞춤법 제정과 표준어 사정 문제를 맡기로 하였다. 두 기구는 1936년에 맞춤법과 표준어 사정이 끝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두 기구의 출범은 “민족 어문 운동”이라는 한 목표물을 향하여 달리는 쌍두 마차에 비유할 수 있다.

1920년 후반에는 1912년에 공포되고 1921년에 부분적으로 수정한 언문 철자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東光』 편집부는 「우리글 表記例의 몇몇」이라는 10개 항의 설문지를 어문 학자들에게 돌려 여론을 조사하였다. 이곳의 통계는 뒤의 총독부 언문 철자법과 한글 맞춤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6). 조선 총독부는 당시의 여론을 존중하여 언문철자법을 형태·음소적(흔히 “표의적”) 원리에 가까운 철자법으로 개정하여 1930년 2월에 공포하였다. 개정 언문 철자법은 주시경 후계학파를 비롯한 민족 어문학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얻은 성과였다.

15) 한글학회(1971: 262-66)과 국립중앙박물관 (2008)에 사전 편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구성에 대하여 한글학회 (1971: 263-066)과 한글학회(2009: 527-33)는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는 발기인의 수가 108명인데 후자에는 107명으로 나와 있다. 전자에는 “준비위원” 33명과 “집행위원” 5명을 들었는데 후자에는 “발기인” 105명을 추가하고 “편찬회 위원” 21명, 상무위원 6명을 들었다. 상무위원에 ‘정인보’가 추가되었다. 부서의 명칭도 다르고 위원도 차이가 있다. 이곳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취하지마는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16) 고영근(1998: 43-48/2008: 352-58)에 당시의 사정이 논의되어 있다.

‘ㅎ’ 받침이 빠진 것만 제외하고는 주시경의 철자법 이론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해 4월부터 각급 학교 교과서에 적용되어 실용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영근(1998: 66, 2008: 381-89). 일찍이 김두봉은 그의 『조선말본』(1922)에서 “날적”(速記法)을 체계화한 일이 있는데 엄정우에 의하여 속기 문자에 대한 연구가 깊이를 더하였다(고영근 1998: 65-66, 2008: 328-331). 일찍이 주시경에 의하여 시도되고 김두봉과 최현배에 의하여 깊이를 더한 횡서(가로풀어쓰기)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였다(고영근 1998: 34, 2008: 341). 사실 형태 음소적 표기법을 취하면 받침의 수효가 늘어나서 활자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으므로 풀어서 가로쓰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것이다. 국제 공용어인 에스페란토의 보급에 열의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실 1920년대, 특히 후반에는 민족 어문의 중요 문제치고 쟁점화되고 연구의 주제가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민족 어문 연구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두의 ‘ㄹ, ㄴ’ 밝히기는 이때 이미 소수 의견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원동의 고려인 사회에서 그 나름의 철자법이 탄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계)봉우(桂奉瑀), 오창환(吳昌煥), 강채정(姜采程) 등의 어문학자들은 1929년부터 수차례의 회의 끝에 1930년에 『高麗文典』이라는 이름의 철자법을 제정하여 옛 소련 한인 사회의 언어 문자 생활을 통제하였다. 주로 김두봉의 문법 체계를 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킹 1991).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반도와 연해주의 철자법 제정은 수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쳐 확정되었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고려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國字”와 “漢字”의 두 갈래를 나누었다. “조선 문자” 내지 “諺文”이나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國字”라고 쓴 것은 『高麗文典』의 ‘高麗’와 함께 정신적으로는 국권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교민 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당시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가 독립 운동가들의 망명지였다는 사실과도 무관한 것 같지 않다(고영근 1996/1998: 110/2008: 435). 1930년대 후반에는 고려인들이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는데 『고려문전』의 언어 규범이 그대로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어 연구회는 1930년에 12월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희승 등 12명에게 원안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1931년 1월에는 조선 어문의 연구와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학회의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바꾸어 표준화를 위한 본격적 기초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32년부터는 기관지

『한글』을 내기 시작하였다. 편집 책임자는 이윤재였다. 그러니까 사전 편찬은 이극로가 맡고 『한글』편집은 이윤재가 맡은 것이다. 이극로는 사전 편찬의 임무를 맡았으나 맞춤법 제정에 직접 관련되는 기초 연구와 그 원안 작성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조선어 학회의 새로운 발족은 박승빈 중심의 <조선어학 연구회>라는 새로운 학술 단체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승빈은 이미 1920년대 초부터 계명 구락부를 중심으로 신생활 운동을 전개하면서 주시경 학파와 대립되는 철자법을 만들어 수차례 도전한 일이 있는데(고영근 1998: 9-17/2008: 314-23), 1931년 12월에는 동조자를 규합하여 <조선어학 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조선어 학회는 한편으로는 철자법 완성을 위한 기초 연구¹⁷⁾에 몰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승빈 학파의 조선어학 연구회를 비롯하여 안확, 홍기문, 권영달 등과 논전을 벌였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이론적 우위성을 확보하여 1933년 10월에 총론 3항, 각론 7장, 총 65항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맞춤법 통일안과 총독부의 개정 언문철자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밝혀 놓을 것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면상으로 보면 개정 언문 철자법과 내용이 비슷하여 통일안이 언문 철자법에서 상당 부분을 옮겨 왔다고 볼 수 있으나¹⁸⁾,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은 단견(短見)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 언문 철자법이 주시경 학파의 대거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그 결과가 비슷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통일안은 결코 개정 언문철자법을 부족한 점을 시정하려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東光』 편집부는 설문지를 통하여 언문 철자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는 개정 언문철자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29년에 이미 사전 편찬과 함께 철자법, 문법, 가로풀어쓰기, 한자 제한, 외국어 음 표기의 제정을 계획해 놓았다. 193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 1933년 10월에 드디어 맞춤법을 공포하였다. 총독부의 개정 철자법이 통일안 제정을 가속화시킨 요인은 될 수 있어도 그것만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혼란스런 철자법의 규범을 바르게 세우고 사전 편찬이라는 민족적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통일안이 제정·공포되었다는 것을 밝혀 둔다(고영근 1998: 97-101, 2008: 412-17).

이곳에서 덧붙여 둘 것은 박승빈 학파에 속하였던 양주동(梁柱東)의 공적이다.

17) 당시 기초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새 받침의 설정 문제를 비롯하여 6개 주제에 걸쳐 있었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 (1998: 82/2008: 396)를 보라.

18) 이익섭 (1992: 368)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

양주동은 신라 향가 <원왕생가>에 대한 일본 학자 오구라(小昌進平)의 해독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당시의 조고계(操觚界)의 화제가 되었다. 양주동은 이것을 발전시켜 향가를 전면적으로 해독한 『古歌研究』(1942)를 상재하고 해방 후에는 『여요전주』(1947)를 간행하여 어문학을 통합 학문으로 정착시켰다(고영근 2003/2010: 311-52). 실제로 양주동은 해방 전에 박승빈 주재의 『正音』에 여러 편의 논문을 기고하였다. 유응호(柳應浩)는 해방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 주임 교수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미 1930년대 중반에 독일의 언어학자 파울(H. Paul)의 『언어사 원리』를 부분 번역하여 이 땅에 소장문법학파의 이론을 소개하고 독일의 역사 언어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고영근 1989/2001: 247-63). 실제로 『正音』지를 자세히 검토하면 『한글』보다 오히려 우수한 기고가 많다. 더욱이 최근 들어 박승빈의 철자법이 주시경 철자법으로 소급하는 현행 맞춤법보다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신창순 1997/2003: 393-447), 역사의 되풀이됨을 새삼 느끼게 한다. 그 사이 주시경 학파에 의하여 거의 매장되다시피 한 박승빈에 대한 평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말 사정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평가는 사정상 보류하기로 한다. 단 여기서 특기할 것은 당시의 언론 기관들은 고루를 표준말 사정의 “으뜸되는 수훈자(殊勳者)”라고 칭송해 마지 않았고 ‘우리 문화를 탐마하는 연구실 내의 명장들’이라는 기사에서 ‘이석신(식품), 함화진(아악), 손진태(민속학), 백남운(사회경제사), 양주동(향가), 정태현(식물학)’의 6명과 함께 조선어 학회의 이극로를 첫 머리로 들었다(고영근 2006/2008: 278-79).

맞춤법의 제정과 표준말의 사정 등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이 끝나자 1936년에는 이원화되어 있었던 두 사업이 일원화되었다. 사실 이운재는 계명 구락부 사전 편찬에 관여하고 있었던 1927년 상해로 가서 김두봉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원고를 건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다. 당시 우리말 사전 편찬은 광문회의 사전 편찬을 인수한 계명 구락부와 이상춘 등에 의해서도 편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극로는 여러 기관의 사전 원고를 인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이상춘이 제공한 10만 여의 카드를 가지고 편찬에 착수하였다 19).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은 주로 이극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사전 편찬은 1936년에 이우식을 중심으로 하는 비밀 후원회가 조직되어 종로구 화동 129번지 있던 이극로 사저에서 시작되었다²⁰⁾. 당시의 편찬 환경에

19) 김민수 (1983/1986: 310-355)에 우리 나라 사전 편찬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대하여 고루의 종손자인 이종무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회관의 아래층은 고루 박사의 살림집이고 어학회의 사무실은 위층인데 삐끄덕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면 들머리 작은 방을 지나 큰방이 편찬실이 된다. 창가로 남향하여 왼쪽에서 고루 박사, 이중화, 한징, 정인승, 권덕규, 정태진, 북향하여 권승욱 선생들께서 나무 책상을 놓고 카드 상자에서 연신 어휘 카드를 꺼내어 사전 원고를 정리하기에 바쁘고 … 청년이시던 이석린 선생이 무슨 출판물을 발송하는지 집무에 열중하시고 … (이종무 1993: 144쪽)

1939년에는 완료된 1/3 가량의 원고를 총독부 도서관에 제출하여 많은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하여 출판 허가를 받아 내었다. 편집 자금을 시달리던 학회는 이우식의 특별 성금으로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어 1942년부터 조판이 시작되었다²¹⁾. 고루가 사전 편찬에 바친 열성은 『朝光』 기자의 “熱, 熱 조선의 문화를 끝없이 사랑하는 피 끓는 熱”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고영근 2006/2008: 282).

3.3. 조선어 학회의 수난의 발단과 개요

일본은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워 만주를 제2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37년에는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조작하여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확장되는 일본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였다. 내선 일체(內鮮一體)라는 동화 정책을 내세운 일제는 1930년대 후반부터 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철폐하고 국어(일본어) 사용(1938), 창씨 개명(1939)을 강요하였으며 드디어 1941년에는 진주만을 폭격하여 테평양 전쟁을 일으켰다²²⁾. 일제가 날조한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 곧 “조선어학회 수난”은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

수난의 발단은 1942년 여름 일제가 박병엽(朴炳燁)의 질녀 박영옥(朴英玉)의 일기장에서 “國語를 常用하는 자를 處罰하였다”라는 구절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

20) 건재 전집 (1997: 59-61), 이석린 (1993)에 저간의 사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

21) 건재 전집 (1997: 59-61)에 근거하였다. 고루의 사전 편찬에 관한 내용은 고영근 (2006/ 2008: 276-82)를 보라.

22) 일석 전집 2 (2000), 353쪽에 근거하였다. 일석 이희승은 『朝鮮語學會事件 回想錄』을 『思想界』 7.7(1959)부터 9.6 (1961)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연재하였는데 이는 일석 전집 2 (2000)에 전재되어 있다.

었다. 박병엽은 일제에 비협조적인 지식인이었으며 박영옥은 당시 함흥 영생고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위 구절의 “國語”란 일본어를 뜻하는 것으로서 학교 당국이 처벌하였을 것이니 그렇다면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것이 된다.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의 주구 노릇을 하였고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야스다(安田念, 본명 安正默)에게 일기장이 발견되어 이로부터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²³). 9년 동안 영생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정태진(丁泰鎭)은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든지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을 물리치던 역사 이야기를 자주 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정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 박영옥의 일기장이 도화선이 되어 정태진은 홍원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정태진은 조선어 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100여종의 조목을 열거한 허위 자백서를 썼다. 그 해 10월 1일에 이극로와 정태진을 비롯하여 이중화, 장지영, 최현배, 한 징, 이운재, 이희승, 정인승, 권승욱, 이석린 등 11명의 조선어학회 간부가 모두 검거되었으며 차례로 당시 우리 지성계를 대표하던 이우식, 김법린 등 22명이 검거되었다(일석 전집 2: 480-82). 일제는 비행기 태우기, 물먹이기, 난장질하기 등 갖가지 고문을 가하면서 조선어학회 사건을 범법 행위로 조작하였다(같은 책 484쪽). 피의자 가운데서 이운재, 한 징 두 분은 모진 고문으로 옥사하는 불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필자는 조선어 학회 수난이 일어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바 있거니와 전세가 불리한 당시의 일제로서는 불령 선인(不逞鮮人)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선 일체”의 정책과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인들을 검거하고 최후로 6년에서 2년의 징역을 언도하였다(일석 전집 2, 481쪽). 당시의 예심 종결 결정서를 보면 일제는 조선어 학회의 어문 운동을 민족 운동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일석 전집 2, 418쪽). 사전 편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출판까지 허가를 내 준 조선 총독부가 이와 같이 반국가적인 죄목을 씌운 것은 사전 편찬을 민족 운동의 한 고리로 해석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피의자들은 살아 남기 위하여 민족 운동이 아니라고 변명하였지만 주시경의 어문 민족주의와 일제 강점기의 문화 민족주의와 관련시키면 이들의 어문 운동, 곧 한글 운동은 독립운동, 다시 말하면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글의 부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의 한글 운동은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피의자 중 6년의 언도를 받은 고루 이극로의 한시 <獄中吟>과 기소 유예로 석

23) 일석 전집 2, 475쪽을 보면 박양의 일기장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방된 가람 이병기의 시조 「洪原低調」의 한 수를 인용함으로써 민족 지식인들의 옥중 생활의 일면을 보이고자 한다.

忍苦編辭典 (고생을 참으며 사전을 편찬하여)

士道盡義務 (선비의 도리로 의무를 다하려 하였다)

其人犧牲一時事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한 때의 일이고)

正義眞理永遠生 (진리와 정의는 영원히 살 것이로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537쪽>

이쭈시개 바늘 삼아 해진 옷을 잃어 매고

밥풀을 손에 이겨 단추를 만들어 달고

따뜻한 별을 향하여 이 사냥을 하도다

<한글학회 편, 얼음장 밑에도 물은 흘러. 140쪽>

4. 마무리

이상과 같이 필자는 이운재와 이극로에 의하여 창도된 문화 민족주의에 힘입어 민족어 규범이 제정되고 민족어 사전이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한글 운동의 최종 성과인 민족어 사전은 출판되지 못하고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하였다. 편찬원을 비롯하여 당시의 우리의 조고계를 대표하던 지식인들은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고 고문을 이기지 못한 두 어문학자는 옥중에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출판이 중단되었던 민족어 사전은 그 원고가 요행히 보존되어 해방 뒤 1947년에 출판이 시작되었으나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7년에 6권으로 완간되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규범과 사전은 남북이 갈라지고 몇 차례의 수정·보완 작업이 있었으나 모두 6권의 『우리말 큰사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선열들이 피흘려 수호하고 발전시킨 덕택으로 해방이 되자 바로 민족어 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어 규범과 사전 편찬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다면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이 바른 궤도를 달릴 수 있었겠는가! 이런 선열들의 피어린 민족어 수호운동과는 아랑곳 없이 현재의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어느 대권 후

보의 주위에서 회자(膾炙)되는 ‘다운 계약서’란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휘인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알기 쉬운 우리말을 개발할 수 있다. 신문, 인터넷, 거리의 광고와 주택 단지의 이름은 모두 영어와 영자(英字)로 도배를 하고 있다. 한자는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것이 국제화로 가는 길인가.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모토를 잊고 있는가.

고루 이극로는 1948년 김 구의 남북 협상때 민간 대표로 북행하여 그곳에 남아 북한의 어문 정책을 기획하고 특히 “문화어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문화어 운동은 이념적인 요소만 제외하고는 남한의 “국어 순화 운동”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말에 뿌리를 둔 어휘를 창조하고 표현을 쉽게 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민족어 발전 철학²⁴⁾을 등에 업고 민족어의 어휘와 표현을 쉽게 다듬어 나가는 방향의 어문 정책을 수립하여 남북 공동의 “민족어 발전 운동”을 전개한다면 남북의 언어 통일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동시에 민족의 화합도 쉽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문화 민족주의를 등에 업은 조선어 학회의 “민족어 수호 운동”이 바로 독립을 쟁취하였다는 것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수년 전부터 남북 합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 사전』은 민족어 발전 운동을 다그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2012. 10. 2, 중추절 다음날, 분당 연락재에서 붓을 놓고 개천절 날에 여러분의 견해를 종합하여 다시 다듬다. 10. 3)²⁵⁾

㉞ 참고 논저

- 건재 전집 (1987), 건재 정인승 전집 6, 박이정.
 고영근 (1992), 이운재의 사상 체계, 周時經學報 12.
 고영근 (1998), 한국 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고영근 (2001), 한국의 언어 연구, 역락.
 고영근 (2008),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24) 민족어 발전 철학에 대하여는 고영근 (2008: 55)를 보라.

25) 일부 철자, 띄어쓰기 등은 현행 어문 규정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필자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 고영근 (2010), 민족 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8), 한글학자들의 겨레사랑-조선어학회 사건 그리고 조선말 큰사전, 국립중앙박물관.
- 김민수 (1986), 周時經 研究 (증보판), 탑출판사.
- 남풍현 (1989), 高麗時代의 言語 文字觀, 周時經學報 3.
- 남풍현 (2009), 古代國語의 研究, 시간의 물레.
- 민두기 (1987), 자료 해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논집 11.
- 박용규 (1910), 1920년대의 이극로의 독립운동,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1910)에 실림.
- 박종홍 (1972), 韓國思想史연구
- 신용하 (1884가),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 신용하 (1984나), 韓國現代社會思想, 지식산업사.
- 안병희 (2001), 문자사에서 본 薛聰의 位置, 새국어생활 11.3 (안병희 2009: 13-28에 실림)
- 안병희 (2009), 국어연구와 국어정책, 월인.
- 이극로 (1947), 苦鬪 四十年, 을유문화사.
-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1910) 이극로의 우리말글 연구와 민족 운동, 선인.
- 이석린 (1993), 화동 시절의 이런 일 저런 일, 한글학회 편(1993)에 실림.
- 이익섭 (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종무 (1993), 고루 이극로 박사에 대한 회상, 한글학회 편(1993)에 실림.
- 이희승 (1957), 人間 李允宰, 新太陽 8 (일석 전집 6에 실림).
- 일석 전집 2 (2000), 一石 李熙昇 全集 2,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일석 전집 6 (200), 一石 李熙昇 全集 6,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동일 (2005), 한국문학통사 5(제4판), 지식산업사.
- 조준희 (2010), 유럽에서 이극로의 조선어 강좌와 민족운동,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1910)에 실림.
- 킹 (R. King) (1991), A Soviet Korean Grammar from 1930, 한국말교육 3.
- 한글학회 (1971), 한글학회 50년사.
- 한글학회 편 (1993), 얼음장 밑에도 물은 흘러.
- 한글학회 (2009), 한글학회 100년사.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1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제 발표 1 || 발표문

이인 변호사의 항일 투쟁과 조선어학회 사건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han@snu.ac.kr

이 글은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허헌·김병로·이인과 항일 재판투쟁, 경인문화사, 2012, 573~607면을 전재(全載)하면서 일부를 보완한 것입니다. 이 글의 일부를 인용하려면 본서의 해당 부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제 검거된 33인의 조선어학회 회원

1942년 12월 23일 이인 변호사(1896~1979)는 돌연 경성에서 검거되었다.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 관여한 혐의에서였다. 그 날 검거된 인원은 총 8인이었는데, 이는 조선어학회사건 관련자 중 제4차 검거에 해당한다. 제1차로는 1942년 9월 정태진[丁泰鎭]의 검거로부터 시작하여, 10월 1일 이극로[李克魯], 장지영[張志暎], 한징[韓澄], 이윤재[李允宰], 김윤경[金允經], 최현배[崔鉉培], 이희승[李熙昇], 이중화[李仲和] 등 조선어학회의 주역들이 검거되었다. 10월 21일 이우식[李祐植] 등 7인이 검거되었다. 이렇게 정태진으로부터 사건의 단서를 만들고, 이극로 등으로부터 본격적인 취조를 했으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제4차에 이르러서는 조선어학회를 외

부로부터 지원했던 인사들까지 모조리 검거한 것이다.

한글학자가 아닌 인사 중에서 특이한 것은 이인 변호사이다. 그는 원래 다방면의 일에 관계하여 살았는데, 아마도 “민족의 일원으로 책무를 다해야겠다는 신념”의 발로에서였다¹⁾. 어느 잡지에서 비평한 대로 이인은 1930년대에 그야말로 “선의의 호사객”이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인이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조선어학회에의 관여였다.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의 말과 글과 일을 “크르”로 지칭하여,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전편찬작업, 한글맞춤법통일안, 외래어표기법 등을 차근차근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 이인은 조선어학회의 자매기관이라 할만한 ‘조선기념도서출판관[朝鮮紀念圖書出版館]’을 맡기하는데 앞장을 섰다. 고래로 우리나라는 허례를 숭상하여 관혼상제에 지나친 비용을 쓰고 있으므로, 이것을 간소화하여 절약된 비용으로 민족적인 기념이 될 만한 훌륭한 저작물을 간행하자는 취지였다.²⁾ 그러한 운동은 허례허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학자들의 좋은 글들이 빛을 볼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기념도서출판관은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김윤경의 ‘조선문자 급 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를 출판하고, 동화집 ‘날아다니는 사람’(노양근 저)을 출판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인은 개인적으로, 양친의 회갑을 위해 마련했던 비용을 내어 이 도서출판의 밑거름이 되게 했다.

또한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도서를 모을 수 있도록 양사관[養士館]을 설립하자는 발기를 하여 후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일제는 양사관 설립 인가를 해 주지 않아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다.³⁾

이 정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문제시되는 이인의 조선어학회 관련 행적이었다. 도저히 문제가 될 수 없는 사건도, 일제말에는 심각한 형사문제로 비화되곤 했는데, 이 사건은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어학회의 모든 활동은 공개적으로 해왔고, 모든 출판물은 총독부의 검열을 받았다. 개개인들의 경력으로 볼 때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사들도 적지 않으나, 일단 조선어학회의 회원이 되고 간부가 된 학자들은 독립운동과 거리를 유지한 채, 오직 한글의 학술화와 대중화에 전력을 쏟는 게 하나의 불문의 행동수칙이었다. 그들은 한글의 학술화와 대중화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1) 이인,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출판부, 1974, 119면.

2) 이희승, “조선어학회사건,” 일석 이희승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76~477면.

3) 이인, 반세기의 증언, 121~122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러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가 될 만한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던 것이다. 때문에 일제로서도, 이들의 현재적 잠재적 영향력에 주목하면서도, 그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다.⁴⁾ 적어도 경성의 경찰부에서는 조선어학회의 동태를 감시하면서도, 그것은 하나의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성격 짓고 있었던 것이다.

꼬투리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왔다. 일제는 1938년부터 ‘조선어교육의 폐지’와 ‘일어 상용’을 강요하였다. 1940년에 이르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조선어로 내는 민족지 계열의 신문을 폐간시켰다. 이들 신문은 일제말에 이르면 일제의 황민화시책에 최소한도라도 부응하는 시늉을 내어 명맥을 유지해왔으나, 일제는 이러한 소극적 협력도 무용하다고 보고 내선일체[內鮮一體]와 국민총동원의 전시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함경남도의 흥원경찰서는 영생고등여학교[威興永生高等女學校]의 어느 여학생의 일기장에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를 처벌하였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이 때 국어는 일본어이니 일본어 상용을 처벌하였다면 반국가행위가 아닌가 하고 추궁하고 어느 선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나 하고 추궁했다. 영생고녀의 정태진, 김학준[金學俊] 두 선생이 그들의 축수에 걸려들었다. 정태진은 당시 가정형편으로 영생여학교를 그만두고, 경성에 와서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의 편집을 맡아보고 있었다.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을 연행한 흥원경찰서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온갖 고문과 악형을 가하였다. 결국 강요에 못 이겨 정태진은 그들의 요구대로 자백서를 썼다.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자의 단체라는 조목을 포함하여, 대소 1백여 종의 조목을 열거한 허위자백서를 쓴 것이다. 한달 동안의 혹독한 문초 끝에 얻은 그 허위자백을 토대로, 흥원경찰서는 조선어학회의 간부와 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선 것이다. 조선어학회 관련의 피고인은 모두 33명이고, 그 중 구속된 인사만 모두 29인이었다.⁵⁾

4) 다음은 정인승의 회고이다. “조선어학회 회원은 항상 요시찰 인물로 왜경의 날카로운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최대한 조선총독부에 협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애써온 것도 사실이었다. 강제로 실시되던 신사참배 국방헌금 근로봉사도 나오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나갔다...(한상룡, 최린 같은) 친일거두와 경찰관계 그리고 총독부에 대한 교섭으로 일본놈들은 우리 한글학자들이 사전편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고도 “저희들이 해도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고 그냥 물어두고 있던 실정이었다.” 정인승, “조선어학회사건,” 한말연구학회, 건재 정인승 전집 6, 박이정, 1997, 13~14면.

5) 이회승, 앞의 책, 481면.

2. 고문과 조작, 그리고 예심의 지연

조선어학회 관련자들은 모두 처음부터 혹독한 고문 속에 문초를 당했다. 그 이유는 치안유지법 위반의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어학회 활동은 모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학술활동을 한 것이며, ‘조선독립’을 표방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흥원경찰서는,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지닌 지식층들을 일망타진식으로 끌어온 만큼 실적을 내야 했다. 조선어학회의 진상을 알만한 경성 쪽의 경찰도 적극적인 제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함경도 경찰의 충성경쟁에 대해 다른 곳에서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다.⁶⁾

증거가 없을수록 고문은 가혹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곧바로 증거를 조작해낼 수 없었다. 처음엔 처벌할 사실이 아예 없으므로, 피의자의 심문조서나 자술서를 쓸 수 없었다. 4개월간, 조서도 없이 자술서도 없이, 그저 혹독한 고문을 자행했다. 4개월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얻어낸 피의자들의 자백서에도 맹점이 있었다. 자백서의 내용, 즉 조선어학회의 각종 활동 그 자체에서 범법의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고,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의 내용은 제각각이어서 그 사이에 일치하는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⁷⁾ 그리하여 짜맞추기 위한 고문과 고문이 계속 이어졌다.

조선어학회 관련자들은 지식인으로서 자신들이 받은 고문에 대해 생생한 기록을 남겨놓았다.⁸⁾ 고문받은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서 이희승의 회고(482~483면)를 인용한다.

1.1.1.1.

1.1.1.2. 첫째, 비행기 태우기다. 이것은 두 팔을 등 뒤로 젖혀서 두 손목을 한 데 묶어 허리와 함께 동여놓고, 두 팔과 등허리 새로 목총을 가로질러 꿰어 넣은 다음, 목총의 양 끝에 밧줄을 매어 천정에 달아놓는 것이다. 처음에는 짚토매 같은 것을 밧줄에 끼어 사람을 천정에 매어 달아놓고 밧줄 저며 디디게 한다. 이렇게 하면 비록 밧줄이 약간 꺾여 있을지라도 체중으로 인하여 겨드랑 아래 꿰어놓은 목총이 위로 치켜지기 때문에, 두 어깨는 뒤로 뒤틀려서 빠개질 지경으로 된다. 이렇게 하여도 저희 요구대로

6) 정인승, 앞의 책, 21면.

7) 이희승, 앞의 책, 481면.

순순히 불지 않으면, 쥘토매를 발밑에서 빼어버린다. 그러면 사람은 아주 공중에 떠서 매달리게 되고, 체중 때문에 어깨는 으스러질 지경이 되어 나중에는 고개가 처지고 눈이 감기고 혀를 빼어물게 된다. 이 지경이 되면 정신은 혼미하여지고, 맥박과 호흡은 점점 약해져서, 가사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문을 그들은 공중전[空中戰]이라 부른다.

- 1.1.1.3. 둘째, 물먹이기다. 옥설이나 매로 피의자들을 들볶다가 저희 비위를 거슬르게 되면 목욕실로 끌고 가서 기다란 걸상에 사람을 반듯이 짓혀 놓는다. 그러나 고개만은 걸상 끝에서 아래로 처지도록 하여놓고, 사람을 걸상과 함께 단단히 묶어서 졸라매되 두 팔을 뒤로 짓혀 걸상 밑에서 맞잡아 매어 놓는다. 그리고는 주전자나 바깥으로 얼굴에다 물을 부으면 물은 저절로 콧구멍을 통하여 기관으로, 폐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숨이 막히므로 그 물을 뱉 수 있는 대로 콧구멍으로 삼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물이 숨통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노릇을 한참 계속하면 물을 먹어서 배가 통통하게 일어나고, 기관으로도 물이 들어가 숨이 막히고 마침내 까무러치고 만다. 이상은 고문의 대충을 설명한 데 불과한 것으로, 이를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 고문을 그들은 해전[海戰]이라 부른다.
- 1.1.1.4. 셋째 난장질하기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서, 피의자가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주먹질 발길질은 물론, 시나이(竹刀)나 목총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둘러대는 것이다. 때로는 부서진 걸상이나 탁상의 다리를 뽑아서 사매질을 한다. 이러한 고문을 육전[陸戰]이란 부른다. ...
- 1.1.1.5.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엄동설한에 빨가벗겨 네 공상으로 앞드려 있게 하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5분 10분을 견디기 어려운 노릇인데 회초리로 불기나 등허리나 넓적다리를 후려갈기기도 하고, 얼음냉수를 등굽에 내려붓기도 한다.
- 1.1.1.6.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도 많았다. 가령 얼굴의 반면에 먹칠을 하고, 등 에다가 “나는 허언자[虛言者]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동지들 앞으로 돌아다니며 “나는 허언자니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시키는 일이라든지, 매를 들고 같은 동지를 두드려가며 문초를 받으라고 시키는 일 등은 그들이 걸핏하면 쓰는 수법이었다.

이인 변호사에 대한 취급은 다소 특이했다. 경성에서 연행된 다른 인사들이 흥

8) 예컨대 정인승, 앞의 책, 23면.

원경찰서로 끌려갔는데, 이인만 함흥경찰서로 유치되었다. 법률을 아는 변호사, 더욱이 이인 같은 항일변호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면 무슨 말썽이나 까다로운 일을 빚어낼지 모른다는 판단으로 그만 함흥에 격리시킨 것이다.⁹⁾ 이인에 따르면, 함흥경찰서 유치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회고한다. 고문에서는 이인의 경우에도 전혀 예외를 두지 않았다. 다음은 이인의 회고이다.

내가 당한 고문은 일구난설[一口難說]인데 그 중에서 견디기 어렵기는 아사가제라는 것과 비행기 태우기가 있었다. 사지를 묶은 사이로 목총을 가로질러 꿰넣은 다음 목총 양끝을 천장에 매달아놓아 비틀고 저며들게 하는 것이 비행기타기요. 두 다리를 뺀 채 앉혀놓고 목총을 두 다리 사이에 넣어 비틀어대는 것이 아사가제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 중에 더욱 괴로운 것이 아사가제이니 나는 이로 인해 평생 보행이 부자유스러울만큼 다리를 상했던 것이다.¹⁰⁾

인용한 이회승의 고문 내용과 이인의 고문을 보면 일제하에서 경찰의 고문은 상례적인 폭행 이외에 공중전이라고 하는 비행기태우기, 해전이라고 하는 물고문, 그리고 난장질이나 아사가제와 같은 육전이 무차별적으로 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고문과 자술 강요 등을 통해 흥원경찰서는 하나의 사건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조선어학회가 표면적으로는 학술단체를 가장하고, 실은 민중의 봉기를 유발하여 독립을 전취하려는 비밀결사라고 우겨댄 것이다. 조선어사전 편찬 작업은 민족정신을 양양시켜 독립을 전취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사전의 수많은 어휘 중에서 태극기, 단군, 무궁화 등에 대한 주석이 불온하다고 하여 반국가적이라고 했으며, 경성에 대한 주석이 동경에 대한 것보다 몇 배나 길고 자세하니 반국가적이라고 덮어씌웠다.

개인적으로는 조선어학회 활동 이전의 이극로의 애국행적을 문제삼았으며, 이윤재[李允宰]가 상해에 있는 원로 한글학자 김두봉[金斗奉]과 만나 사전편찬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을 갖고 상해임시정부와 조선어학회를 연관시키려는 구실을 찾았다. 경찰이 조서작성을 완료한 것은 1943년 3월 15일에 이르러서였고, 조선어학회 관련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나 사건은 한없이 미루어졌고, 5개월동안 검사의 취조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서 유치장을 한시바삐 벗어나고픈 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

9) 이인, 반세기의 증언, 127면.

10) 이인, 반세기의 증언, 130면.

리, 뜻밖에도 검사(靑柳五郎)는 경찰서로 출장을 와서 신문을 강행하였다. 검사에 게만은 진실을 호소하고 싶었던 피의자들은 뜻밖의 장면에 난감하게 되었다. 다음은 검사의 신문장면이다.

(검사의) 문초장소는 바로 경찰이 문초를 하던 흥원경찰서의 무덕전이었고, 좌석을 U자형으로 만들고 중앙 바깥자리에 검사가 자리잡고 그 옆에는 서기가 앉았다. 그리고 좌우에는 함경남도 경찰부에서 온 형사 전원과 흥원경찰서의 형사 대부분이 주욱 늘어 앉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일 경찰조서에 있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날 저녁에 형사들에게 끌려나가, 검사가 보지 않은 자리에서 다시 고문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다.¹¹⁾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서와 다른 내용을 말하기란 불가능했다.¹²⁾ 경찰이 범죄 사실을 조작한 장본인이라면 검사는 그 공모자였다.¹³⁾ 검사는 1943년 9월 18일 신문을 마치고 16명을 예심에 회부하고, 12명을 기소유예하였다.¹⁴⁾ 기소유예자도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았다. 심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핑계로 함흥형무소에 이감시켰던 것이다. 곧이어 전원이 함흥형무소로 이감되었다. 형무소에서는 혹심한 추위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모두들 고생했고,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중병이 걸린 상태에서 이러한 극한상황을 맞이해야 했던 인사들 가운데 마침내 이운재(1943년 12월 8일)와 한징(1944년 2월 22일)이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하는 비극이 있었다.



신속한 재판을 열망하는 옥중의 피의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심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체험자들이 느끼는 바에 따르면, “예심 연기의 표면상 이유는 사건을 신중히 처리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인즉 피의자들을 장기간 구속하여 골탕을 먹이자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검사가 구류기간이 있는 것과 달리, 예심은 몇 해든지 질질 끌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예심을 핑계로 시일을 무작정 끌어서 정식재판에 넘어갈 때까지 감옥에서 몇 년

11) 이회승, 앞의 책, 485~486면.

12) 피의자는 “마치 적군 장졸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회승, 앞의 책, 402면)

13) 이회승, 앞의 책, 486면; 정인승, 앞의 책, 64면

14) 예심회부자 명단은 이극로, 이운재, 최현배, 이회승, 정인승, 정태진, 장지영, 이중화, 김법린[金法麟], 이인, 김도연[金度演], 이우식, 한징, 정열모[鄭烈模], 장현식[張鉉植], 김양수 등 16인. 기소유예자는 김윤경, 이만규[李萬珪], 이강래[李康來], 김선기[金善琪], 정인섭[鄭寅燮], 이병기[李秉岐], 이은상[李殷相], 서민호, 이석린[李錫麟], 권승욱[權承昱], 서승효[徐承孝], 윤병호[尹炳浩] 등 12인.

을 고생시키는 일이 허다하였다. … 그리하여 기소된 16명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옥중에서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¹⁵⁾

예심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가. 물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심판사가 나타나 한사람씩 불러내어 문초를 시작하였다. 우리 동지들은 대개 경찰서와 검사가 작성한 무지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그것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부인할 적마다 예심판사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서나 검사에게 모두 시인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딴 소리냐”고 몰아대는 것이었다.¹⁶⁾

예심이 시작된 것은 1944년 2월부터 시작하여 1944년 9월 30일에 이르러 마침내 예심이 종결되었다. 관계자들이 검거된 때로부터 거의 만 2년에 가까운 기간이 이르러 예심절차까지 종결된 것이다. 예심회부자 16인 중 사망자(이운재, 한징)를 제외하고 2인(장지영, 정열모)이 면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사는 모두 12인이었다.

3. 예심종결 결정문을 통해 본 이인 변호사의 행적과 피의사실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 재판자료 중에서 제1심 판결문의 소재는 알 길이 없다. 제1심판결문의 내용은 예심판사의 예심종결결정문¹⁷⁾과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예심종결결정문 중에서, 이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그 첫 부분은 ‘변호사 이인’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피고인 이인은…1923년 4월이래 경성부 청진정[淸進町]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 자로서 1918년 여름부터 조선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바 그 후 변호사로서 각종 사상사건에 관여하기에 이르러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그 독립을 주장하는 사건 관계자의 사상에 공명하여 1930년 중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 피

15) 이희승, 앞의 책, 487면.

16) 이희승, 앞의 책, 487면; 이인의 회고 역시 같다. “예심판사 나가노라는 자는 검사처럼 표독하지는 않으나 고문으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양이면 무조건” 검찰에서 다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고만 되풀이하니 말이 안통하기는 매한가지였다.”(이인, 반세기의 증언, 136면)

17) 예심종결결정문의 원문은 정인승이 그 등본을 한부 보관하고 있다가 공개하였다. 정인승, 앞의 책, 269~323면; 번역문은 같은 책, 242~268면에 있다.

고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할 때 “조선인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은 본능이다”라고 절규,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동사건 피고인 등의 범죄를 곡비[曲庇]하고 그 소행을 상양[賞揚]한 혐의로 정직6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항상 총독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여 민족주의 진영의 이채로운 인물로서 본 건에 의해 과거의 사상을 청산하고 황국신민으로서 갱생을 서약하고 1943년 1월 6일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한 자인데…18)

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인의 일제하의 변호사 활동의 요지를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되, 약간의 부정확한 부분을 교정하면서, 이인 변호사의 일제하 행적을 정리해보자.

- ㉠ 이인은 청년기에 이미 자신의 항일의지를 글로써 뚜렷히 드러냈다. 그가 일제의 조선통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인의 고충을 조야에 호소함”이라는 논설을 일본 동경에서 발간된 <일대제국>지에 게재한 때로부터이다.19) 이 논설은 커다란 파문을 자아냈으나, 간신히 신변의 화는 피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기고하여 말썽을 빚었다고 한다.
- ㉡ 이인은 1923년 5월 변호사자격을 확보했다. 그는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뛰어 들었다. 그의 첫 사건은 1923년 7월 소위 제2차 의열단사건(김시현, 유시대, 황옥 관련)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항일변론의 최일선에 나서, 선배 변호사인 허헌·김병로와 함께 “3인의 변호사”로 불렸다. 몇백건의 독립운동사건을 변론하였고, 경성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변론을 펼쳤다. 일제하 “3인”의 변호사에게 붙여진 별칭은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 “무료변호사”였다. 사회운동과 사상운동을 활발히 변론하였으므로 사상변호사인 것이고, 1920년대 중반이래로 항일사건이 좌경지향적인 것이 다수였으므로 이를 변론하는 변호사는 좌경변호사라 불릴 만했다. 항일사건에 대해서는 대개 무료로 변론을 자임했으므로 무료변호사였다. 그들의 활동은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그들은 법정뿐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 예심종결결정문 중에서 이인에 관한 부분: 정인승, 앞의 책, 261면.

19) 李仁, “朝鮮人の苦情を朝野に訴ふ,” 一大帝國, 1卷9号, 1916, 12~17면.

- ㉔ 법정변론의 수위를 넘나드는 변론에 대해 일제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1928년 고려혁명당사건을 변론하면서 “일본은 동양평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을 합병하였으나 한국에 대한 식민정책은 양두구육에 흡사~” 식으로 성토를 하자, 검사와 판사가 불온한 변론이라고 변론을 중지시켰다.²⁰⁾ 1930년에는 수원고농학생 김찬도, 권영선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을 변론하면서, “양부모의 학대에 견디지 못할 지역이면 양자(養子)는 친부모를 그리워할 것은 인지상정이다. 인간은 굶주리면 식물을 찾고, 결박되었을 때는 자유와 독립,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양심적 발로이고 역사적 필연이다”는 주장으로 변호사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930.10. 정직이 풀리자 그는 1930년대 내내 항일변론을 주도했다.
- ㉕ 그는 “항상 총독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여 온 민족주의 진영의 이채로운 인물”(조선어학회사건 예심종결결정서)이었다. 그가 맡은 사건의 다수가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사건이었음에도, 그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피고인이 된 독립운동가들을 민족 독립운동의 동반자로 생각했다.

내가 변론하는 취지는 좌익사건이나 민족운동사건이나 그 취지가 같다. 내가 적극 변론하고 나섬은 일제탄압에 시달리는 같은 동포를 구하자 함이요, 민족독립운동을 옹호하자 함이지, 공산주의운동을 돕자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자라 하더라도 좌익운동을 표방하지를 않았다. 앞에 내세우기는 민족해방이니, 그 뒷속에서 딴 생각을 품은 경우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씩 물이 들어 있을 뿐이다. ... 이런 관계는 당시에 흔히 들을 수 있던 경부선의 비유로 설명이 된다.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가는데 부산까지를 1천리로 잡고, 대구까지가 7백리라면 우리는 대구 가는 승객이요, 공산주의자들은 부산까지 가겠다는 승객과 같다. 기차를 같이 탔으니 그들과 동행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목적지를 같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비유는 내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당시에 드문드문 쓰던 말이나,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면 “부산까지 가지 말고 대구에서 함께 내리세”하는 말을 곧잘 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네, 그렇시다”하곤 했다.²¹⁾

20) 조선일보 1928.3.21.

21) 이인, 반세기의 증언, 107면.

- ㉔ 이인 변호사는 옥중에 있을 때 1943년 1월 6일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런데 예심종결서에는 그가 ‘과거사상을 청산하고 황국신민으로 갱생을 서약’했다고 쓰고 있다. 이는 옥중 포로의 상태에서, 슬한 고문과 악형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강요된 서약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갱생 서약과 변호사등록취소는 상호 모순된다. 갱생을 서약했으면, 죄상이 중대해도 은전을 베풀든지 아니면 적어도 변호사등록취소라는 극한처방보다는 완화된 제재를 가하든지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갱생서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제 사법관들이 이를 내심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갱생서약서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시련의 한 증거자료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㉕ 다음 이인의 조선어학회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인은, 조선어학회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선어학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첫째, 이극로 등과 함께 ‘조선기념도서출판관’이라는 조선어 도서의 출판단체를 조직하였고, 자금 1200원을 제공하여 「조선문자 및 어학사」라는 조선어 도서를 출판하였다. 둘째, 조선어사전 편찬의 자금으로서 200원을 피고인 김양수를 통해 조선어학회에 제공하였다. 셋째, 조선독립운동의 투사 및 독립 후의 인재를 양성하는 결사를 조직할 것에 대해 이극로 등과 종종 협의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목적사항의 실행에 관해 협의한 것이다. 이 부분은 양사관 설립에 관한 것이다.²²⁾

그런데 이 사실들만 놓고 보면 도대체 범죄사실이라고 할만 한 게 없다. 이런 활동이 어떻게 치안유지법상의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했거나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그 목적사항의 실행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규정될 수 있는가. 국체변혁의 핵심은 ‘조선독립의 목적’인데, 이들의 활동이 곧바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 예심판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앞머리에 제시하고 있다.

민족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소위 어문운동은 민족 고유의 어문의 정리 통일 보급을 꾀하는 하나의 문화적 민족운동임과 동시에 가장 심모원력을 포함하는 민족독립운동의 점진적 형태이다. 생각건대 언어는 민족내의 의사소통은 물론 민족감정 및 민

22) 정인승, 앞의 책, 261~262면.

족의식을 양성하여 굳은 민족결합을 낳게 하여, 이를 표기하는 민족 고유의 문자가 있어서 비로소 민족문화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민족적 특질은 그 어문을 통해서 더욱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파생하여 항상 발전하고, 그 고유문화에 대한 과시 애착은 민족적 우월감을 낳아 그 결합을 더욱 굳건히 하여 민족은 발전한다. 그러므로 민족고유의 어문의 소장(消長)은 민족 자체의 소장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약소민족은 필사적으로 이의 유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의 발전을 꾀하고, 방언의 표준어화, 문자의 통일 및 보급을 회구하여 마지 않는다. 이리하여 어문운동은 민족고유문화의 쇠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항상 발전을 초래하고, 문화의 향상은 민족 자체에 대한 보다 강한 반성적 의식을 가지게 하여 강렬한 민족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약소민족에게 독립의욕을 낳게 하고, 정치적 독립달성의 실력을 양성케 하는 것으로, 본 운동은 18세기 중엽 이래 구주(歐州) 약소민족이 되풀이해서 행해온 그 성과에 비추어 세계민족운동사상 가장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이라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반적 논지를 통해 어문운동이 정치적 독립운동일 수 있으며, 특히 약소민족의 경우에는 유력한 독립운동 그 자체라고 단정한다. 이어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대해 정리한다.

본 건 조선어학회는… 표면적으로는 문화운동의 가면 하에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양성단체로서 본 건 검거까지 십여년의 긴 세월에 걸쳐 조선민족에 대해서 조선어문운동을 전개하여 왔던 것으로, 시종일관 진지하게 변치 않는 그 활동은 조선어문에 깃든 조선민심의 세세한 부분에 닿아 깊이 그 심저에 파고들으로써 조선어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낳게 하여 다년에 걸쳐 편협한 민족관념을 배양하고, 민족문화의 향상, 민족의식의 양양 등 그 기도하는 바인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신장에 기여한 바 뚜렷하다.

이와 같이 조선어학회는 “문화운동의 가면” 하에서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신장”에 기여한 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이 조선어학회의 사회적 비중을 높일수록 (일체의 입장에서는) 그 처벌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것임으로 조선사회에서 조선어학회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조선어학회는 민족주의 진영에 있어서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조선사상계를 풍미하고 있던 공산주의운동에 위축되어 아무런 할 일 없이 자연소멸하거나 사교단체로 전락하여 그저 명맥을 유지해온 기타 민족주의 단체 사이에서 홀

로 민족주의의 아성을 사수한 것으로 중시되기에 이르러, 후단 기재하는 사업과 같은 것은 어느 것이나 언문(諺文) 신문 등의 열의있는 지지하에 조선인사회에 심상치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조선어사전 편찬사업과 같은 것은 미증유의 민족적 대사업으로서 촉망받고 있는 것...

요컨대 예심종결결정문의 논지에 따르면, 조선어학회는 조선독립을 숨은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제일가는 지위를 차지하며, 반향도 가장 큰 단체라는 것이다. 이극로 등의 행위는 “조선독립의 목적을 가지고 결사를 조직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치안유지법 제1조 전단)를 했다는 것이고, 이인 등의 행위는 “결사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치안유지법 제1조 후단)를 하고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협의”(치안유지법 제5조)한 범죄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조선어학회의 개별 활동들은 모두 공개리에 한 것이며, 학술적 활동들이고, 출판물은 총독부의 검열을 받아 간행되었다. 그런데도 이 모든 활동이 치안유지법 위반의 범죄가 되는 것일까. 일제 사법당국은 조선어학회 자체가 독립운동을 위한 점진적 활동이므로, 그 학회에서 주도한 모든 활동은 치안유지법 위반이 된다는 논리를 취하게 된다. 합법적 활동도 불법적 활동이란 논리가 되는 셈인데, 일제말에 이르면 이러한 논리적 모순도 개의치 않았다. 실제로 검사의 심문과정에서 이인은 다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검사는 함흥검사국 차석인 아오야나기(靑柳五郎)인데 이 자가 바로 함흥경찰부와 흥원경찰서를 지휘하여 조선어학회사건을 엮어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성격이 간고하고 까다로워서 이것도 독립운동하려던 것 아니냐, 저것도 독립운동하려던 것 아니냐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나는 참다 못해서 “그럼 밥먹는 것도 독립운동이냐”고 쏘아 붙이니 그는 “밥먹고 기운차리면 독립운동하겠지”하고 서슴없이 대답한다. 나는 “그런 날조가 어디 있느냐”고 대들고 싶었지만 저들이 날조란 말만 나오면 펄펄뛰는 줄을 아는 고로 “그런 비약논법이 어디 있느냐”고만 했다.²³⁾

치안유지법은 그 해석이 극히 자의적이지만, 일제말에 이르면 아예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민족운동 전반을 탄압하고 그 싹조차 잘라버리려는 태세로 나선 것이다.

23) 이인, 반세기의 증언, 131면.

4. 제1심 판결: 치안유지법 위반

예심판사가 사건을 종결한 뒤, 약 2개월 뒤에 공판이 시작되었다. 한겨울인데도 맨발에 와라지[草鞋, 일본의 전통짚신]만을 끌고 형무소를 나서면 발가락이 얼어붙어 이내 감각이 마비되었다.²⁴⁾ 공판 직전에 이인은 학질과 폐침윤의 질병으로 병보석이 되었다. 사건관련자 중 학자가 아닌 이들, 즉 이우식, 김도연, 김양수, 장현식 등도 보석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판에 임했다.²⁵⁾

1944년 12월 21일부터 1945년 1월 16일까지 9회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다.²⁶⁾ 변호인은 함흥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던 한격만[韓格晩], 박원삼[朴元三], 유태설[劉泰高] 등 3인과 경성에서 개업하고 있던 일본인 영도웅장(永島雄藏)이었다.²⁷⁾ 1944년 말에 이르러, 함흥에 달려와 변호할 변호사도 거의 없었으며, 치안유지법사건의 경우에는 특정된 지정변호사만 변론이 가능하였기에, 변론다운 변론의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다.

1945년 1월 16일 제1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다. 적용법조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전단의 결사조직죄(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김법린), 제1조 후단의 목적수행행위죄(정인승, 이중화, 이우식, 김양수, 장현식, 김도연, 이인, 정태진), 제5조의 실행협의(이극로, 이우식, 이인), 제5조의 실행선동(김법린, 정태진) 등이었다.²⁸⁾ 형량은 실형이 5인, 집행유예가 7인이었다. 그 자체도 부당한 형벌이지만, 그동안 혹독하게 문초하고 만2년 3개월 이상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형은 오히려 관대한 느낌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얼마나 유죄거리로 삼을 만한 사실이 거의 없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장기의 미결구금과정에서 혹독한 실형을 살만큼 살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4) 이희승, 앞의 책, 489면.

25) 이인, 반세기의 증언, 139면.

26) 1944년 11월말부터 공판이 시작되었다는 회고, 공판이 4-5차례 열렸다는 회고도 있으나, 정인승의 회고는 날짜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 그에 일차적인 신뢰를 두고 인용한다. 정인승, 앞의 책, 69면.

27) 이희승, 앞의 책, 491면.

28) 정궁식,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예심종결결정서〉의 분석-,” 애산학보 제32호, 2006, 97~140면에는 범죄혐의사실, 각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양형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정리해놓았다.

피고인	제1심 선고형	피고인	제1심 선고형
이극로	징역 6년	이우식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최현배	징역 4년	김양수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이희승	징역 2년 6월	장현식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정인승	징역 2년	김도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정태진	징역 2년	이 인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이중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김법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공판조서가 없어 제대로 알 수 없다. 이희승의 회고에서 공판정의 분위기를 일부 읽어낼 수 있다.

“그들의 공판이란 것도 이성을 잃고 있었다. 아무리 안 한 일은 안 했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 한 일은 했다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았다. 조선어사전 편찬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조선독립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느냐고 설명하여도, 또는 조선독립의 실현이 어떻게 조선어사전의 완성으로 곧 달성될 수 있느냐고 누누이 주장하여도 검사와 판사들에게는 마이동풍에 지나지 않았다.”²⁹⁾

특히 종래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인들을 위해 명변론을 거듭했던 이인 변호사가 자신이 피고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자기변론을 했을까 궁금해진다. 이인의 회고록에 그에 대해 별달리 언급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공판은 삼엄한 분위기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지 않나 짐작되기도 한다.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장은 이인 피고인에게 특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때 재판장은 나를 대놓고 “당신에게 이 정도 판결은 약과다. 그동안 법정을 다니며 얼마나 귀찮게 굴었는지 아느냐”고 힐란했다. 마구잡이 감정으로 재판한 것임을 저들 입으로 입증한 셈이다.³⁰⁾

그런데 문제의 제1심 재판의 공판조서나 판결문 어느 것도 찾을 길이 없다.³¹⁾ 그것은 예심결정 및 상소심판결을 놓고, 그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을 뿐이다.

29) 이희승, 앞의 책, 490면.

30) 이인, 반세기의 증언, 141면.

31) 제1심은 함흥에서 재판했기에 판결문이 북한지역에 있거나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동아일보 1982.9.3. 참조.

5. 조선고등법원: 일제하 최후의 판결

제1심에서 유죄(실형)을 받은 5인 중 정태진을 제외한 4인(이극로, 최현배, 이회승, 정인승)은 경성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1941년 전시를 맞아 재판사건 처리 간소화라는 이유 밑에서 치안유지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제33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없어졌고, 고등법원에 상고하는 2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직접 상고한 것이다. 고등법원판결에서 지방법원 판결내용을 추출해보면, 제1심의 판결내용은 예심종결결정서의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법원에 상고하자 또 재판 방해 작용이 있었다. 1심판결 주심이었던 서전승 오[西田勝吾]판사가 상고한 4인을 재판소로 불러 상고를 취하하도록 개별적으로 종용하였다. 모두가 즉답을 보류하였더니, 서전 판사는 4인을 함께 대면시켜줄 것이니 아무쪼록 잘 의논하여 상고를 취하하라고 누누이 권고하였다. 그러나 모두들 그러한 회유에 굴하지 않고 상고를 유지하자, 이번에는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맞상고를 했다.³²⁾

피고인들은 상고가 한두달이면 끝날 것이라는 변호인의 말을 믿고 고등법원의 상고심을 기다렸다. 그러나 상고한 지 무려 4개월이 지난 1945년 5월에 이르러서야 고등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고등법원에 상고한 이유는 신병을 경성으로 이감시켜주기 바랐기 때문이기도 했다. 경성에서 함흥으로 가족들이 면회하러 오기도 힘들거니와 그래도 경성에는 여러 연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2일에 공판을 한다고 고등법원으로부터 날짜 통지가 왔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도록 경성으로의 이감은 종무소식이었다. 그저 변론문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참으로 해피하고도 기형적인 재판”이었다. 피고인들은 재판결과에 대한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다. 함흥형무소에서였다. 4인의 조선어학회의 간부들은 8월 17일 오후에야 출감하여, 다음날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일본의 패망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재판소 역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음은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서 조선어학회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은 1945년 8월 13일 상고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통신망이 모두 마비되어, 경성의 판결의 통지가 함흥에 도달하기 전에 해방이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사건처리의

32) 정인승, 앞의 책, 73면.

서류는 공중에 떠버린 것이다. 상고심인 조선고등법원판결문은 1982년 9월 3일 동아일보사에서 부산지검 문서보관창고에서 찾아내어 처음으로 지상에 공개되었다. 이 판결³³⁾은 일제하 치안유지법 적용의 최후 사례 혹은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의 최후의 사례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상고한 변호인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환산경차랑[丸山敬次郎], 평천원삼[平川元三](朴元三)의 양인이다. 이들은 제1심에서 무시된 변론요지를 보다 법리적 보장을 거쳐 상고이유를 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고등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검사와 예심판사의 논지를 그대로 답습한 제1심판결의 요지를 역시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검사=예심판사=원심법원의 논지를 [검=법]로 하고, 피고인=변호사의 논지를 [변호]로 하여 비교해보기로 한다. 고등법원은 [검=법]와 거의 같으나 한두개 추가된 논리가 보여진다. 이를 [고등]으로 하고, 그 핵심을 아래와 같이 소개 정리하고자 한다.

㉠ 어문운동의 성격

[변호] 어문운동은 어디까지나 순문학적 언어학적 교화운동 내지 언어의 순화 운동이다. 소위 약소민족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어문의 유지에 노력함과 함께 방언의 표준어화, 문자의 통일을 모색해도 (어문운동을 곧) 독립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문운동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민족의식을 배양하여 약소민족에게 독립의식을 생기게 하고 정치적 독립달성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법] 어문운동은 문화적 민족운동임과 동시에 가장 심모원력을 함축하는 민족독립운동이다. 민족고유의 어문의 소장이 그 민족자체의 소장에 대하여 결정적 요인이 된다. 어문운동이 가령 민족고유문화의 쇠퇴를 방지하고 그 향상발전을 가져오고 더욱이 민족자체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어문운동은 곧 민족독립운동의 하나로 단정할 수 있다.

33) 소화20년(1945년) 형상[刑上] 제59호.

㉠ 조선어학회의 성격

◇ 학술단체인가 독립운동단체인가

[변호] 조선어학회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가 아니다. 전적으로 학술적 연구로 종시일관했으며, 이면운동[裏面運動]을 획책한 일은 없었다. 조선어문운동도 표리일체 합법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 실체는 착잡한 조선어문의 정리통일을 계획하여 이것을 조선민중에 보급시켜 이것에 의해서 조선고유의 바른 문학적 또는 언어학적 문화면을 소개하여 조선어문의 사용방법을 적정화시키는데 있다. 각종 구체적 사업을 보아도 명백하다.

[검=법] 조선어문운동 자체는 표면상 합법적 문화운동이나 그 이면에 있어서 조선독립의 목적을 가진 비합법운동이다. 즉 조선어학회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결사이다.

◇ 조선어학회의 민족운동으로서의 위상

[검=법] 조선어학회는 민족주의진영에서 전연 불발(不拔)의 지위를 차지하고 조선사상계를 풍미한 공산주의운동 앞에서 위축되어 하등의 하는 일 없이 혹은 자연소멸되고 혹은 사교단체로서 겨우 목숨을 보유했던 민족주의단체 사이에서 혼자서 민족주의의 아성을 사수해온 것으로 중시하게 되어 그 사업 중 조선어사전편찬사업 같은 것은 광고[曠古]의 민족적 대사업으로 촉망되고 있다.

[변호] 조선어학회는 민족주의 단체간에 있어서는 학자의 문물관계 사업단체로 민족주의 단체로서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조선어문운동 내지 조선어사전편찬사업 같은 것은 오직 조선어의 학문적 연구사업으로 인정된 점은 있다 해도 이것을 민족운동 특히 민족독립운동으로 인식된 사실은 추호도 없다. 민족적 대사업으로 촉망되었다면, 조선어사전편찬사업에 모인 자금액이 너무나 부족하고 늘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중단의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㉔ 조선어사전 편찬 등의 목적 및 내용

◇ 조선어사전 편찬의 의도

[변호] 10수년간 오직 순수한 문화운동으로 그 틀을 벗어난바 없고 사법경찰관의 엄중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정치결사로 인정받을만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검=법] 조선어사전의 편찬 또는 조선어문운동을 행한 것은 이것으로 조선인의 실력을 배양하고 조선인의 민족의식의 양양을 도모하여 그리하여 조선 독립의 실현을 기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사전의 어휘 중 15개 단어의 주석의 평가

[변호] 수많은 수록단어 중 극히 일부(단 15개)의 단어 몇 개로 조선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기도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속단이다. 단순한 자구의 주석은 사상의 표현이 아니다.

[검=법] 본 건 사전에 수록된 어휘 약15어 중 일부 말하자면 불온한 주석내용을 가진 것이 있다. 이는 조선어학회 활동의 불온성의 한 단면이다.

[변호] 조선총독부 자신이 사전편찬에 협력하여 그 검열을 하고 의심한 바 없는데 들연 본 건 어학회와 직접 하등의 취체상의 관계가 없는 장소에서 검거하여 이것을 유죄라고 한다면 세인은 이것을 가지고 민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고 평가할 것이다.

[검=법] 어휘의 채록주해[採錄註解]는 조선독립의 근본목적에 따라 민족정신의 고취로 일관하는 취지하에 그 철저함을 기함과 동시에 적어도 조선의 민족정신을 말살 또는 훼손하는 것과 같은 문구의 사용을 피하고 주해는 당국의 검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암암리로 민족의식의 양양을 도모하도록 연구할 것을 협의결정하여 수록어휘 약15호에 달하는 원고를 작성했다.

[변호] 학회의 개별활동들(가령 조선어통일, 표준어기준공표, 외래어표기법통일, 언문학습회, 세종대왕한글영포기념식, 기관지 한글의 발행, 사전편찬작업)은 심지어 총독부의 교학당국의 방침에 준거한 순연히 합법적 문화활동이어서 위법성 없다.

◇ 조선기념도서출판관의 조직과 저서 출판

[변호] 도서의 출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고, 출판물은 합법적으로 간행됨

[고등] 피고인 등의 행위는 순수한 학술적 문화운동이 아니라 합법적 문화운동의 이름에 숨어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하여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며 혹은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했다.

㉔ 피고인들의 개별활동과 조선어학회 활동과의 관련성 여부

◇ 조선어학회 이전의 활동과 조선어학회 활동 간의 연계성 여부

[검=법] 피고인 등이 그전에 내심적으로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고등] 이들 피고인 4명은 모두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며 민족의식이 극히 농후한 자들로 특히 피고인 이극로, 동 최현배 같은 자는 반도 내 쟁쟁한 민족주의자다.

[변호] 피고인 등이 내심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해도 본 건 조선어학회가 당연히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결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극로에 독립운동 관련 행적과 조선어학회 활동과의 연관성 여부

[검=법] 피고인 이극로의 전력에서 간취되는 강렬한 민족의식에서 판단한다면 본 건 운동당시에 있어서도 동인의 내심에는 어느 정도의 민족의식과 독립회구의 염원을 청산하기 어려운 것이 잔존하여 동인은 본 건과 같은 어문운동이 나아가서 조선민중간에 민족의식을 양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것이 타일 어떤 기회에 조선독립운동이 발발될 때 그 운동 세력을 기여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변호] 다년간의 그의 주의주장을 버리고 정치운동에서 몸을 빼고 학자로서의 그의 본분에 돌아가서 학식을 경주하여 조선어사전의 편찬과 조선어문의 통일운동이란 순문화운동에 전신[轉身]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혹 이 [李]의 심경이 이와 같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까닭으로 당장 피고인이

본 건 운동을 조선독립을 기도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고등] 이극로는 전기 제1회 세계약소민족대회에 출석하여 하관조약[下關係約]에 의하여 보증된 조선독립의 실행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것, 조선에서 총독정치의 즉시중지,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 등 3항목에 걸치는 의안을 제출하고 조선독립을 위하여 원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³⁴⁾ 약소민족 대표자간에서도 조선의 존재를 무시당한 것으로 조선의 독립에는 외력[外力]의존의 근본관념을 시정하여 조선민족의 문화와 경제력을 양성 향상시킴과 동시에 민족의식을 환기 앙양하여 독립의 실력을 양성한 후에 정세에 따라 의거의 방법으로 독립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여 그 문화운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어문운동이다. 이리하여 조선어사전편찬을 계획하여 1929년 7월경부터 피고인 최현배와 협의하여 동년 10월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 최현배 이회승의 의도에 대한 평가

[검=법] 피고인 최현배, 이회승 양인까지도 이와 같은 목적(위의 이극로와 같은)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호] 그 경력 및 성격에 있어서 하등의 정치적 색채가 없고 오직 학구로서 그 본분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피고인 최현배, 이회승 양인까지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고등] 최현배는 한일합병 당시부터 여기에 불만을 품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다가 그 후 주시경[周時經] 같은 민족주의자의 감화를 받고 혹은 대중교에 입교하여 그 민족주의적 분위기에 물들고 혹은 최남선의 저작을 열독하여 민족의식을 높이고 「월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와 1919년 조선독립만세소요사건 등의 자극을 받아 더욱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게 되었다가 1926년 「민족갱생의 도」라는 민족주의적 논문을 동아일보 지상에 연재하고 1930년 이것을 저서로 발간했는데 이 저서에서「조선민족을 갱생시키려

34) 세계약소민족대회 혹은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서 이극로와 공동참여자(김법린, 이의경=이미륵, 황우일, 그리고 허헌)의 활약에 대하여는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2012, 230~241면에서 상세히 밝혔다.

면 먼저 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문화인 동지들에게 호소하여 일대 민족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조선민족은 그 갱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조선민족은 3.1운동에 의해서 그 생기를 진기[振起]시켰다」라고 하여 3.1운동을 격찬하고 또한 「우리말은 우리민족의 정신적 산물의 종합체이다. 우리말을 듣는 데에 조선심[朝鮮心]이 있고 우리말을 전하는 데에 조선혼이 있다」라고 하여 어문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27년경부터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에 가입하여 자주 그 집회에 참가한 까닭으로 1938년 9월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서 치안유지법위반에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경성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처분에 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던 자이다.

㉔ 사법경찰관 및 검사 앞에서의 피의사실 자백에 대한 평가

[변호] 경찰에서 엄중한 취조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검사국에서는 먼저 취조한 경찰관이 입회했기 때문에 부득이 종래의 자백을 유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자백은 어느 것이나 진실과 반하는 것이다.

[검=법]: 사법경찰관, 검사 앞의 공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시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

㉕ 치안유지법의 적용가능성 여부

◇ 소극적, 간접적 기여도 치안유지법상의 ‘국체변혁’에 해당하는가

[검=법] 동법에는 오직 국체변혁의 목적이라 말할 뿐 국체변혁의 수단 방법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변혁의 수단방법이 적극적·직접적이거나 소극적·간접적이거나 불문하고 해당(該當)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변호] 조선독립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 있어서 조선독립을 회구하여 이것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행위가 혹은 조선독립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것일 경우에는 이

것을 가지고 조선독립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입법의 본지에 따른 해석이다.

[고등] 소극적·간접적 문화운동이라 해도 단체변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원래 적법행위라 할지라도 위법목적과 결합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 사전편찬, 조선어보급이 ‘국체변혁’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변호] 사전편찬은 완전히 합법적 행위이다. 과정도 합법적이었다. 사전편찬으로 어떻게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가.

[검=법] 고유 언어의 보급통일과 같은 간접적·소극적 문화운동이라 할지라도 국체변혁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등] (조선어학회) 국체변혁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실현의 수단으로 사전의 편찬, 기타 문화운동을 한 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닐 지라도 어떤 위법적 목적과 결합되어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상하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옥을 빌리는 것, 도감을 매입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위법이 아니지만, 그것이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본거를 마련하거나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샀다면 각기 치안유지법위반죄 또는 살인예비죄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

◇ 동우회 사건의 판례

[변호] 어떤 사물이나 사실의 본질을 그 외형적 사상 내지 냄새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정당하지 않다. 본 건은 치안유지법위반의 외형 내지 냄새로 인해서 일단 혐의를 받게 됐다 해도 그것은 단순히 혐의일 뿐 치안유지법위반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전에 귀원[貴院]에서 그의 소위 동우회사건은 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본변호인은 동우회사건과 본 건을 비교하여 더욱더 그 확신을 깊이 하는 바이다.

[고등] 피고인등의 행위가 국체변혁의 실행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해도 국체변혁의 위험이 있는 이상 이것을 동법 위반죄로 문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행위가 민족의식을 양양시켜 따라서 독립의 기운을 양성[養成]시키는 결과 독립의 위험을 생기게 한다는 것이 원심판결의 취지이다.

㉨ 정상론

[고등] 피고인 이극로, 동 최현배, 동 이희승은 각기 공판정에서 자기들은 지금에 와서는 이미 완전히 민족의식을 청산하고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이 되어 있다고 공술하고 있으나 동 피고인 등은 지금도 가슴속 깊이 농후한 민족의식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건 범행은 실로 중대악질이어서 조금도 동정할만한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 건은 10여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일반사회에 극히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악화의 경향이 엿보이는 반도현하[半島現下]의 사상정세에 비추어 일반타계(一般他戒)의 의미에서도 피고인등을 엄벌에 처하는 필요가 있음을 통감한다.

위의 정리 중에서 ㉨ 부분은 법리적 검토가 더 요구되는 것 같다. 치안유지법의 ‘국체변혁’에 독립운동이 포함된다는 것은 1930년 초 이래의 일제의 판례에 일관되어 있다. 그러면 조선에서의 제반 사회운동 전반이 치안유지법의 그물망에 걸리게 될 수도 있다. 그 경우 법해석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폐해가 막심해지며, 종내에는 치안유지법 그 자체의 권위를 지나치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앞서 인용했듯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 밥 먹고 힘내어 독립운동을 하려는 의도였다면 치안유지법 위반이 되지 않나 하는 식으로 무한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치안유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우왕좌왕한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가 검토한 바로도, 가령 보합단사건, 민중대회사건, 경성여학생만세운동사건, 십자가당사건 등에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이나 하는 것이 문제되었고, 그에 대해 경찰, 검사, 법원은 상이한 판단을 내리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특정한 활동이 조선독립을 직접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질 때,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조선독립을 희망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치안유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수단방법이 소극적이거나 간접적인 데 불과한 경우, 이를 국체변혁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가 동우회사건의 조선고등법원 판례였던 것이다.

그러나 1940년대에 이르면, 전시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을 띤 사회운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게 되면 치안유지법체제 그 자체가 무용해진다. 처벌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치안유지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련된 광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는, 기존의 적용대상이 사라졌을 경우,

그 시스템의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적용대상을 추구하게 된다. 종래의 민족운동에 해당한 사건들이 치안유지법 대상으로 새로이 걸려드는 경우가 다수 생기게 된다. 더 나아가 종래에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 행해졌던 각종 활동마저 새로이 ‘국체변혁’의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찍어 처벌하게 된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그야말로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교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학술활동 정도에 그쳐도, 그 모든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이나 이면적으로는 불법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졌다.
- 당국의 검열을 받아 출판된 것도, 암암리에 민족의식의 양양을 위한 행동으로 재규정된다.
- 조선독립을 희망했지만 합법적 학술활동으로 전환한지 수십년이 된 인사들도 장차 어떤 기회를 틈타 독립운동에 기여할 것이라는 위험성이 예견된다고 재규정된다.
- 사전편찬, 책출간, 맞춤법통일 등 모든 활동이 국체변혁을 위한 활동으로 재규정될 수 있다.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리로써, 국체변혁을 위한 수단방법에는 직접적 적극적인 경우는 물론 소극적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여, 치안유지법은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해석범위를 완전히 초월하여, 거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전편찬과 같은 것도 “국체변혁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자발적이든 강제에 의한 것이든 일제는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기를 압박했다. 그러한 압박에 못 이겨 전향을 한다든가 창씨개명을 한다든가 하면, 이제는 표면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농후한 민족의식을 품고 있다”고 하여 조금의 참작사유도 되지 못한다. 즉 전향을 해도 하지 않아도 치안유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한 해석으로 치달리면 법은 최소한의 인권보장규범이 못되는 것은 차치하고, 오직 강력한 처벌을 위한 몽둥이에 불과하게 되었다. 일제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선어학회사건의 최종심판결은, 근대법의 파탄, 근대적 외양을 띤 재판의 완전한 파탄으로 귀결되었다.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는 절망의 심연에서, 그 지옥의 세계를 송두리째 쓸어낸 것이 1945년 8월 15일 일본패망과 민족독립이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어쩌면 매우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판결로는 매우 무리하고 부당한 것이지만, 민족운동사에서 국어운동이 가진 높은 위상을 오히려 잘 정리하고 있으며, 조선어학회 간부들이 그토록 내면으로부터 열망했던 부분을 즉집계로 뽑아내듯이 선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강렬한 내적 열망이 없었다면 이극로, 최현배 등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토록 한글운동에 침식을 잊고 수십년 동안 전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점에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어문운동이 “문화적 민족운동임과 동시에 가장 심모원려[深謀遠慮]를 함축하는 민족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처벌의 고통과는 별개로, 이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운동이라면 더 이상의 광영이 달리 없을 것이다. 일제의 처벌은 독립 후에 그 자체가 영광의 징표일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어문운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일제당국의 검열이나 요청에 대해 계속 순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총독부 당국에 대한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갈수록 민족정체성이 위축되고 조선적인 것을 박멸하려는 제국의 의도에 맞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조선어라도 살려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심모원려’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6. 이인 선생의 한글사랑

다시 이 글의 주인공에게로 돌아간다. 이인은 1944년 11월경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검거된 인사 중 중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이 아닌 모든 인사들과 함께였다. 함흥구치소에서는 이윤재와 한징이 옥사하자 더 이상의 희생을 우려하여, 병으로 위독한 사람을 함흥시내 병원으로 입원하도록 병보석의 조치를 했던 것이다. 이인은 확실히 신음하다 함흥 도립병원에 거주제한이 된 채로 출옥하였다. 판결을 얼마 앞두고는 거주제한이 도립병원에서 함흥 시내까지로 완화되었다. 공판 중에는 다시 수감되었다가 1945년 1월 18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³⁵⁾ 1945년 초에 그는 반생반사[半生半死]상태로 경성으로 돌아왔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지내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양주군 은봉면 덕

35) 이인, 반세기의 증언, 141면에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의 기술이 타당하다.

정리 농막[農幕]에 몸을 숨겼다. 일제의 ‘흑표4호[黑票4號]’로 지목되어 언제 다시 붙들려가서 처단될지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서였다. 8.15 직전 동지들과 반일항쟁을 준비하던 중에 해방이 닥쳐온 것이다.³⁶⁾

한편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해방 후 조선어사전 원고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사전의 원고는 모두 흥원경찰서에서 압수해갔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 후 1945년 9월 8일에 서울역 뒤에 있는 통운회사 창고에서 사전 원고(어휘 카드)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³⁷⁾ 고등법원에 상고했을 때 일건의 재판기록과 함께 증빙자료로 경성으로 실어 보냈던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고등법원에 상고한 것은 여간 잘한 일이 아니었다.³⁸⁾ 이를 토대로 원고를 수정 보충하여 우리말대사전은 1947년에 제1권을 발행한 이래 1957년에 이르러 전6권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³⁹⁾

이인의 한글사랑은 내내 이어졌다. 1976년에 그는 사재를 정리하여 한글학회에 3,000만원을 내놓았다.⁴⁰⁾ 이를 계기로 한글학회는 2억원의 모금운동을 벌여 종로구 신문로에 오랜 숙원이던 회관을 지을 수 있었다. 이인은 1979년 유언으로 자신이 살던 집까지 한글학회에 기증했다. 결국 전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한 셈이다.⁴¹⁾ 이인의 사후에 자손들이 유산을 모아 ‘애산학회[愛山學會]’를 설립하여 매년 연구논집을 간행하고 있다. 이인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후(死後)에까지 한글사랑과 조선어학회, 한글학회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끝까지 실천했던 것이다.⁴²⁾

36) 이인, 반세기의 증언, 142~144면.

37) 이희승은 “약 반년뒤”에 발견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으나, 정인승은 날짜를 명기하고 있어 정인승의 회고를 더 신뢰하여 인용한다. 정인승, 앞의 책, 137면.

38) 이희승, 앞의 책, 497면.

39) 이희승, 앞의 책, 497면.

40) 경향신문 1976.8.16. “한글학회 회관건립 이인 씨가 3천만원”

41) 동아일보 1979.8.3. “고 이인 선생 전재산 바친, 애산의 국어사랑”

42) 정법석, “애산 이인 박사 편모,” 한글학회 편,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조선어학회 수난’ 50돌 기념글모이, 1993, 238면.

제 1 부

조선어학외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 주제 발표 2 /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1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제 발표 2 || 발표문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박용규
한글학회 연구 위원
hispak@hanmail.net

1. 머리말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은 일제의 우리 말글 말살에 맞선 언어 독립투쟁이었다. 간접적이고 소극적이기는 하였으나, 지구적으로 전개한 빛나는 항일 투쟁이었다.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이 민족운동의 한 형태 즉 언어 독립투쟁이라는 것을 간파하였기에,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사무실을 철저히 여섯 내지 일곱 차례나 수색하였고, 급기야 조선어학회의 회원 33명을 검거하여 탄압하였던 것이다.

조선어학회의 우리 말글을 정리하고 유지하며 보급하는 운동은 일제의 조선말 말살 정책에 맞섰기 때문에 항일 독립투쟁이었다.

일본어 상용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과 조선어 표준말 선정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제정은 독립국가에는 반드시 있는 국어 문법을 정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족운동 즉 항일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제시기에 제정된 민족어 3대 규범집은 다가올 민족국가 즉 독립국가에서 곧바로 국어 규범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식민정책의 총본산인 조선총독부가 일어로 발행한 『조선어사전』(1920) 밖에 없고, 우리말 어휘를 한글로 제대로 풀이한 민족어 대사전이 없는 현실에서 조선어학회가 만들어 내고 있던 『조선어대사전』은 민족어휘의 뜻풀이를 통해 민족어를 영구히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민족정신을 양양하기 때문에 항일 투쟁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일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민족주의 학술단체인 조선어학회를 수년간 감시를 지속하다가 마침내 1940년대에 탄압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일제가 왜 조선어학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어학회의 항일 투쟁이 우리 역사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2.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내용

1) 한글 운동은 곧 항일 투쟁

일제시대 한글 운동은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녔다. 1930·40년대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¹⁾은 일제의 일본어상용교육에 맞서 조선어와 한글수호를 위해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한 점이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부터 일본어 보급을 확대하였고, 총독부 시기에는 일본어 상용과 일제말기 조선어와 한글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맞서 민간 학술단체인 조선언문회와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와 한글을 연구하고 보전하며 유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 이 시기의 한글 운동 용어는 ‘한글’이라는 조선글자만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운동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 한글 운동이라는 용어는 당시 주시경의 노선을 이은 한글 운동의 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로 일본어 상용과 대비되는 의미가 있다. 이극로와 최현배의 글과 저술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극로는 “한글 운동은 조선말과 글을 과학화하는 것이니, 곧 그것을 통일하며, 널리 알리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이극로, 『한글 운동』, 『신동아』, 1935, 1, 84쪽.) 최현배는 “조선말과 조선글의 과학적 연구와 통일과 및 보급을 목적인 주(周) 선생의 한글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최현배, 『한글의 바른 길』, 조선어학회, 1937, 17쪽.) 이 용어가 일제시기의 역사성을 반영한 용어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어학회가 전개한 한글 운동은 우리민족의 말과 민족문자인 한글을 연구·정리·보존하여 민족과 민족성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운동이었기에, 이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이요 언어독립운동이었다.

일제시대는 우리의 말과 글인 조선어와 한글이 침략자에게 국어와 국문의 지위를 빼앗긴 시기였다. 그 결과 대한제국기의 국어였던 조선어는 이 시기에 방언 또는 지방어로 전락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며 일본어를 국어로 위치 지워 보급하였다. 그들은 일본어 보급을 통해 한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언어인 조선어를 공교육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자 했다. 식민 지배 초기에 일제는 조선인의 반발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조선어과목을 존치시켰으나, 이 과목은 일본어 보급을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였고, 전시 파쇼기인 1938년부터는 조선어과목까지 폐지하였다. 전체 일제 시기 동안 조선의 민간인에게도 일본어를 보급하고자 일어강습소를 증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학교·회사·공장·각종 단체에서의 일어 상용을 장려하고 강요하였다.²⁾

일제의 조선말글 말살 정책에 맞서 조선어연구회를 이은 조선어학회는 민족운동의 연장선에서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합법적 공간을 이용하여 간접적 소극적인 방법으로 언어투쟁을 전개하였다.

대한제국시기 국어의 확립에 기여한 주시경의 노선을 이어받은 한글 운동가측은 일제시대에 조선민중에게 한글 보급운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족의 민족어인 조선어라는 모어에 그 규범을 수립하여 장차 도래할 민족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임원들이 일본어를 국어로 인식하지 않고 조선어를 국어의 위치로 회복하기를 염원하여 그 규범을 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신문(諷問)을 통해 조선어학회 임원들이 조선민족 고유의 언어인 조선어를 통해 민족 내의 의사와 감정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양성시키고, 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인 한글을 통해 민족문화를 성립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적 우월감을 고취하여, 조선민족을 발전시키며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양성에 기여하는 어문관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³⁾ 일제의 판결문을 통해 우리는 조선어학회 회원의 우리말글의 관점에 반제국주의적 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언어동화정책에 반역하고 있다고 여겨 탄압하였던 것이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언어관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 『한글』지에 게재되어 있다.

2) 카와사키 아키라(川崎陽), 『식민지 말기 일본어 보급 정책』,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연세국학총서 9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해안, 2007, 298쪽.

3)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 종결 결정문』(1944, 9, 30. 함흥지방법원 판결), 『나라사랑』42, 1982 봄호, 외솔회, 135-136쪽.

일본어를 국어로 인정하지 않고자 한 신영철(申瑛澈, 1916-?)⁴⁾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학회의 회원이었던 신영철은 일제가 조선인을 鮮人(신인)으로, 조선어를 鮮語(신어)로, 언문(諺文)으로 즐겨 부르는 것을 비꼬며, 그렇다면 ‘일본어는 「본어」인가’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민족사회의 고유한 명칭과 이름대로 하여 「조선인」·「조선어」로 부르자고 주장하였다. 또 일제가 사용하는 「언문」⁶⁾이라는 말을 폐지하며, 이 말을 사전에서 뽑아내며, 이 말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조선어」를 「한글」로 일제히 고치자고 주장하였다.⁷⁾ 또 다른 글에서 그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모두 그 민족 국가의 순전한 말로 쓴다고 하면서, 외국어로부터 우리말을 독립시키자고 역설하였다. 그의 주장은 조선인은 조선어만을 쓰자는 것이다.⁸⁾ 일본어도 영어와 독일어처럼 외국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선어의 영구적인 유지를 통해 잃어버린 국어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한 이극로는 조선민족 구성원의 수천만인이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들을 가르칠 한글 사범강습소를 서울에 상설하고, 전국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에 한글 사범강습회를 개최하여 교원이나 일반인에게 단기 사범강습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한글 사범강습소 출신이나 단기 한글 사범강습회 출신들이 한글을 모르는 대중들에게 한글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⁹⁾

이극로의 이러한 주장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일제가 허락하지 않을 내용이었다. 1935년 이후 일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한글보급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전

4) 1938년 10월 비밀결사 무명구름사건으로 검거된 신영철은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였다고 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9년 4월 19일 일제의 검찰에 송치·기소되었고, 1940년 1월 17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는 회원들에게 조선의 독립 달성은 민족문화의 재건에 있는데, 그 방법은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노력하는데 있다고 역설하였다. (『관결 소화 14년 刑公제659호-1940, 1, 17 이홍채·신영철 등 판결문』;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에 있음.) 검거되기 전까지 신영철은 『한글』지에 1934년에서 1938년까지 11편의 글을 기고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필자가 2012년 2월 3일에 신영철의 독립운동 관련 공적조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다. 심사에 통과되어 신영철은 금년 8월 15일자로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5) 일제는 식민지 초기부터 조선어(한글)를 격하시켜 鮮文, 鮮語로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 편,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938. ; 이병근,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목적과 그 경위』, 『진단학보』제59호, 1985, 140-142쪽 재인용.)

6) 일제는 우리말 철자법을 조선어철자법이나, 한글 철자법으로 호칭하지 않고, 언문철자법으로 불러 사용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양반층이 훈민정음을 언문(상말 글자)로 천시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언문이라는 용어에는 조선글인 한글을 멸시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7) 申瑛澈, 『『鮮語』를 『朝鮮語』로』, 『한글』16, 1934, 9, 7쪽. 다만 신영철이 ‘조선어’를 ‘한글’로 고치자는 주장은 ‘언문’을 ‘한글’로 고치자는 의미로 썼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8) 신영철, 『言語의 獨立』, 『한글』17, 1934, 10, 7쪽.

9) 이극로, 『조선어문정리운동의 금후계획』, 『신동아』, 1936, 1, 158쪽.

시과쇼체제기에 들어가 일본어상용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극로의 위와 같은 구상은 해방 이후 곧바로 실현되었다.¹⁰⁾ 해방된 조국이지만 국어교원이 양성되어 있지 못하였기에, 조선어학회에서는 사범 강습회를 개설하여 초중등교원을 양성하였던 것이다.¹¹⁾

2) 민족어 규범 수립 운동

1929년 귀국 후 이극로는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삼대 공작으로 그는 한글 맞춤법의 통일, 표준어의 사정(査定),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을 강조하였다. 이 3대 공작의 추진은 조선민족의 언어인 조선어의 규범을 세우는 운동이었다.¹²⁾ 구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의 언어 규범 수립 운동인 국어철자법의 통일, 표준어의 제정, 외래어 표기법의 확정, 국어사전의 편찬은 근대 민족국가의 국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일제 식민통치 당국은 이러한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하나로 통일된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다든지, 조선어의 표준말을 확정한다든지, 조선어로 된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한다든지, 한글로 서술된 조선어사전을 편찬할 의도가 없었다.¹³⁾

이에 주시경의 노선을 계승한 조선어학회는 한국 민족의 언어 규범을 세우는 사업을 자신들이 하고자 하였다.¹⁴⁾ 이는 근대 민족국가의 국가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개의 민간학술단체가 대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어학회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다.

10) 성음론, 문법론, 표준어, 외래어, 약어, 구절법 등 국어교육을 조선어학회 임원이 담당하였다.

11) 조선어학회의 임원들은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국어교원을 양성하였다. 1차 양성은 1945년 9월 11일에서 26일까지, 2차 양성은 같은 해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까지, 3차 양성은 1946년 1월 9일에서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이극로는 2차 양성 기간에 「국어」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3차 양성 기간에 「성음론」을 주제로 강의하였다.(『한글』94, 1946, 4, 68쪽.) 이를 통해 조선어학회가 양성한 교원이 1,836명에 달하였다. 이들이 전국의 학교에 배치되었다.(한글학회, 『한글학회50년사』, 1971, 283쪽.)

12) 그는 한글 운동의 진행 방향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그의 글이 있다. 「한글 운동」, 『신동아』, 1935, 1; 「조선어문 정리운동의 금후」, 『한글』제29호, 1935, 12; 「한글 발달에 대한 회고와 및 신전망」, 『조선중앙일보』, 1936, 1, 1(상)-1, 4(하). ; 「조선어문정리운동의 금후계획」, 『신동아』 1936, 1; 「조선어문정리운동의 현상」, 『사해공론』, 1936, 5. ; 「한글통일운동의 사회적 의의」, 『조광』, 1936, 11.

13) 다만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언문철자법 통일에는 관심을 가졌다.

14) 최경봉,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31, 2006, 8, 420쪽.

첫째로,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였다. 조선어연구회(뒷날 조선어학회)에서는 조선 총독부의 언문철자법이 미흡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한글 철자법을 제정하고자 1930년 12월 13일부터 1933년 10월까지 만 3년 동안 추진하였다. 총 433시간에 125차례 회의를 하여 통일안을 완성하였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교과서의 서술도 여기에 맞추었다. 해방 뒤 이 통일안이 모태가 되어 남북의 철자법에 사용되고 있다.¹⁵⁾ 이처럼 민족국가의 국어의 철자법을 식민지시기에 민간학술단체인 조선어학회가 확정하였다는 점에 민족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로, 조선어 표준말을 사정(査定)하였다. 합리적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표준어를 정하여 써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표준어의 형성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 표준어 제정안이 기본이 되어 해방 뒤 남북한에서 바로 적용되었고, 민간에 널리 홍보되었으며, 남북 쌍방의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국어교육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셋째로, 외래어 표기법을 통일하였다. 일제시기 사람마다 달리 쓰던 외래어 표기를 조선어학회가 통일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에 굴하지 않고 민족어인 조선어와 민족문자인 한글의 독자성을 고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외래어 표기법도 주권국가가 해야 할 일이었다.

요컨대 민간학술단체인 조선어학회는 민족어의 3대 규범집을 완성하여 민족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¹⁶⁾ 이 규범집은 해방 후 남북한에서 국어규범집으로 자리를 잡았다.

3) 민족어 대사전 편찬

조선어연구회 회원들은 “조선말 사전이 있는 한 조선말과 조선 겨레는 없어지지 않는다.”¹⁷⁾는 신념을 가지고 ‘조선어 사전 편찬’을 준비하였다.

15) 1945년 9월 13일에 출판(제11판)되어 나온 후, 1946년 2월 10일까지 61판을, 1949년 10월 9일까지 235판을 찍어내었다.(이용호, 『미군정기의 한글 운동사』, 141쪽, 249쪽.) 1946년 9월 8일에 맞춤법 통일안 일부를 개정하였고, 1948년 한글날에는 한글 맞춤법 전문을 순한글로 바꾸어서 펴냈다. 남한의 경우 1946년과 정부 수립 뒤 1948년 『한글 맞춤법통일안』이 그대로 채택되었고, 1980년 『한글 맞춤법』으로 계승되었다. 한편 북한의 경우 1948년과 1954년의 『조선어철자법』으로 이어졌다.

16) 민족어 3대 규범집은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조선어 철자법 통일안)』(1933, 63쪽),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239쪽.), 『외래어표기법 통일안』(1941, 69쪽.)을 말한다.

1929년 이극로는 사전편찬운동을 거족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하여 발기인(108명)에 좌익과 우익을 망라하여 구성하였다. 그는 1927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조선의 독립투쟁』에서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모두 협동하여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공동의 적에 맞서 협동 전선을 형성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¹⁸⁾ 그는 한국의 민족운동의 방향을 좌우익 협동전선의 시각에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그가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좌우익을 망라하여 거족적인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그는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 사업(1933)과 표준어 사정 작업(1936)도 이념을 떠나 민족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글 운동은 합법적 공간 안에서 전개된 민족협동전선운동이기도 하였다.

조선어학회는 1940년 3월 7일에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조선어사전 출판허가원을 제출하였다. 조선어사전의 용어로 16만 어휘, 삽화 3천여 매를 완성하였다.¹⁹⁾ 『조선어대사전』²⁰⁾ 원고는 많은 부분 일제로부터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출판 허가를 받았다.

조선어학회는 1942년 봄부터 원고 일부를 대동출판사에 넘겨 조판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어휘를 정리하여 그 원고를 1942년 말까지는 인쇄소로 넘기기로 하였다.²¹⁾ 그러나 1942년 10월 1일 일제가 자행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되었다. 일제는 사전원고와 서적들까지 전부 압수하였다. 일제는 『조선어대사전』의 출판을 막고자 조선어학회의 관계자를 구속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에 일제 식민통치 당국이 식민지의 언어와 문자로 쓰인 『조선어대사전』을 편찬해 줄 리가 만무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어대사전』의 편찬 사업은 근대민족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이극로를 중심으로 민간 학술단체인 조선어학회가 대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일제의 일본어상용정책과 조선어말살정책에 맞서 조선어학회가 조선어와 한글을 영구히 유지하고자

17) 이응호, 「조선어 학회의 창립과 그 업적」, 『어문각』, 1980, 55쪽 인용.

18) KOLU LI, *Korea und sein Unabhängigkeitskampf gegen den japanischen Imperialismus*, BERLIN, 1927, 16쪽.

19) 「조선말광 完成在邇 四月까지는 出現」, 『조선일보』, 1939, 1, 18; 「조선어사전 완성단계에! 일부 출판허가신청」, 『조선일보』, 1940, 3, 8, 2면.

20) 「조선어학회가 총독부 도서관에 제출한 우리말사전의 제목은 『朝鮮語大辭典』으로 되어 있다. 사전 원고의 원본 표지에도 『朝鮮語大辭典』으로 쓰여 있다.(『조선어사전완성단계에! 일부, 출판허가신청』, 『조선일보』, 1940, 3, 8.) 이 명칭을 역사적 용어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최현배도 ‘조선말 큰 말광(朝鮮語大辭典)’으로 기술하였다.(『한글의 바른 길』, 조선어학회, 1937, 40쪽.)

21) 이응호, 「조선어 학회의 창립과 그 업적」, 『어문각』, 1980, 57쪽 참조.

하는 민족운동의 연장선에서 『조선어대사전』의 편찬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민족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 우리 말글 보급 운동

이극로 등 조선어학회의 임원들은 민족어 규범 수립 운동뿐만 아니라 한글 보급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임원들은 대중 강연을 통해 조선 민중에게 한글을 보급하여 문맹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즉 민족운동 차원에서 한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선어학회는 자체적으로 강습회를 주최하여 한글을 보급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어학회가 후원을 하는 형태로 한글 강습회에 많이 참여하였다.²²⁾ 첫째로, 1931년에서 1934년까지 동아일보가 주최한 ‘조선어 강습회’를 조선어학회가 후원하였다. 둘째로 사회단체의 초청을 받아 조선어학회가 후원하여, 학회의 회원들이 한글 강연을 하였다.

한편으로 1934년 조선어학회만이 별도로 기관지 『한글』에 ‘하기학생 계몽 운동호’ (『한글』 14호)를 마련하여 한글 교재를 해설하고, 하기 한글 지상(誌上) 강습회 (『한글』 15호)도 상세히 다루어, 한글 보급에 앞장섰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극로 등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한글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자, 일제는 자신들의 조선어말살 정책아래 한글강습회·한글날 기념 행사·한글 교육·한글 서적 출판 등을 금지시켰다. 특히 일제는 1935년부터 전국적인 단위의 한글강습회를 전면 금지시켰다.

3. 일제의 조선어학회 탄압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언어독립운동이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정책인 국어(일본어) 상용정책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선어학회를 해산해야 조선민족을 말살하기가 수월하다고 여겼다. 식민지 국가의 고유 언어가 없다면 식민지 국가와 민

22) 이 사업에는 조선어학회 회원이 주동자였고, 민간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였다. 오직 일제만이 이 일을 방해하였다.(리만규. 「국문 연구 단체의 연혁」, 『조선어연구』, 1949, 창간호, 9쪽 참조.)

족은 말살되기 때문이다. 일제의 판단은 정확했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을 문화적 민족운동이고 심모원려한 민족 독립운동의 점진 형태로 규정하여 조선어학회 관련자를 검거하여 탄압하였다.²³⁾ 일제의 고등계 형사뿐만 아니라 판·검사도 조선이 수많은 조선어를 조선어사전 편찬과 같은 형태로 보존하면 조선민족은 영구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말글을 유지하여 조선민족을 영구히 보존하는 조선어학회를 해산하고 그 관련자를 탄압 하였던 것이다.

일제가 기필코 조선어학회의 인사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자 했음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제의 형사들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1차가 아닌 무려 6·7차나 침입하여 수색하였다²⁴⁾는 점과 둘째, 함흥경찰서의 형사들이 조선어학회의 대표인 이극로를 3일 동안 물고문을 하여 7차례나 기절시켰고, 무려 12차례나 비행기 태우기라는 고문도 하여 초죽음을 만들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만행을 자행하여서라도 일제 식민통치 당국은 조선어학회를 제거하고자 하였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

일제는 1942년 검거하기 전인 10여 년간 일관되게 조선어학회가 다른 민족주의 단체와 달리 ‘편협한 민족 관념을 배양하고, 민족문화의 향상과 민족의식의 양양’을 기도하여 오면서, 첫째로 민족주의 진영에서 단연 불발(不拔)의 지위를 점하고 있고, 둘째로, 민족주의단체의 사이에 있어서 홀로 민족주의의 아성을 사수한 것으로써 중시하게 됨에 이르렀고, 셋째로, 어느 것이나 한글신문 등의 열의 있는 지지 아래에 조선인 사회에 이상(異常)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넷째로, 조선어사전 편찬사업과 같은 것은 광고(曠古)의 민족적 대사업으로서 촉망돼 있었고²⁵⁾, 다섯째, ‘본 건은 10여 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일반사회에 극히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²⁶⁾으로 조선어학회의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어

23) 일제는 “민족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소위 어문운동은 민족고유의 어문의 정리통일보급을 도모하는 하나의 문화적 민족운동임과 동시에 가장 심모원려(深謀遠慮)를 품은 민족독립운동의 점진형태”로 규정하였다.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종결 결정문』(1944, 9, 30. 함흥지방법원 판결), 『나라사랑』42, 1982 봄호, 외솔회, 135쪽.) 또한 그들은 아일랜드와 폴란드가 민족어의 유지와 민족어의 사용운동을 전개하여 끝내 독립국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昭和二十年 刑上 第五九號 判決』(1945, 8, 13. 고등법원 판결 ; 국가보훈처 공훈전시자료관 자료), 647쪽; 『조선어학회사건 일제의 최종 판결문 전문』, 『동아일보』, 1982, 9, 7, 6면.) 이처럼 일제는 언어투쟁도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판결하였다.

24) 『옛날 독자여러분께』, 『한글』 94, 1946, 4, 38쪽.

25) 『조선어학회사건 예심종결 결정문』, 136쪽.

26) 『조선어학회사건 최종 판결문』, 『동아일보』, 1982, 9, 8.

학회를 민족주의자들의 소굴로 파악하고 있었다.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수년간 지켜본 일제는 감시와 탄압을 이어가다가, 조선어학회의 회원을 검거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조선어학회의 회원이 연루된 작은 사건²⁷⁾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하게 되었다.

1942년 10월 1일 일제경찰에 의해 이극로·이중화·장지영·최현배·한징·이운재·이희승·정인승·김윤경·권승옥·이석린 등 11명이 서울에서 검거되었다. 이극로와 정인승과 권승옥만 함흥경찰서로 데려갔다. 나머지는 홍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3주일 만에 이극로와 정인승과 권승옥을 홍원경찰서로 합류시켰다.

일제 경찰(함남 경찰부 소속의 오오하라(朱炳薰))도 이극로가 미국에서 “귀국하여 한글 운동을 통해서 독립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말했다”²⁸⁾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 말은 독립운동 차원에서 한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이극로의 의지 표명이었다. 1942년 함흥경찰서에서 이극로가 진술한 이 발언은 그가 미국에서 행한 연설과 같다.

이극로는 1928년 6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동포들에게 행한 강연에서 “국어방면에서 일을 하리라.”²⁹⁾라고 포부를 밝혔다. 1928년 8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 앞에서, 그는 연설을 통해 모어를 발전시켜 민족과 민족성을 보전할 방법으로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우리말을 국문으로만 쓰며 우리글을 가로로 쓰자고 주장하였다.³⁰⁾ 같은 해 10월 1일 하와이 강연에서 자신은 귀국하여 “독립운동에 전심 갈력하겠다.”³¹⁾고 밝혔다. 그가 밝힌 국어독립운동은 바로 한글 운동을 지칭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신한민보』에 실린 이극로의 행적은 일제 경찰에 발각되지 않는 듯하다.

이극로의 경우만 민족의식의 고취를 통한 민족혁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언어독립운동 차원에서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다.³²⁾

따라서 일제는 이러한 이극로의 진술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조선어학회와 그 한

27) 정태진이 홍원경찰서에 소환된 일을 가리킨다. 김계곤, 『조선어학회 수난의 전말』, 『조선어학회 수난 50돌 기념 글모이』, 한글학회, 1993, 16쪽.

28) 김도연, 『나의 인생고백서』, 상산회고록출판동지회, 1965, 139쪽. 오오하라가 말하는 대로 김도연도 미국에서 이극로와 만나 독립운동을 모의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같은 책, 140쪽.)

29) 『리극로박사의 국어 강연』, 『신한민보』, 1928, 7, 5.

30) 『국어가 민족의 생명, 가장 시급한 문제』(이극로 박사의 국문 강연문), 『신한민보』, 1928, 8, 30.

31) 『리극로박사 하와이에서 귀국』, 『신한민보』, 1928, 10, 11.

32) 이극로, 『고투사십년』, 63쪽.

글 운동을 독립운동을 획책한 단체요 활동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나머지 회원들(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등)은 조선어학회를 통해 우리 말글을 정리, 통일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어를 보존하려는 운동 정도로만 한글 운동을 인식하였다.³³⁾

회원 가운데 정인승은 ‘사전편찬과 조선독립과는 별개 문제다.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원하기는 하지마는 합법적이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종일관의 주장’이었다고 밝혔다.³⁴⁾ 김선기와 최현배도 사전편찬의 목적이 독립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³⁵⁾ 장지영도 조선어학회는 문화운동을 한 것이지 독립운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³⁶⁾ 김윤경은 “조선어학회와 임정이 연락한 일이 없다, 조선어학회로 개명할 때에 독립 목적을 상의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³⁷⁾

이극로는 자신들이 전개한 한글 운동이 ‘조선 독립운동의 근본’이어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술하였다.³⁸⁾

이상과 같은 회원들의 답변을 살펴볼 때, 이극로를 제외하고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김윤경, 김선기, 장지영 등도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이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제는 자신들의 문초에 강력히 부인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석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의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³⁹⁾

33) 최현배는 이 사건을 일제가 ‘죄명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맞도록 죄상을 꾸며대는 것이었다. 사실(事實)에 없는 것을 토하게 하려고 고문을 하였다.’라고 기술하였다.(최현배, 『한글과 나와 감옥』, 『녹십자』, 1947, 5, 17쪽.) 이희승은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이루어졌고, 허구(虛構)의 범법사건이었다.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워 치안유지법 제1조로 얹어매는 것이었다.’로 기술하였다.(이희승, 『조선어학회사건』(2), 『어문연구』9(3-3), 1975, 432쪽, 433쪽, 437쪽.) 정인승은 이 사건을 정태진의 자백서와 일치되도록 억지 조작하여 탄압한 사건으로 기술하였다.(정인승, 『민족사로 본 조선어학회 사건』, 『나라사랑』42(12-1), 외솔회, 1982, 20쪽.) 최현배는 “우리말, 우리글을 더 연구하고 정리하며, 이를 가르치고 보존하는 것”이 한글 운동이라고 보았다.(『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정음사, 1953, 5쪽.)

34) 정인승, 『항일 투쟁회고(16)조선어학회사건(하)』, 『경향신문』, 1962, 8, 27.

35) 김선기, 『검은 구름-조선어학회 사건』, 『나라사랑』42(12-1), 외솔회, 1982, 163쪽. 한편 나까노 예심판사가 함흥형무소 조사실에서 김도연을 불러다 심문하면서 ‘조선어학회에서 한글사전을 만드는 것은 궁극에 가서는 조선독립을 목표로 한 것이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3, 4차례 거듭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조서를 시인시키려고 했다고 한다.(김도연, 『나의 인생고백서』, 상산회고록출판동지회, 1965, 146-147쪽.)

36) 김선기, 위의 글, 164쪽.

37) 김윤경, 『조선어학회 수난기』, 『한글』94, 1946, 60쪽.

38) 이극로, 『머릿말』, 『한글』94호, 1946, 1쪽.

39)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니시다 판사는 이극로에 징역 6년형을, 최

조선어학회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 33인이 무슨 활동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첫 번째,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 관련자 21인을 검거하였다. 조선어학회의 조직과 관련된 인물, 조선어사전편찬회 관여 인물, 한글 맞춤법 통일안 관련자, 조선어 표준말 사정 관련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관련자, 한글 강습회 관련자, 한글 날 행사 관련자, 기관지 『한글』 관련자, 『조선어대사전』 편찬의 전임위원 등이 해당하였다. 이극로, 이만규, 정열모, 이중화, 권덕규, 권승욱, 김선기, 김윤경, 윤병호, 이강래, 이병기, 이석린, 이운재, 이희승, 장지영, 정인승, 정태진, 최현배, 한징, 정인섭, 안재홍 등이다.

두 번째, 조선어사전편찬의 후원회원 8명을 검거하였다. 이우식, 이인, 장현식, 김도연, 김양수, 서민호, 신운국, 김종철 등이다.

세 번째, 조선어학회의 자매기관 관련자 3명을 검거하였다. 조선기념도서출판관과 양사원에 관련된 이은상과, 양사원과 관련 인물인 서승효, 안호상 등이다.

네 번째, 세계피압박민족대회(1927)에 참여한 1명을 검거하였다. 김법린의 경우다. 이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그가 이극로와 이 대회에 참석하여 일제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김준연의 여비 지원을 받아 이극로도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극로의 권유로 김법린도 조선어학회에 가입하였다.

이상을 통해 보면 조선어학회 사건은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조선어사전 편찬을 위해 재정을 후원한 인사, 조선어학회의 자매기관 관련자, 세계피압박민족대회 관련자까지 처벌하였다는 점에서 이채를 띤 민족운동이었다.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조선어학자들을 감옥에 투옥한 이유는 조선어학회가 언어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을 1930·40년대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독립운동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일제가 일으킨 조선어학회 사건이 남긴 역사적 의미는 첫째 일제가 조선민족 말살정책의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었다는 점, 둘째 조선어학회가 언어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반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민족운동사에서 조선어학회가 차지하는 위상은 제대로 평가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세

현배에 징역 4년형을, 이희승에 징역 2년 6개월형을, 정인승에 징역 2년형을, 그리고 정태진에 징역 2년형을, 김법린과 이중화와 이우식과 김양수와 김도연과 이인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력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하게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조선어학회의 학자들 입장에서라도 일제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었다.

4.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민족사적 의미

이극로는 1945년 8월 17일 함흥감옥에서 나온 뒤 일제의 언어정책을 다음과 같이 신랄히 비판하였다.

우리의 문자와 언어를 없이하여 그 민족성을 말살하려던 일본의 죄악은 모든 죄악 중 가장 큰 죄악일 것이다. (조선어학회 이극로)⁴⁰⁾

이러한 일제의 조선의 민족문화 박멸 정책에 맞서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어학회라는 학술 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가인 박은식과 신채호가 국사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연구하고 보급하고자 했듯이 국어를 국권회복의 일환으로 인식한 주시경의 유지를 계승한 이극로·이운재·신명균·최현배 등 조선어학회의 민족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어와 한글을 보존하면 언젠가는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 즉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극로가 조선어학회를 이끌어 나갔고, 그가 동료들과 함께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9년 귀국하면서 장덕수에게 자신이 ‘코리아 디셔너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에게 한글 운동은 민족운동의 범주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의 민족운동에 대한 인식은 “일본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이 우리를 자유의 삶으로 이끄는 마지막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⁴¹⁾에까지 도달해 있었고, 한국민족이 일제와 싸워 승리하여 일본이 한국에서 물러나든지, 한국 민족이 패배하여 계속 고통을 받든지 하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과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민족운동의 연장선에서 그는 한글 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극로의 한글 운동에 대한 의도는 “독자적인 언어와 문자, 그리고 문화를 가진 민족을 말살시키거나 동화하고자 했던 일제의 시도가 그 실현이 불투명한, 가소로운 정치적 꿈에 지나지 않”⁴²⁾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40) 이극로, 『축사-민족의 반려가 되라』, 『민성』1권 1호, 1945, 12.

41) 『THE KOREAN PROBLEM(조선의 문제)』, 1927, 8쪽. ; 이 자료는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일제의 압제 아래서 조선민족에게 언어의 멸망이 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언어문제가 곧 민족문제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 어문운동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민족혁명의 기초를 삼고자했다. 그래서 그는 한글 운동이 일어나야 함을 동지들에게 역설하였던 것이다.⁴³⁾ 최현배도 ‘국어 수호는 곧 민족 수호’라는 언어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한글 운동에 참여하였다.⁴⁴⁾ 이운재는 ‘말과 글은 민족과 운명을 같이한다. 일본이 조선의 글과 말을 없애는 동화정책을 쓰고 있으니,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글과 우리말을 아끼고 다듬어 길이 후세에 전해야 한다. 말과 글이 없어져 민족이 없어진 가까운 예로 만주족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글을 써 두고 조선어 사전을 편찬해 두면,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후에 이것을 근거하여 제 글과 말을 찾아 되살아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고 또 민족 운동이 되는 것이다.’⁴⁵⁾라는 민족주의 언어관을 가지고 한글 운동에 헌신하였다.

국내에 있으면서 이극로는 1942년 함흥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14년간 우리 말글을 통일하고 보급하며, 조선어사전의 편찬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민족적인 사업을 조선어학회의 동지들과 함께 이루어낸 것이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조선어문의 정리·통일과 이를 보급하고자 했으며, 이를 일제가 막자 민족어인 조선어를 사전으로라도 남겨 보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1930·40년대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이 가지고 있는 민족사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민족어인 조선어와 민족문자인 한글을 영구히 보전하고 유지하고자 한 데에 있다. 다음은 이극로가 간명직절하게 민족과 언어와의 관계를 설명한 글이다. “民族이 있을진댄 말이 있을 것이요, 말이 있을진대 반드시 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정신과 생명이 있을진댄 그 민족은 영원불멸할 것이니, 또한 행복을 필연적일 것입니다”⁴⁶⁾ 민족의 정신과 생명인 말과 글이 있으면 민족은 영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극로

42) 이극로, 『조선의 독립운동과 일본의 침략정책』(Unabhängigkeitsbewegung koreas und japanische Eroberungspolitik), 1924, 32쪽.

43) 이극로, 『조선어학회와 나의 반생』, 『고투사십년』, 1947, 을유문화사, 63쪽. 이와 비슷한 이인의 증언이 있다. 그는 “어학회에서는 말과 글과 열은 「크르」이니 「크르」을 없애버리고 나면 민족이 영구히 없어지고 만다고 하였다”라고 기술하였다.(이인,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학출판부, 1974, 120쪽.)

44) 김선기, 『환산 이운재 어른을 기리며』, 『한글』179, 한글학회, 1983, 163쪽.

45) 이석린, 『한글지와 이운재 선생』, 『나라사랑』13, 1973, 57쪽.

46) 이극로, 『한글 반포 5백주년 기념일을 맞으며』, 『학생신문』제13호, 1946, 10, 9, 2쪽.

는 한글 운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전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가 조선지배 동화정책으로 추진한 조선어의 말살노선에 대해 이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은 전개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의 한글 운동은 일제의 동화 정책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그 탄압은 불가피하였다.

둘째는, 민족국가건설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 데에 있다. 제 나라의 고유 언어인 조선어와 고유 문자인 한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급함으로써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며, 이를 영구히 유지하는 것은 민족 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극로는 “언어를 순화하고 발달시킨다는 것은 민족문화를 발달시키는 것이겠으며 언어가 망한다면 민족이 망하는 것”⁴⁷⁾으로 언어를 인식했다. 따라서 그에게 민족고유의 생활방식과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독립국가 건설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근대 민족국가에서는 근대 시민을 양성하고자 문맹을 타파를 위해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자국어 보급을 필수적으로 하였다. 그는 한글 운동을 통해 민족어의 유지와 민족의식을 고취해 가면서 다가올 독립에 대비하여 미리 그 기초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그는 일제시대에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조선어문을 정리·통일·보급·유지하는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맺음말

조선어학회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제정, 표준어의 사정,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완성, 조선어사전의 편찬 등을 추진하여 완수하였다. 이런 일들은 구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적 사업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상태인 조선의 경우는 그 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조선어학회는 주권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학술단체 자격으로 성취해냈다.

조선어학회는 이러한 사업들을 식민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장차 독립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내다보며 민족적 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완수해냈다. 조선어학회의 이러한 일련의 업적들은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일구어낸 성과인 만큼, 민족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이 업적들이 해방 후 남북한

47) 이극로, 『국가·민족·생활·언어』, 『생활문화』, 1946, 2, 16쪽

언어정책(국어정책)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선어학회가 1930·40년대에 이루어놓은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조선어대사전이 응용되어 해방 정국기와 남북의 두 정권에서 국어규범과 국어사전 및 국어교과서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대 때문에 최근 2,000년 이후 겨레말 큰사전의 편찬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⁴⁸⁾ 이와 같이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은 해방 뒤 남북의 정권 모두에 계승·발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해방 정국기에 조선어학회는 첫째로 문자생활에서 한글전용 원칙을 관철시켰다. 봉건왕조의 잔재인 한자의 사용을 반대하였다. 일제 식민주의 언어학의 잔재인 국한혼용체의 문장을 청산하고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도록 미군정의 국어정책에 반영시켰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에는 국회로 하여금 한글전용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국어정책의 골격을 세웠다.

둘째로 일제와 싸워가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민족어 3대 규범을 국어규범(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 그리고 외래어표기법 통일안)으로 전환시켜 해방 후 독립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어의 혼란을 막아주는데 기여하였다.

셋째로 일제의 혹독한 탄압 때문에 발간하지 못하였던 『조선어대사전』을 『조선말 큰사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발간하여 대표적인 국어대사전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넷째로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하는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어를 정화하였다.

해방 뒤 대한민국에서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에 항거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한 한글학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포상함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였다. 대다수가 포상되었다. 다만 해방 정국기 북측 정권에 참여한 이극로, 정열모, 이만규 등 국어학자와 한글 운동가에 대해 포상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영토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 체제를 떠나 일제시기에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사들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48) 현재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운동은 일제시대 이극로가 주도한 조선어대사전 편찬운동을 이어받은 민족문화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서 예상되는 난관도 일제시대 14년간 고투 끝에 조선어대사전이 완성된 것을 교훈 삼아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계곤, 「‘조선어학회 수난’의 전말」, 『조선어학회 수난 50돌 기념 글모이』, 한글학회, 1993.
- 김도연, 『나의 인생고백서』, 상산회고록출판동지회, 1965.
- 김선기, 「검은 구름-조선어학회 사건」, 『나라사랑』 42(12-1), 외솔회, 1982.
- 김선기, 「환산 이운재 어른을 기리며」, 『한글』 179, 한글학회, 1983.
- 박용규, 「1930년대 한글 운동에서의 이극로의 역할」, 『사학연구』 92호, 한국사학회, 2008, 12.
- 박용규, 「일제시대 이극로의 민족운동 연구-한글 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학과 (한국사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9, 8.
- 박용규, 「조선어학회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공공언어로서의 행정언어』 (2011년 동계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주관, 2011, 12, 2.
- 박용규, 「<자료소개>「국어가 민족의 생명, 가장 시급한 문제」(이극로 박사의 국문 강연문, 『신한민보』, 1928, 8, 30.)」, 『형태론』 13권 1호(2011년, 봄철).
- 이극로, 『고투사십년』, 을유문화사, 1947.
- 이병근,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목적과 그 경위」, 『진단학보』 59호, 1985.
- 이석린, 「한글지와 이운재 선생」, 『나라사랑』 13, 1973.
- 이응호, 「조선어 학회의 창립과 그 업적」, 『어문각』, 1980.
- 이인,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학 출판부, 1974.
- 이희승, 「조선어학회사건」(2), 『어문연구』 9(3-3), 1975.
- 정인승, 「민족사로 본 조선어학회 사건」, 『나라사랑』 42(12-1), 외솔회, 1982.
- 최경봉,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31, 2006, 8.
- 최현배, 『한글의 바른 길』, 조선어학회, 1937.
- 최현배,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정음사, 1953.
- 카와사키 아키라(川崎陽), 「식민지 말기 일본어 보급 정책」,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연세국학총서 9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해안, 2007.
- 한글학회, 『한글학회 50년사』, 1971.
- KOLU LI, *Unabhängigkeitsbewegung Koreas und japanische Eroberungspolitik*, BERLIN, 1924.
- KOLU LI, *Korea und sein Unabhängigkeitskampf gegen den japanischen Imperialismus*, BERLIN, 1927.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1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제 발표 2 || 발표문

일제의 동화 정책과 조선어학회의 항쟁

허재영
단국대학교 교수
h jy435@hanmail.net

1. 들어가기

이 글은 일제의 식민 정책이 갖는 특징과 이에 따른 조선어학회의 저항 정신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10년 8월 29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뒤 1945년 8월 15일까지 진행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는 철저하게 계획된 동화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열강의 식민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일제의 강점 이전부터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연재된 ‘식민 계획’은 일제의 이주민 정책 실행 이후 나타난 최초의 기사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은 조선을 지배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식민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가타[加田哲二](1940)의 『植民政策』(東京 다이アモド社)에는 다수의 ‘식민정책 참고 문헌’과 ‘제국주의’ 관련 저서가 열거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식민 정책’에 대한 관심은 피지배 민족보다 지배의 주체인 제국주의 세력이 더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지배 민족(또는 국가)의 차원에서 식민 정책의 특징을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광복 이후 다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정치·경제,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성격 규명이나 식민사관 극복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는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학, 국어 운동의 차원도 마찬가지이다. 이 분야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연구 성과는 비교적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일제 강점기의 동화 정책과 이에 대한 저항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민중 지향적인 한글 운동 또는 문자 보급 운동의 사상적 기반에 관한 논의나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다종의 문헌 자료 수집 및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일제의 동화 정책과 일본어 보급 이데올로기의 변천,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주체로서의 조선어학회의 활동(한글 운동)을 기술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대 계몽기와 일제 강점기의 신문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식민 정책 변화와 일본어 보급 이데올로기

2.1. 우민화 시기의 동화 정책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정책과 특성에 관해서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근대화와 관련하여 일제 강점기의 영향에 대한 견해 차이는 ‘식민지적 근대성’ 또는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특이한 역사 용어까지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¹⁾, 엄밀히 말한다면 일제 강점기의 식민 정책은 피지배 민족인 우리 민족의 특성을 말살하여 동화(일본 제국의 부속화)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동화 정책은 ‘동등화’가 아닌 ‘노예화’, ‘부속화’라는 특징을 지닌다. 식민 지배의 흐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식민 정책의 핵심은 ‘황국신민화’로 대변되는 ‘노예화’에 있었다.²⁾

1) 식민지적 근대성은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일부 역사학자들의 이론을 수용한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일제 강점기를 해석하고자 한 경향은 나카쓰카[中塚明](1983)을 참고할 수 있다.

2) 일제의 식민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는 짧은 논문에서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식민 동화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동진(1980), 차기벽(1985) 등의 연구서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식민 정책 전개 과정을 통시적으로 간추려 놓은 성과로 유성희·박은경(1998)을 참고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정책의 뿌리는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이후 형성된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본격적인 정책으로 실현된 시기는 1905년 ‘한일협상조약’(일명 을사늑약)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외교권과 치안 유지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시점부터 일제의 식민 정책이 본격화 된다. 이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정치나 교육 분야 등에서 ‘고문’이나 ‘자문’ 또는 일반적인 ‘고용인’ 형태로 일본인이 이주해 오던 것과는 달리 계획적인 ‘식민’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1) 殖民計劃

去 十一日 朝鮮 日日新聞의 對韓 移民經營을 論호는 概意가 如左호니 政府計劃은 盛히 韓國에 農民을 利殖호는 方針이니 韓國은 商業國이 아니오 農業國에 適當함을 知호이라 商業 移民은 無望호는 故로 我國은 農業 移民으로 以호야 方針을 습으니 全韓 面積 八萬二千方里인디 一方리에 平均 人口 二百人 假量을 我國 每方里 三百七十七人에 甚히 僅少호는 移民을 入호는 地積이 莫大호는지라. 然이나 韓民은 天涯孤島에 能히 散布호야 一處에 集호는지 아니호므로써 耕作호는 荒蕪地가 全國 到處에 夥多호는 且 河水의 汎濫을 恐호야 耕地를 拋棄호는 又天然의 灌溉의 利호도 拋棄호는 且 目今 韓國에 耕地가 少僅호는 不得已호는 事實이라 然則 我邦民은 堤防을 築호고 溝渠를 穿호야 現今 所謂 荒蕪地를 耕作호는진디 全羅 黃海 平安 各道에 最肥沃호는 廣漠경地를 現出호는기 容易호는 뿐 아니라 韓人이 耕作호야 天然沃土를 畊는 所謂 有地도 其價格이 低廉호는 故로 我方人이 夢想에도 不及호는 事實이라 故로 韓에 對호야 農民移住를 獎勵호는 實로 我方方針에 得要호는 것이로다 韓國政府는 外人의 土地 所有權을 不許호는 此點은 一時 我 移民의 非不是 多少 躊躇이나 實則 毫無差悶이로다. -『대한매일신보』 1906.1.18.-1.21. ‘잡보’

(1)은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의 보호 아래 진행된 일제의 식민 정책의 특징을 보여준다. 을사늑약에서 천명한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식민의 궁극적인 목표는 토지 및 인력 수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908년 9월 동양척식주식회사³⁾를 설립한

이에 따르면 일제의 동화 정책은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민족적 특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박봉배(1987)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교육을 ‘우민화 교육, 노예 교육, 동화 교육’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또한 이 시기 교육 정책이 식민 정책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3) 통감시대 토지 수탈 기구는 동양척식회사였다. 이 회사는 1908년 3월에 시작하여 9월에 설립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일본은 이 회사가 등장하기 전부터 토지 수탈 방법을 강구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는 지속적으로 ‘이민 문제(移民問題)’와 관련한 논설을 신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07년 10월 7일과 8일자에 연재된 ‘移民於韓國’이다. 이 논설에서는 일본 허랄드 신문에서

이후 일제의 이민 정책은 더욱 심해졌는데, 1909년 12월에는 드디어 친일 이익단체인 일진회로 하여금 ‘합방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 선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所謂 一進會의 合邦 聲明書 全文

(前略) 試思호라. 國民 二千萬口의 目前 岌業호 現狀이 果然 何如호노. 欲生不得生호며 欲死不得死호야 奴隸 犧牲의 悲境에 墮落호 今日에 坐호야 過去를 推호고 將來를 思호지면 前途가 茫蒼호고 晨光이 熹迷호 感念이 豈無호리오. 此는 天의 不恤호도 不是호 人의 自取라 謂호지니 甲午에 日本이 日清戰役을 起호야 巨億의 戰費를 消호고 累萬의 戰士를 喪호야 淸國의 羈絆을 脫却호고 我韓의 獨立을 確有호였거날 政治를 濁亂호고 好誼를 排擊호야 此萬世基礎를 善守키 不能호도 我韓의 自取호 畢竟 日露戰爭의 因果를 媒介호야 日本의 損害가 甲午에 十倍나 生호를 不顧호고 露人의 虎口에 一塊 肉을 免케 호고 東洋 全國의 平和를 維持호였거날 (중략) 今日은 何日인고. 外交 一款은 既히 讓與호 結果가 有호거니와 財政이 我에 在호는가 通信이 我에 在호는가 法章이 我에 在호는가. 所謂 條約은 一死物에 便歸호고 駭駭然 國氣 民命은 一死地에 自落호니 今日이 非復昨日인즉 明日이 又安知非復今日이리오. (중략) 方今 日本輿論의 主唱호는 根本的 解決이라는 問題에 對호야 瀾을 방호며 波를 息호고 我皇帝陛下와 大日本 天皇陛下의 天聰에 上徹호는 一團精誠으로 哀訴호야 我皇室의 萬歲尊崇호는 基礎를 鞏固호며 我人民의 一等待遇호는 福利를 享有호야 政府와 社會를 益益 展발호기로 主唱호야 一大 政治機關을 成立호지면 我韓의 保護 劣등에 在호는 羞恥를 解脫호고 同等 政治의 在호는 權利를 獲得호는 法律上 政合邦이라 謂호는 一問題이라. (下略) -『대한매일신보』 1909.12.8.

(2)의 일진회 성명서는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서 발표한 것이지만⁴⁾, 실제로는 일제의 식민 정책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병합을 ‘일본 여론의 주장하는 근본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증명할 뿐 아니라, 이 시기 발표된 일본 도쿄[東京] 소재 ‘조선문제동지회’의 ‘선언서’와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 매년 30만 명의 일본 이민자 증가를 주장하였음을 근거로 한국을 강제 병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특히 동양척식회사 설립 이후 일인의 토지 겸병 과정에서는 측량 지식을 적절히 사용했는데, 그 결과 이 시기 각종 측량학교가 유행처럼 설립되었다.

4) 이 성명서에 대해 한국 민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대한매일신보』의 1909년 12월 8일자 ‘再告韓國同胞’, 12월 15일자 ‘嗚呼 兩魔아’, 1910년 1월 6일자 ‘韓日合邦論者에게 告함’ 등이나, 1909년 12월 10일자 ‘告國民會’, 1909년 12월 15일자 잡보 ‘大韓興學會 討國賊 一進會’ 등에 잘 나타나 있다.

(3) 日人의 朝鮮問題同志會 宣明書

日本 東京에서 掲載한 朝鮮問題同志會 宣言書를 得하야 左에 掲載하노라.

帝國이 韓半島에 對한 國是를 定함이 已久한디 建國 以來로 凡此 半島에 有事
할 際 未嘗不 此 國是에 準據하야 此 解決을 試치 아님이 업고 (중략) 盖 政策이
萬一 國是에 戻하면 半島는 實로 東洋 禍亂의 導火는 根源地오 政策이 萬一 國
是와 合하면 半島는 實로 東洋 平和의 楔子라. 韓半島의 關係가 亦重且大하다謂할
지로다. 顧컨디 半島 保護權의 我에 歸함이 早已 五箇 星霜이나 (中略) 嗚呼라 如
此 江山을 人에게 附屬진된 已어니와 苟 帝國의 國是를 遂行하야 東洋 幾億의 生
民으로 平和의 幸福을 長享케 하고져 홀진댄 吾人은 從來의 姑息 彌縫의 政策을
改하야 (中略)

右는 日本內 韓日併合論의 一派라. 彼가 合邦을 唱할진댄 國을 夷하며 種을
奴하는 事는 藏하고 乃日韓人의 塗炭을 救한다 하니 此가 一進會 聲明書와 同一
의 口套가 아닌가.(下略) -『대한매일신보』 1909.12.11.

(3)의 선언서에 등장하는 ‘동양 평화’와 ‘행복 장향’의 이데올로기는 대한매일신보의 논조에서 드러나듯이, ‘국(國)을 이(夷)하고, 종(種)을 노(奴)하는 일’을 감춘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0년 8월 29일의 강제 병합이 이루어졌으며, 병합 직후에 시행된 무단 헌병 통치를 은폐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 ‘동화’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었다.

강점 초기인 1910년대의 식민 정책은 ‘헌병 정치’, ‘무단 통치’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력에 의한 강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양 평화’와 ‘복리 증진’을 슬로건으로 한 ‘동화 정책’을 표방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4) 강제 병합의 성격

ㄱ. 日韓 併合 條約: 韓國 皇帝陛下 及 日本國 皇帝陛下는 兩國間의 特殊히 親密
한 關係를 顧하야 互相 幸福을 增進하며 東洋平和를 永久히 確保하기 爲하야
此 目的을 達코져 하면 韓國을 日本國에 併合함에 不如한 者로 確信하야 (중략)
第六條 日本 政府는 前記 併合의 結果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야 該地
에 施行할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 及 財産에 對하야 十分은 保護를 與
하고 且 其福利의 增進을 圖함.(下略) -『매일신보』 1910.8.30.

ㄴ. 諭告: (前略) 凡政之要는 生命 財産의 安固를 圖함에 急務가 無한지라. 盖히
殖産之法과 興業之途는 次此로 振作케 함을 得함이라. 從來 不逞之徒와 頑迷

- 之輩가 出沒 遐邇호야 或 殺人命호며 或 掠財貨호며 或 企非謀호며 或 起騷擾者
 | 有호니 是以로 帝國 軍隊는 各道 要處에 駐屯호야 時變에 備호며 憲兵 警
 官은 普互都鄙호야 專혀 治安에 從事호고 又 各處에 法定을 開호며 公平無私
 호 審判을 下케 務호은 本是 懲罰奸凶호여 芟除邪曲키를 爲호시오. (下略)
- ㄷ. 寺內總督의 演說(豫算委員會에서): (前略) 茲에 併呑을 遂行호았는디 一日이
 라도 速히 兩國人的 協衷同化를 計호이 必要호다는 韓國 政府의 希望을 依호
 고 陛下의 聖意에 基호야 大體의 市政方針을 定호고 諭告를 發호야 (中略) 韓
 國의 治安에 關호야 此를 疎忽히 호 結果 或 血을 濺호는 等事 有호면 兩國
 에 影響이 有호 豈 안이라 世界 各國에 對호야 帝國의 威信을 失墜호겠기로
 警察을 統一호야 警務總監部를 置호고 相當호 警察을 配置호았는디 憲兵은
 僅히 二千을 增加호았고 十三道의 警官은 一道에 不過 千人이오 (중략) 去十
 四年부터 日韓의 交際를 復修호 以來로 日本人의 移住호 者가 十五萬餘인디
 這間 幾多의 變遷을 經호고 縱橫錯綜호 事情이 有호야 韓國人은 皆日本人을
 歡迎호다 謂키 難호 狀態下에서 併呑을 實行호 故로 將來의 和合同化를 計호
 기로 盡力호았는디 (下略)-『매일신보』 1911.1.29. ‘동경전보’

(4)는 일제의 병합이 대외적으로는 ‘보호’를 명분으로 한 ‘동양 평화론’을, 대내적으로는 ‘복리 증진’을 명분으로 한 ‘화합 동화’를 내세운 강제 병합이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4ㄷ)에 나타난 것처럼 갑오개혁 이후 일본인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실질적 식민화를 달성하기 위해 ‘동화’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게 되었는데, 강점 직후 『매일신보』에 게재된 다음 논설은 이를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5) 同化의 主意

我國之於日本에 壤地가 偏近호고 冠蓋가 相望호여 交隣의 修好는 盖自王仁博士가 文字를 日本에 傳教호므로 始호였도다. 其洲也 | 同호고 人種也 | 同호고 人性也 | 同호고 土地也 | 同호고 殖産也 | 同호여 一葦의 抗호 地에 隔호여 消息이 相通호고 氣脈이 相連호여 脣齒의 勢를 作호였스니 考諸歷史호여도 斑斑히 可考호 자로다. (중략) 我韓이 數年以來로 新風潮가 驅入호여 足跡이 相雜호고 智識을 相交호여 其長其短을 互相 勸起호니 人種의 權限이 可히 相等타 謂호지로다. 我國이 東洋 第一 中心地에 處호여 和意를 不酬호고 深契를 不허호면 東洋一局의 平和主意를 永遠히 維持키 難호지어니 엇지 和衷으로 相告치 아니호며 (中略) 日本이 強호면 我國도 強호고 日本이 弱호면 我國도 弱호 것은 一家內에 兄則飽호며 弟則飢호 理는 萬無타 호지니 可히 憂樂을 同호고 休戚을 共호여 東洋의 安寧秩

序를 共享할 것은 我 兩國間에 共同 企圖할 자라. 是以로 兩國 主權者가 互相 主唱하여 合併을 約成하였스니 此는 日本이 維新後에 我國도 維新하는 日이라. 今我 同胞는 如何한 思想을 抱유하여야 可할가. 兩國 君主의 聖意를 體하여 敢히 違할 바이 無하고 日本文明 施政에 涵泳하고 同化하는 域에 共하여 極東의 平和主義를 永久 勿棄할지이다. -『매일신보』 1910.8.30. 논설

(5)에서는 동화의 이데올로기가 일본과 한국이 같은 대륙에 있으며 같은 인종(여기서는 서양 인종에 대립하는 개념)이자 지리적 조건이 같고 식산이 같으므로, 병합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과 한국이 병합함으로써 같은 집안의 형제와 같이 우락을 함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제 병합에 따른 동화 이데올로기의 실천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 동화였다. 언어 동화 이데올로기는 열강의 식민 정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루이 장 칼베(1974, 이병혁 편저 198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토착민의 언어를 경멸하고 군대·행정 관료·상인 집단의 이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피지배 민족의 민중 언어를 지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⁵⁾ 특히 강점 초기의 언어 동화 정책은 ‘지배 언어인 일본어의 세력’을 강조하고, 일본어를 습득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시기 언어 동화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좀 더 살펴보자.

(6) 언어 동화

ㄱ. 同化의 方法: 同化의 趣旨는 既히 論述한 者이어나와 合併의 效果를 完全케 하려면 彼我が 同化한 然後에 其目的에 達할 것이니 此는 官與民이 同力協心하는디 在하다 흠은 誰가 推知치 못할 者리오마는 泛而言之하면 俱是同淵同族으로 其文이 又同하니 同化하는 域에 進就하기가 容易타 홀지나 幾千年을 國與國間에 相守하는 規模가 迥殊하야 政治也 | 異하고 法律也 | 異하고 語音也 | 異하고 衣制也 | 異하고 飲啄也 | 異하고 居處也 | 異하니 性情과 思

5) 루이 장 칼베(1974)의 이론에 따르면 식민주의 언어 동화는 4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는 토착민의 언어를 경멸하고 지배 언어로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단계, 둘째는 군대와 행정 관료 및 상인 집단을 이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행정 언어를 장악하는 단계로 식민 권력과 가까운 피지배 민족의 지배 계급과는 달리 민중으로서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중 언어가 존재하는 단계, 셋째는 지배 언어와 피지배 언어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로 지배 언어가 피지배 민족 전체로 확산되는 단계, 넷째는 피지배 언어가 결정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고고학적 흔적만을 남기거나 다언어 병용 상태로 남는 단계이다.(이병혁 편저, 1986 참고). 허재영(2011: 123-129)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의 일본어 보급 정책이나 조선어 교육 정책은 루이 장 칼베가 제안한 4단계 언어 동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想이 又是不同할 것은 自然한 勢라. 雖曰 彼我が 同文이라 하나 文義의 差異와 措辭의 相殊는 各其 國文을 有해야 語訓이 相殊하고 句讀을 難解해야 書自書人自人하는 歎이 有하니 全然 同文이라 稱키 難히리하다. (中略) 今日을 當해야 一國 人民을 作成한 以上에는 親密한 關係가 日日層生해야 疎코자 해야도 得치 못할 것이오 遠코져 해야도 得치 못할지니 **兩地 人民이 言語를 相通치 못해야 同化上에 不便한 點이 必生히리하다.** 其性이 合하고 其情이 同한 後에야 一點 靈犀가 暗裏相照해야 膠漆의 誼가 生하고 斷金의 契를 成하면 彼我が 無分해야 同化를 期치 아니하여도 自然히 化히리라 하노니 其 方法은 何에 在하고. **心地를 相許하고 意思를 疏通케 하기는 語論酬酌의 在한 즉 同化의 急務는 語學이라 謂할지나 一朝一夕의 事가 아닌즉 急遽히 圖謀하기는 得치 못할 者이니 水와 如히 漸케 해야 今日에 解一語하고 明日에 解一語해야 久久 成習하면 不期然而然한 者로다. 露國之於芬蘭과 獨國之於葡蘭에 言語를 急速히 變更코져 해야 強制力을 行히었스니 此等の 行政은 當局者의 高見으로는 斷然히 行치 아니할 것은 預料할 者이나 萬一 急速히 行케 하면 意外의 反抗이 易生해야 統治上에 妨害를 致할가 爲慮하노니 本記者는 取치 아니하는 者이로다. 古今 形像컨딘 教育을 擴張해야 語學을 普及케 하고 磨以歲月해야 一般 人民으로 同化의 域에 齊進케 하는 것이 當局者의 第一 急務라 하노라. 『매일신보』1910.9.14. 논설**

- ㄴ. 學校의 合併: 朝鮮人의 日語教育은 近來 非常한 好成績을 呈해야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는 充分치 못하나 日語를 大概 引解할 만치 發達되였고 且 高等 學校를 卒業한 者에 至하는 地人과 殆히 差異가 無히 日語가 熟達해야 昨今間 朝鮮人이 日本人 學校에 入學하는 者가 各地에 多有하고 京城에서도 中等 以上되는 朝鮮人은 許多히 日本人 中學校에 入學해야 日本人의 教育을 授하는 者가 不少한지라. **朝鮮人 一同으로 해야곰 日本語를 普及케 해야 朝鮮人의 公私立學校를 廢止하고 日本人 學校와 合併함은 困難하다 하나 現時 狀況으로 觀하면 中等 以上の 日本 及 朝鮮人의 學校 合併은 亦不遠하겠도다.** (아래 줄임)-『매일신보』1910.10.5. ‘잡보’

(6ㄱ, ㄴ)은 강점 직후의 언어적 동화 이데올로기를 피력한 논설이다. 이 두 논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의 언어 동화는 ‘심지(心地) 상허(相許)’와 ‘의사소통’을 이유로 내세웠으며, 점진적인 일본어 보급을 목표로 하였다.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 정책 홍보에 앞장섰던 『매일신보』에는 이러한 논조의 논설이 수시로 게재되었는데, 1910년대의 논설은 병합의 결과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었으므로 ‘일본어

= 국어(자국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어를 배워야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⁶⁾ 곧 ‘지식 습득의 언어 = 일본어’라는 등식은 모든 교육을 일본어로 행하고 조선어는 단지 명분상 존치하도록 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어 보급은 ‘충군애국의 근본’, ‘국수(國粹)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식민 지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되었다.

2.2. 동화 이데올로기의 변화

일제 강점기 동화 정책은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변화를 보인다. 3·1 독립 운동 직후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부임 직후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헌병 경찰 제도 대신 일반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선인(鮮人)과 내지인(內地人)’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화적 제도를 강구한다고 훈시하였다.⁷⁾

이 ‘내지인과 동일한 취급’을 목표로 한 식민 정책은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또 다른 형태의 동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무단 통치기와는 달리 조선인의 관리 또는 교원 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학교 확장 정책이 펼쳐지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강압 정책의 한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일본과의 종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동화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이는 문화 정치기의 식민 이데올로기가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선융화(內鮮融和)’, ‘공존공영(共存共榮)’을 표방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슬로건은 모두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무단 통치기의 ‘제국 신민화’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종속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동화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는데, 이른바 ‘일선 동원론(日鮮同源論)’ 또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나 ‘민족 개량론(民族改良論)’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일본어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매일신보』의 논설로는 ‘國語(일본어) 研究의 必要’(1911.2.23.), ‘教員 講習會’(1912.8.25.), ‘日本語의 勢力’(1913.7.18.), ‘國語(일본어) 普及의 急務’(1913.11.2.-11.5. 2회 연재), ‘國民統一과 國語’(1917.2.28.), ‘鮮人同化’(1918.8.23.-8.25. 3회 연재)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강습회나 야학회에서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총독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速修國語讀本』과 같은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7) 사이토의 훈시는 『매일신보』1919년 9월 4일자에 실려 있다. 이 훈시에 따라 두 차례 교육령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제3차 조선 교육령(신교육령)에서는 내선공학(內鮮共學)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일본어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선학제 운영이 불가능했으므로, ‘일본어 상용 여부’에 따라 학제를 운영하였다.

(7) 日鮮同源史徵, 幣原坦

朝鮮과 内地의 關係는 他國의 植民地와 本國의 關係 等과는 相違가 有호야 各種의 點으로 純粹호 合理的 狀態에 在호니 則 思想에 就호야 此를 論호건디 共히 儒敎의 共通 觀念을 有호얏고 宗教에 作호야도 朝鮮과 内地와 大호 區別이 無호 것이니 内地에 全盛호 佛敎도 朝鮮서는 李朝 以前까지는 호얏스나 李朝에 至호야 此를 排斥호 것을 今日에 其跡이 亦然호고 風俗 人情上으로 觀察호지라도 大部分 共通點을 有호얏고 人種으로도 雙方 共히 諸族의 血液을 混合호얏스나 大體로 同一호 特徵을 現호얏나니라. 더구나 歷史 及 言語上으로도 頗히 趣味 잇는 聯絡을 有호 것은 學問 研究者로 我 古記錄에 依호면 索盞鳴尊의 根의 國이 行호얏다는 事가 有호디 此 根의 國이 卽 新羅라는 것은 夙히 學者의 公認호는 바이라. 且 日本書紀의 一書에는 索盞鳴尊이 根國에 赴호야 ‘소시모리’에 居호얏다 호니 此 ‘소시모리’는 朝鮮語의 意味로 解釋호면 卽 牛頭山이라는 말이니 卽 江原道 春川이라 호나 其後 確考호 바에 依호면 新羅의 都는 慶州인 事가 判明되야 此說은 當히 世間에 發表호얏는디 今에는 大抵 異論이 無호 듯호도다. (아래 줄임) -幣原坦, 『매일신보』 1920.5.5.

(7)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일선동원론의 한 부분이다. 이 글의 필자인 가네하라 히로시[幣原坦]는 1901년 중학교 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뒤, 학부 참여관을 거친 식민 시대 조선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7)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식민 관계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순수한 합리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사상’, ‘종교’, ‘인종(혈통)’뿐만 아니라 역사와 언어에서도 같은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문 연구의 성과를 빌려 동원론(同源論)을 주장하고자 한 사례는 훨씬 많으나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식민 정책에 동원된 것은 1920년대로 보인다.

동원론이나 동조론의 맥락에서 1920년대의 식민 정책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내선인 혼인 문제’와 ‘국어 상용 이데올로기’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내선인 혼인 문제의 근원은 강점 초기부터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점 초기의 혼인 문제는 식민 지배자들보다 피지배 민족인 조선인의 입장에서 막연히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8) 風說誤人

近日에 一種 風說이 飛行하야 來月 一日이면 日本人의 子女와 朝鮮人의 子女로 互相 成婚하라는 法令이 有한다 하야 不卜日 成婚하는 者가 多하디 勻水로 成禮하는 者도 有한다는 說이 盛行하기로 本記者가 向日에 斷髮과 衣制를 改良하리라는 風說이 熾盛하야 物議가 沸騰함으로 同胞의 疑眩을 闢破하기 爲하야 屢屢히 論述한 바어니와 至若婚禮하야는 其父母라도 或子女의 願을 從하야 成婚하는 事가 有하거든 況朝家에서 威令으로 彼此가 成婚하라는 法令이 有할 理가 萬無하즉 었지 此等の 風說을 信하고 婚娶上에 錯亂케 하리오. (아래 줄임) -『매일신보』 1910. 9.18. ‘잡보’

1910년대에는 (8)에 나타난 ‘호상 성혼 법령’이 제정·공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점 직후 우리 민중들은 막연하게나마 강압적 혼인 법령이 공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 자료상 이러한 두려움이 왜 생겼을지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1920년대 이후에는 ‘내선인 혼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9) 1920년대 내선인 혼인 문제

ㄱ. 內鮮人 通婚

多年의 懸案이든 日鮮人 婚姻 法案은 既報와 如히 府令 第九十九號로써 發布하야 共通法 第三條의 施行과 共히 其 實施를 見함에 至하였다. 切望컨디 日鮮 兩民族이 併合 以來로 互相 融合을 徹底하고 一家內에서 呼吸을 同히 하며 棲息을 共히 한지 十有二年의 星霜을 經하얏슴에도 不拘하고 尙히 徹底的으로 融合 同化의 實을 與함에 至하지 못한 것은 專히 血統的 關係가 罕少하얏슴에 由함이니 個人과 個人間에 在하야도 婚姻의 關係는 疎한 者로 親케 하며 遠한 者로 近케 하며 扞格한 者로 疏通케 하는 것이라. (中略) 日鮮 兩民族은 歷史的으로 하던지 地理的으로 하던지 他裔他族이 아니요 同族이 될 것은 事實과 理論이 共히 合致한 것이니 古來 交通한 事實에 就하야 觀하면 其 關係가 甚히 複雜하야 一一히 其 實例를 擧하기 難하나 (中略) 最近에 至하야 日鮮人의 通婚이 漸次 增加하는 趨勢를 觀하는 今日에 從來 民籍 手續함에 對하야 幾多의 不便함과 缺陷이 有하야 遺憾이던 바임으로 (중략) 此 手續法 發布 前에도 日鮮人의 通婚이 頻繁하얏슴즉 今後에 至하야는 問치 아니하야도 一躍하야 其數를 激增하리라고 豫算하는 同時에 內鮮融和의 捷徑上 欣喜의 感을 不堪하는 바이로다. -『매일신보』 1921.6.16.

ㄴ. 調査及報告 統計: 内地人ト朝鮮人ノ配偶者數 調査: 昭和元年 十二月末日 現在ニ於ケル内地人ト朝鮮人ノ配偶者數 調査スルニ總數ハ四五九組ニシテ 内三五組ハ昭和元年中ニ結ハレタル配偶者數テアル之ヲ種類別ヨリ觀レハ内地人ニシテ朝鮮人ヲ娶リタルモノ最モ多ク二二二組亞イテ朝鮮人ニシテ内地人婦人ヲ娶リタルモノ二一九組朝鮮人ニシテ内地人ノ家ニ入婿シタルモノ一八組テアル次ニ最近五箇年ノ狀況ハ即チ (아래 줄임) -『조선총독부 관보』 제192호, 1928.8.18.

(9ㄱ)은 1921년 이후 호적법을 정리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혼인을 장려하고자 한 논설이다. 혼인 정책은 일선 동조론이나 동원론을 넘어서 ‘내선일체’, ‘내선융화’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의 식민 정책이 경제적 수탈을 넘어 민족 말살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ㄴ)은 이러한 흐름에서 이루어진 혼인 관련 통계 조사 결과인데, 1927년까지 459쌍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일본인 남자가 조선인 여자와 결혼한 경우가 222쌍, 그 반대의 경우가 219쌍, 조선인으로 일본인 가정의 데릴사위가 된 경우 18쌍으로 나타났다.⁸⁾

다음으로 일본어 상용 정책의 강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0년대의 식민 통치는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 고유문화 존중’을 표방하였다.⁹⁾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때의 조선 고유문화는 강압적인 동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진적 동화를 위한 방편으로 천명한 것일 뿐, 일본어 보급을 통한 동화 정책의 기초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신교육령 발포와 함께 이루어진 미즈노 [水野] 정무총감의 담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8) 이 통계는 일제의 강점이 17년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혼인 동화는 그다지 심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인구 대비 일본인과의 혼인자 수를 고려한다면, 식민 정부의 혼인 정책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식민 지배가 평등한 동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노예적 동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관방문서과(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에서 발행한 『조선』1925년 10월호의 ‘朝鮮に於ける内地人農業移民’의 통계 자료를 보면, 1923년까지의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 이민 호수는 11만 439호이며 이주민 수는 40만 3천 11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일본인이 조선에 이주하게 된 것은 식민 지배에 따른 경제적 이권 때문으로 보인다.

9) 예를 들어 제3차 조선 교육령 개정을 앞두고 만든 ‘조선교육조사위원회’에서는 ‘一. 朝鮮 固有의 文化를 尊重 培養할 것, 二. 時代와 民度에 適合한 教育을 施할 것, 三. 産業開發과 相俟하여 實用의 人物을 養成할 것, 四. 門戶를 洞開하여 可及의 日鮮共學으로써 根本的 融和를 期할 것’을 조선총독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1921년 12월 6일자 사설을 참고할 수 있다.

(10) 教育令 發布에 就 ㅎ야

新教育制度는 一視同仁의 趣旨에 依하야 差別 撤廢를 期하야 内地와 同一한 制度에 依함을 主義로 한 結果 舊令은 單히 朝鮮人에 對한 學制이얏섯스나 新令에는 朝鮮內에 對한 教育에 人種的 區別을 設치 아니하고 此 一法에 統合하게 된 것이라. 唯 朝鮮에 對한 國民은 現狀으로는 日常生活에 國語를 使用하는 者와 不然한 者가 有하야 其 風俗 習慣 等に 對하야도 亦 不同한 者가 有함으로 普通教育에 對하야 全然 同一한 制度를 布하고 主義로 共學 卽 混合教育을 實行함은 適當치 아니호 事情이 有한 故로 普通教育에 限하야 國語를 常用하는 者는 小學校 中學校 又는 高等女學校에, 國語를 常用하지 아니하는 者는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又는 女子高等普通學校에 入學함을 本體로 하야 唯 特殊한 事情이 有한 境遇에 限하야 交互로 入學함을 得하게 한 것이라.(中略) 新히 大學教育 及 師範教育을 加하얏스며 且 實業教育 專門教育 及 大學教育은 全然 内地와 同一한 制度에 依하고 又 師範教育은 朝鮮의 事情에 適應할 事를 期하야 內鮮共體의 新制度를 樹立한 것이라. 此等の 教育은 國語를 常用하는 者와 否호 者에 依하야 區別치 안이하고 總히 共學 卽 混合教育을 施할 方針으로 된 것이라. -『매일신보』 1922.2.7.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3차 조선교육령은 ‘국어(일본어) 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학제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는 보통 교육과 중등 교육에 한정된 것이며, 전문 교육이나 사범 교육은 일본어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문화 정치기의 ‘조선 고유문화 존중’이 동화 정책의 한계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실질적인 문화 존중이나 문화 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 정치기 조선총독부의 시정 방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21년 당시 미즈노[水野]가 밝힌 통치상의 5대 정책은 ‘치안 유지, 교육 보급 개선, 산업 개발, 교통·위생 정비, 지방 제도 개혁’이었는데¹⁰⁾, 무단 통치의 실패 이후 문화 정치 하에서도 치안 유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1925.1.28.)을 제정·공포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널리 퍼진 사회주의 사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치안유지법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치안 유지는 전면적인 언론과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10) 水野 政務總監(1921), 朝鮮統治上の五大政策, 『朝鮮』1921年 4月,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水野鍊次郎(1921), 朝鮮統治の一轉機, 『朝鮮』1921年 9月.

2.3. 일어 사용자 증가에 따른 동화 정책

문화 정치기의 ‘내선일체’, ‘일시동인’ 이데올로기는 일본어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또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이는 일본어 보급이 점차 성과를 거두면서 단순한 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병력 수탈을 목표로 한 완전한 종속적 동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 교육’, ‘징용’, ‘지원병’, ‘징병’ 문제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일본어 보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 수탈과 관련한 식민 정책의 변화는 조선인 학생에 대한 군사 교육 문제로 부터 시작된다.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1925년 전후로 보인다.

(11) 軍事教育 實施 問題

多年 懸案이던 朝鮮의 軍事教育 實施 問題는 內地의 今年度부터 實施 決定으로 全 朝鮮에도 此를 實施할 旨를 勅令으로써 公布하였다 함은 昨紙 所報와 如한대 此에 對하여 總督府 當局은 語하되 朝鮮에 軍事教育을 實施함에 先하여 研究치 아니치 못할 問題가 有하니 卽 兵役의 務가 無한 朝鮮人 學生에게 對하여는 此를 如何히 할지? 兵役의 義務가 無하다는 點만으로 見하면 如何한 學校에 籍을 置하얏던지 朝鮮人 學生에게는 此를 課하지 못할 것이라 解釋할 것이나 法規의 形式은 如何히 되었던지 一視同仁의 聖旨를 體하여 內鮮人의 差別 撤廢를 旨로 하는 朝鮮 施政의 根本 方針에 照하여 特히 教育에만 此를 差別함은 果然 妥當타 할지? 此點으로 見하여는 內鮮人 學生을 勿論하고 此를 施行함이 正當하다고 解할 것이다. 그러나 軍事教育이라는 軍事 二字는 兵役과 不可分의 意義를 有한 者로도 解釋되야 兵役과 如한 國民의 義務를 創設함은 此를 法律로써 制定할 바이며 決코 勅令으로써 左右할 바가 안인즉 法規를 다만 形式이라고 無視하고 事實만 尊重할 수도 업는 바이다. 解釋은 如斯히 兩面으로 分岐되야 各各 그 根據가 相當한 터인데 假量 兵役義務의 有無만으로 朝鮮人 學生에게 軍事教育을 施할 수 업다는 一假定 斷案을 下하드라도 現在 共學制度에 在한 各 專門學校 高等學校 乃至는 事實로 中學校에 籍을 置한 朝鮮人 學生과 又是 高等普通學校 等에 在한 內地人 學生에 對하여는 特別한 取扱下에 此를 施치 아니하며 又是 課할지? (아래 줄임)
-『매일신보』 1925.7.5.

(11)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선인 학생에게 군사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이다. 곧

군사 교육은 병역의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당시까지 병역 의무를 부과 받지 않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군사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일신보』 1926년 2월 25일자 기사에서는 체조 교육의 연장선에서 군사 교육을 실시하고 조선인 학생들은 자의에 맡기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인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군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며, 차별이나 무기 소지의 위험 때문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¹¹⁾

일제 강점기 인적 수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이다. 이 시기의 동화 이데올로기는 ‘국체명징(國體明徵)’, ‘대동단결(大同團結)’을 통한 ‘내선일체’의 공고화이다. ‘황국신민의 서사’가 제정되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창씨개명’과 ‘총후 보국(애국기 헌납 운동, 각종 근로 동원령)’ 등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 배경에는 일제 강점기 지속되어 온 동화 정책과 일본어 보급 정책의 성과가 있었다. 그 결과 1942년에는 본격적으로 징병제가 실시되었으며, 조선은 병참 기지이자 병력 충원지로 전락하게 되었다.¹²⁾

인적 수탈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는 일본어 보급 정책의 강화로 나타나는데, 문화 정치기나 1930년대의 일본어 보급 정책이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과의 말살이나 문맹퇴치 차원에서 조선 언문 배척을 의미하지 않았던 데 비해, 1937년 이후의 ‘국어(일본어) 전해 운동’이나 ‘국어(일본어)

11) 『매일신보』1926년 2월 25일자 ‘軍事教育實施 決定’이라는 기사에서는 “(前略)內地人 學生만 軍事教育을 課할 수 업는 것은 其 學校에 設備 等으로 見하여 當然한 바이라는데 以上과 如히 大體로 內地人校에서만 軍事教育을 課하고 朝鮮人 學校에서는 此를 課치 안이하기로 決定의 理由는 上述과 如히 朝鮮人에서는 兵役의 義務가 無한 所以에서 出한 것이오 決코 教育에 內鮮人을 差別하거나 又は 朝鮮人 學生에게 軍事上 器具를 所持케 함이 危險하다는 趣旨에서 出한 것은 안이라 하며 實施 期는 來 新學期 卽 四月一日부터이다.”라고 보도하였다.

12)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1941년 국민학교제 실시 이후의 교과목 변천이다. 『매일신보』 1941년 1월 4일에 보도된 ‘今年부터 初等學校에 新體制, 國民學校제 實施코’라는 기사에 나타난 ‘국민과’의 ‘수신’, ‘국어(일본어)’, ‘역사’, ‘지리’ 교과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修身: (전략) 또한 교수 내용에 있어서 ‘쌀’, ‘우리집’류 이러한 구체적 사실을 집어넣어 쌀은 어째서 소중하며 우리집에는 누구누구가 사는데 어째케 단란스럽게 사라간단든지 하는 사실을 가르켜 학교에서 배호는 것보다 실제로 집에 나가서 알을 수 잇도록 하였다.

國語: (전략) 특히 국민적 감격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재(教材)에는 동화 가든 것을 집어넣고 그 외에 일어학년부터 국방(國防)과 해외 발전 사상을 너히 시국적 교수를 하게 되었다.

歷史: 초등과 오년부터 가르켜서 조국(肇國)의 큰 이상을 가르켜 력대 천황의 높으신 성덕과 국민의 충성, 근대적 영웅들의 실례를 들어 가르키고 한편으로 내선일체의 큰 이상을 가르켜 신애협력(信愛協力)하는 마음을 갖게 하게 하였다.

地理: 초등과 사학년년부터 시작하여 소위 ‘환경의 관찰’ 즉 지리를 배울 준비부터 시작케 한다. 그리고 조선은 대륙병참기지(大陸兵站基地)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세계적으로 웅비(雄飛)할 것을 지리를 통하여 아르게 하였다.

상용 운동'은 조선어과의 말살과 조선 언문의 배척 형태로 진행되었다.¹³⁾ 특히 강압적 일본어 보급 정책의 결과 일어 사용자가 급증함¹⁴⁾으로써 각종 노동력 수탈이나 병력 수탈이 가능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일제 강점기의 동화 정책이 일본어 보급을 통한 노동력과 병력 수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조선어학회의 항쟁

3.1. 국문 사상의 민중성과 저항성

일제 강점기의 각종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다. 비록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는 어려웠지만,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가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갑오개혁 이후 형성된 '국문 사상'에 배어 있는 '어문 민족주의'와 이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한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노력이 컸다.

조선어학회는 1908년 8월 31일 상동 국어강습소(회장 김정진, 주시경은 강습소 강사였음) 제2기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창립한 '국어연구학회'에서 출발한다.¹⁵⁾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 구성원들의 저항 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달리 말해 조선어학회의 저항 정신은 주시경의 어문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21년 조선어연구회 재건에 참여했던 권덕규, 장지영, 신명균의 논설이나 1927년 동인지 『한글』을 창간하고 운영했던 이병기, 최현배, 정열모(권덕규, 신명균 포함) 등의 논문에서 '주시경'이라는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

13)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1)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14)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1: 119)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강점 초기인 1913년 조선인으로 일본어를 해득하는 자의 수는 0.61%였으나 1938년말에는 12.38%, 1943년말에는 22.15%로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조선어학회의 창립과 연혁에 대해서는 김민수(1990)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회 창립과 관련하여 '국문동식회설'(『한글』1-1, 1932.5.), '국문연구학회설'(『한글』10, 1934.1.), 1919년의 '조선어연구회설'(『신민』23, 1927.3.), 1921년 '조선어연구회설'(『동아일보』1921.12.3.) 등이 있으나 "치열한 항일전에서 영용한 의병장이 피흘리며 쓰러지던 1908년에 서대문 밖 무악재 서넛 봉은사에서 뜻을 품은 국어학도가 모여 학회를 결성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글학회의 자세한 역사는 한글학회(2010)의 『한글학회 100년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인할 수 있다.¹⁶⁾ 이 점에서 일제 강점기 종속적 동화 정책에 맞서 한글을 정리하고 보급하고자 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던 주시경의 어문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시경의 문법 이론에 관심을 기울였던 고영근(1987: 273)에서는 주시경이 ‘언어를 사회 형성의 힘’으로 간주하는 언어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이를 잘 드러내는 주시경의 논설이 『보충친목회보』제1호(1910.6.1.)에 실렸던 ‘한나라말’이다. 이 논설에서는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다. 한 말을 쓰는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돕아 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지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일우나니 사람의 데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함으로 말은 나라를 일우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나리면 나라도 나리나라. (줄임)”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뜻을 통함 → 덩이를 이룸 → 나라를 이룸’으로 이어지는 주시경의 언어관이다. 이때 뜻이 통하는 덩이로서의 ‘나라’는 정치적인 단위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민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말’에서는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 곳, 그 사람들이 무리진 덩이가 턴연으로 이 땅덩이 우에 홀로 서는 나라가 됨의 특별한 빛이라. (줄임)”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서 ‘턴연으로 이 땅덩이 우에 홀로 서는 나라’는 정치적 단위로서의 국가관과는 거리가 멀다. 달리 말해 ‘턴연, 홀로 서는 나라’는 혈연 공동체이자 언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주시경의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의 생애와 학문을 연구한 허웅·박지홍(1980)에서는 주시경의 생애를 ‘날 때부터의 시련 → 문자 마술의 정체 → 침식을 잊고 → 몸은 가루가 되어도 → 나라는 망해도 산하는 남고 → 국어학의 업적 → 민족의 은인’이라는 부제를 붙여 정리하였다.

일제 강점기 종속적 동화 정책에 대한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저항 정신은 ‘국문 존중’과 ‘민지 개발’을 특징으로 한다. 1921년 조선어연구회 조직과 관련된 『동아일보』의 사설(1921.12.4.)에서 연구회 조직을 ‘문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정치가(政治家)나 군인(軍人)이 필요(必要)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오인(吾人)은

16) 주시경의 생애와 학문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민수(1977)의 『주시경 연구』(탑출판사), 허웅·박지홍 엮음(1980)의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과학사)가 있으며, 1988년 주시경연구소가 창립되어 『주시경학보』(탑출판사)를 발행하기도 하였고, 한글학회에서도 『한한샘연구』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주시경의 이론이 후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는 짧은 논문에서 모두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식민 언어 정책과 주시경, 또는 주시경의 후학들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일(今日)에 재(在)하여 그 이상(以上)으로 학자(學者)와 농부(農夫)와 실업가(實業家)를 존경(尊敬)하여야 할 것이라.”라고 주장하고, “조선(朝鮮)의 문화(文化)는 그 무엇으로써 기초(基礎)를 작(作)하며 그 무엇으로써 전제 요건(前提要件)을 성(成)하려는가. (줄임) 사회(社會)가 상호(相互) 부조체(扶助體)이요 조직체(組織體)이며 차간(此間)의 의사소통(意思疏通)의 유일(唯一)한 기관(機關)이 언어(言語)라고 하면 차(此) 언어가 실(實)노 모든 문화운동(文化運動)의 근본 조건(根本條件)이 되는 것은 물론이라. (줄임)”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운동의 뿌리는 주시경의 자국어 존중 사상과 저항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시경의 자국어 존중 사상은 그의 논설 어디에서도 빠진 적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필상자국문언(必尙自國文言)’은 그의 언어관과 저항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은 『황성신문』 1907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연재된 것으로, ‘動物競爭, 人爲最强動物, 人以文言得享最强之權, 人類競爭文言有關, 天下區域及人種之不同, 隨區域人種之不同而文言亦不同’(이상 4월 1일자) 등과 같이 진화론적 언어관이 내재되어 있다. 곧 인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동물 가운데 최강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류의 경쟁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천하의 각 구역마다 인종이 다르고 문언(文言)이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특히 민족어의 가치나 제국주의의 언어 침탈, 자국 문언을 숭상해야 하는 이유 등을 밝힌 부분은 주시경이 단지 국어학자나 한글 운동가가 아니라 민족주의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다음을 살펴보자.

(12) 必尙自國文言

- ㄱ. (전략) 自國文覺 爲自國特立之表而域被他弄則 其害之如何: 是以 自國의 言語文字는 天然的으로 不同 區域의 人衆이 天然的으로 一個 團體 自由國 되는 特性이 標準이라 其 社會 人衆을 志意相通하며 經營相助해야 一團體 되게 하는 言語가 他衆之文言의 弄絡을 被해야 紊亂混雜하면 其衆의 思想과 團體도 紊亂分離해야 國家 自主의 保全을 期望키 不能하더라.
- ㄴ. 廣文言以奪人國: 噫라 是以로 古昔 羅馬가 強盛할 時에 其文言을 歐洲西亞 北非列邦에 播傳해야 意以希威하고 或服或吞하였고 東亞에 支那도 自古로 其文字를 四近各國에 傳習해야 因以壓頭하고 或附或并하는 弊가 史載에 歷歷하고 現今에는 此弊가 愈甚함을 具眼者는 다 目睹하는 바더라. (줄임) -『황성신문』 1907. 4.2.

- ㄷ. 我國文言: 我國 言語는 太古에 我半島가 初關호고 人種이 祖産호 時부터 此 半島 區域의 稟賦호 時性으로 自然 發音되어 繼傳호는 一種 言語요 其法은 格을 表호는 것이니 世界 優等語法에 一也오 我國 正音文字는 言語를 記用호라 호는 것이니 世界에 最便호는 記音文字에 一也라.
- ㄹ. 必修自國之文言: 隣國을 奪코자 호는 者는 隣國의 文言을 先衰케 호고 倨國의 文言을 播傳호며 自國을 興盛코자 호거나 保全코져 호는 者는 自國의 文言을 先修호여야 民智를 發達호고 團合을 鞏固케 호지니 是以 自國文言이 某國文言만 못호지라도 不可不 自國文言을 愛護 改善호여 當用함이 可호도다. (출입) -『황성신문』 1907.4.3.

(12ㄱ)에서 주시경은 ‘자국 언어문자’를 ‘천연 부동의 구역의 인종이 천연적으로 일개 단체 되는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자국어 = 민족어’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언어·문자는 ‘사회 인종의 의사소통 수단’, 곧 민중의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ㄴ)의 사상은 고대 로마나 중국이 그러했듯이, 언어·문자의 전파는 그 국가의 힘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12ㄷ)과 마찬가지로 ‘인국(隣國)을 탈(奪)하고자 할 때’, 달리 말해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에서 언어·문자의 박탈이 이루어짐을 자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ㄷ, ㄹ)은 우리의 문언이 세계의 우등한 언어이자 간편한 문자임을 강조하고, 민지 개발과 단합 유지를 위해 자국문언(우리의 말과 글)을 애호·개선해야 함을 주장한 내용이다. 사실 주시경의 어문민족주의는 통감시대부터 강화되어 온 일제의 종속적 동화 정책에 저항하는 다른 애국계몽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⁷⁾ 특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사한 환산 이윤채처럼¹⁸⁾, 근대 계몽기부터 국문학교나 국문 야학 운동¹⁹⁾을 전개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921년 조선어연구회가 조직될 당시의 주요 구성원은 대부분 주시경의 문하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주시경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²⁰⁾

17) 통감시대부터 이루어진 동화 정책에 저항하는 입장에서 국어국문 독립론을 주장한 경우는 주시경 이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1908년 8월 3일자 ‘國語國文獨立論’(拾叢生 寄書), 『대한매일신보』1909년 3월 23일자 논설 ‘同化의 悲觀’ 등은 일본어를 비롯한 서구어 범람 상황에서 동화에 저항하기 위해 국어국문이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한 대표적인 논설이다.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0: 106-113)을 참고할 수 있다.

18) 이윤채의 야학 활동은 『대한매일신보』1908년 5월 26일 ‘잡보’에 “金海郡 沓谷涵 大學校 敎師 리允宰 氏가 妙年 英才로 教育上에 熱心호야 城內 普通學校에 夜學校를 設立호고 勞働者를 多數 募集호야 實地學文을 敎授호미 不過 一旬에 學徒가 五十名에 達호였다고 該郡 來人이 稱頌호더라.”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19) 근대계몽기 국문야학에 대해서는 김형목(2000, 2001)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조선어연구회에 참여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민중 계몽을 통한 국어의 유지와 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외솔의 ‘경도 유학생 하기 순회 강좌 원고’이다. 이 원고는 『동아일보』 1922년 9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우리말과 글에 對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²¹⁾ 이 원고에서 외솔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연구가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민중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발달된(피어난) 우리말이 되기 위해서 ‘날말 수가 많을 것, 다른 나라의 말이 섞이지 않을 것, 규칙이 바르고 논리가 정밀할 것, 통일이 있을 것, 말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 문화나 정치상 진보한 말이 될 것’ 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자의 연구, 소리의 연구, 어법의 연구, 조선어 교육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할 것, 고어의 연구, 표준어의 조사, 자전의 완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22회에 걸쳐 연재된 이 원고는 외솔의 원고로는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외솔의 삶은 이 원고에서 제시한 주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과 일치한다.²²⁾ 그런데 이 논문이 주목되는 이유는 논문의 내용이 일제 강점기 규범 통일(한글마춤법통일안 등) 이후 활발히 전개된 ‘한글 운동’²³⁾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김민수(1990: 60)에서는 1921년 조선어연구회에 참여했던 22명의 인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경재, 최두선, 장지영, 권덕규, 이병기, 이규방, 신명균, 김윤경, 이원규, 최현배, 정영모, 이치규 등은 주시경의 문하생이었으며, 박순용, 이상춘, 이운재, 양건식 4인은 이병기와 교류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그 밖의 인물로 이승규(휘문고보 교원), 이호성(경성고보 11회), 심의린(경성고보 9회)과 남형우(보성전문 졸업, 강습회 원장), 이극로(김두봉 사사), 박현식(미상)이 있었다고 한다.

21) 『동아일보』1922년 8월 29일자에서 최현배는 “이 글은 금번(今番) 경도(京都) 유학생(留學生) 하기 순회강좌(夏期 巡廻講座)에서 내가 강의(講義)한 것을 그대로 정리(整理)한 것이외다. 나는 이제까지 스스로 지은 글을 남에게 보아 달라고 박아닌 일이 한 번도 업섯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문제는 넘어도 우리 조선사람의 전체(全體)에 대(對)하여 긴급(緊切)하고 중대(重大)한 문제(問題)이라 한 사람이 홀로 이렇타 저렇타고만 하여서는 도저(到底)히 해결(解決)될 것이 아니요 또 여러분의 발표(發表)를 권(勸)하심도 잇기로 그 내용(內容)은 비록 완비(完備)치 못하나마 스스로 마치 못하는 책임(責任)의 감(感)과 의무(義務)의 심(心)으로서 감(敢)히 이를 신문지상(新聞紙上)에 발표(發表)하노니 우리 민중(民族)의 장래(將來)를 위(爲)하여 그 행복(幸福)과 번영(繁榮)을 도(圖)코자 사려(思慮)와 노력(努力)을 갖가지 아니하시는 同志 여러분은 이를 읽어 보시고 고명(高明)한 비평(批評)과 협동(協同)의 노력(努力)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22)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1-)을 참고할 수 있음.

23) 예를 들어 김윤경(1932)의 “최근의 한글운동” 『조광』 제40호, 이극로(1936)의 “한글통일운동의 사회적 의의” 『조광』 2-11호, 이극로(1938)의 “한글운동과 조선어사전” 『조광』 4-1호 등의 논리는 이 논문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3.2. 한글 운동의 성격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의 저항은 일본어 보급 정책의 전개 과정과 대책점을 이룬다. 달리 말해 일본어 보급을 통한 종속적 동화가 ‘지배 계급’이나 ‘의사소통 권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²⁴⁾, 조선어학회의 저항은 우리 고유의 정신을 유지·발전시켜 차대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동인지 『한글』에도 빈번히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정열모의 ‘조선어 연구의 정체는 무엇?’이라는 논문의 일부를 참고할 수 있다.

(13) 조선어연구의 정체는 무엇?

(앞 줄임) 입때까지의 世人은 所謂 朝鮮語研究者의 正體를 모른 것이 事實이다. 그네는 朝鮮語研究者를 指目하여 ‘새말을 지어내는 사람’ 혹은 ‘없어진 말을 찾아 쓰는 사람’ 혹은 ‘쉬운 말을 어렵게 쓰려는 사람’으로 알아온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러 盲人이 全象의 局部局部를 評함과 같아서 病身의 片見에 지나지 못한 즉 그 不當을 탓할 길도 없거니와 世人으로 그러한 妄斷에 빠지게 한 罪의 太半은 所謂 朝鮮語研究者 自身이 引責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의 生命과 같이 貴重한 國語=[註] 言語學上으로 보아 어느 特殊한 體系를 갖춘 文法에 依하여 統一된 言語의 一團을 國語라 하나니 假令 英國과 米國과는 政治上 獨立한 兩個 國家이지마는 英語이라는 一個 國語를 使用하는 것이요 朝鮮語와 日本語는 그 文法上 體系가 다르므로 政治上 意味를 떠나서 兩個 國語가 되는 것이다=를 拒否 厭避하는 弊까지 생기게 하였다.(중략) 그러한 國語는 實로 먼 祖上에서 傳해준 國民 共有의 貴重한 遺産이니 이 遺産을 繼承하여 完全히 이것을 次代에 傳하여 주는 것은 우리의 責任이요 또 이것을 琢磨하여 더 좋게 만들어서 傳하는 것은 次代에 對한 責任일 것이다. (줄임) -鄭烈模(1927), ‘朝鮮語研究의 正體는 무엇?’, 『한글』 1권 2호. 한글사.

(13)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쓰인 논문 가운데서는 드물게 ‘조선어 = 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어의 가치가 ‘조상이 전해 준 국민 공유의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차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

24)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언급한 루이 장 칼베의 식민 언어 지배 이론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근대 계몽기 일본어의 세력 확장 과정이나 강점 직후 ‘황실령’, ‘조선귀족령’ 등을 통해 조선인 지배 계급을 회유하고, 다음 단계로 고등 지식인을 식민 질서에 편입하고자 한 정책과도 유사하다.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유’의 사상과 ‘차대에 대한 책임 의식’이다. 이러한 사상은 대부분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한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운동’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용어는 김윤경(1932)의 논문에 쓰인 바 있으며, ‘한글’ 보급을 슬로건으로 한 운동은 1927년 『조선일보』의 ‘한글란’ 신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사에서는 1929년부터 ‘문자보급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은 장지영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글운동’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일보사나 동아일보사의 ‘문자 보급 운동’과는 달리 ‘한글 운동’이라는 용어는 ‘어문 정리’와 ‘보급’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현배(1934)의 “한글 난해의 심리 분석”(『신동아』 1934년 9월호), 이극로(1934)의 “한글 운동”(『신동아』 1934년 12월호), 이극로(1936ㄱ)의 “조선어문 정리 운동의 금후 계획”(『신동아』 1936년 1월호), 이극로(1936ㄴ)의 “조선어문 정리 운동의 현황”(『사해공론』 1936년 5월호), 이극로(1936ㄷ)의 “한글 통일 운동의 사회적 의의”(『조광』 1936년 11월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논문에서는 한글 운동(또는 한글 통일 운동, 조선어문 정리 운동)이 ‘어문 정리’와 ‘보급’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다. 이 가운데 최현배(1934)의 ‘한글 난해 심리 분석’은 규범 통일에 따른 저항 세력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극로(1934, 1936ㄱ, ㄴ, ㄷ)의 다수 논문들은 한글 보급의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글 보급과 관련하여 이극로(1936ㄱ, ㄴ, ㄷ)에서는 “잡지 한글의 역할, 한글 강습회나 강연회, 문예가의 활동, 출판계의 협력, 대중의 총동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안들은 전면적 일본어 사용을 정책으로 내세웠던 일제의 어문 정책과는 상반된 것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시련 또한 적지 않았다. 식민 지배 말기에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²⁵⁾은 그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며, 문자 보급에 대한 방해²⁶⁾나 한글 서적 압수 또는 발행 제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선어학회의 한글 운동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글 운동의 민중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준어 사정이나 사전 편찬과

25) 조선어학회의 시련과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는 한글학회(1971: 12-19)를 참고할 수 있다.

26) 예를 들어 『조선일보』1930년 8월 29일자 ‘安邊 警察은 文字普及도 禁止’라는 기사(정진석, 1999: 37)도 이러한 유예 해당한다.

같은 중대한 작업과 맞물려 있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사투리나 지명 수집, 한글 사용에 대한 의문 해결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학회 기관지 『한글』에 수록된 논문 및 자료의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가 작성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발행된 『한글』 통권 제1호부터 통권 제93호(1932-1942)에 실린 논문과 자료의 편수는 대략 1192개이다.²⁷⁾ 이를 분야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이 실린 자료는 어휘 수집과 관련된 자료이다(448편). 예를 들어, 땅이름이나 사람이름, 시골말과 관련된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국 각지의 『한글』 독자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학회로 보내면, 학회 편집부에서 이를 선별하여 수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음으로는 국어 정책과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가 290편, 국어학과 관련된 것이 114편, 문예물 53편, 국어 교육 관련 37편, 일반언어학 관련 20편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글쓴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최현배(35), 전몽수(35), 이희승(34), 이극로(29), 이상인(25), 이석린(22), 이호성(20), 심의린(15), 이윤재(14), 김윤경(13), 최영해(11), 방종현(11)의 순서로 나타나며, 천혁(12), 정백운(11)과 같이 ‘시골말’과 ‘조선말 지명’을 꾸준히 수집하여 보낸 경우도 나타난다. 이처럼 한글 운동의 성격은 단순한 문자 보급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서의 우리말과 글을 수집·정리하여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이는 이 운동이 민중 지향적이었으며 대중성을 띠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보급이 강화되고 일본어 상용이 강압되는 상황에서 조선어학회 사건과 같은 처절한 탄압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어학회의 저항 정신은 광복 이후 국어 회복의 기반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광복 이후 속간된 『한글』 제11권 제1호(1946.4.)에서 고루 이극로는 다음과 같은 ‘머리사말’을 썼다.

(14) 머리사말

광야의 풍과, 아니 세계의 풍과 속에 ‘한글’의 운명도 곱게 지낼 수는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말로에는 부소불위의 학정이 덮이었다. 그런 가운데 한글 운동은 조선 독립 운동의 근본이란 죄명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생기었다. 1942년 시월에 함경남도 경찰부의 손에 걸리어서 회원 다수가 검거되어 함경 흥원 경찰서에서 취조를 당하고 함흥 형무소로 넘어가서 있었다. 그런 관계로 그 동안에 본회는 문을 닫고 지내다가 이번엔 조선이 해방되는 동시에 우리들도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 (줄임)

27)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05)를 참고할 수 있다.

(14)의 진술과 같이, 일제 강점기 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한글 운동’ 자체가 ‘독립 운동’으로 간주되어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 9월 5일 사전 편찬원 정태진이 함흥의 ‘영생여자고등학교’ 학생 제자들의 증인으로 갔다가 고문으로 억지 자백서를 쓴 데서 시작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억지 자백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일어 상용’을 강압하고, 우리말과 글을 전면 금지하고자 하는 총독부의 정책이 작용하였다. 더욱이 1942년 전후에는 창씨개명 강요, 사상범 예비 구금령, 한글 신문과 잡지 폐간 등이 이어졌다. 그러한 배경에서 친일 성격을 띤 『매일신보』나 극히 일부의 실용 정보 문서를 제외하면, 한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항적인 성격을 띤 운동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4. 나오기

□ 정리

- 1) 짧은 논문에서 일제 강점기의 동화 정책을 제대로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식민 정책이 종속적·노예적 동화 정책을 목표로 했다는 점은 이 시기 만들어진 각종 문건이나 서적, 또는 증언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 2) 일제 강점기의 종속적·노예적 동화 정책은 일본어 보급을 주요 수단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식민 초기의 우민화 정책으로부터 1920년대 문화 정치를 거쳐 일본어 상용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강점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특히 종속적 동화 정책은 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혼인 정책, 인적 수탈 정책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일본어 보급을 추진하였다.
- 3) 일제의 식민 동화 정책에 맞서 우리말과 글을 통일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러한 운동의 뿌리는 근대 계몽기 주시경을 비롯한 애국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이 컸다. 특히 1920년대 이후의 조선어학회 활동은 민중 지향적이었으며, ‘한글 운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남은 문제

- 1) 기초 자료 발굴 문제: 일제 강점기 문자 보급 운동이나 문맹퇴치 운동, 야학 운동 등과 같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민중 계몽 운동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과 정리 문제: 예) 신명균의 『노농독본』
- 2) 조선어학회 회원 개개인의 연구 업적을 종합 정리하여 이들 업적의 해석 및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 예) 분야별 연구 업적= 한글에 수록된 논문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 필요

㉮ 참고 문헌

1. 논저

-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 침략정책사』, 한길사.
- 고영근(1987), 『국어문법의 연구, 그 어제와 오늘』, 탑출판사.
- 고영근(1994), 『국어학 연구사』, 학연사.
- 고영근(1998), 『한국 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고영근(2008),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 고영근, 김민수, 하동호 편(1977), 『역대문법대계』, 탑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2000), 『21세기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 국문연구소(1909), 『국문연구소의정안』(역대문법대계 3-10), 탑출판사.
- 국문연구소(1909), 『국문연구안』(역대문법대계 3-09), 탑출판사.
- 김규창(1985), 『고 김규창 교수 유고 논문집—조선어과 시말과 일어교육의 역사적 배경』, 김규창교수유고논문집 간행위원회.
- 김동환(2002), 「일제강점기 진학준비교육과 정책적 대응의 성격」,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민수(1977), 『주시경연구』, 탑출판사.

- 김민수(1990), 「조선어학회의 창립과 그 연혁」, 『주시경학보』 제5집, 주시경연구소, 50-74.
- 김진두(1996), 『1910년대 매일신보의 성격에 관한 연구—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김형목(2000), 「한말·1910년대 여자야학의 성격」, 『중앙사론』 14, 한국중앙사학회, 28-29.
- 김형목(2001), 『1910년 전후 야학운동의 실태와 기능』,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형목(2005), 「한말 야학 운동의 기능과 성격」, 『중앙사론』 21,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회, 394-424.
- 나카스카[中塚明](1983), 「내재적 발전론과 제국주의 연구」, 조선사연구회 엮음, 『새로운 한국사연구』, 돌베개.
- 남창균(1995), 『일제의 일본어 보급정책에 관한 연구—일제말기(1937-1945)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 노영택(1979),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 민현식(2002),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방법의 재검토」, 『동양학』 제32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박병채(1983), 「국어 운동」, 『일제하 문화 운동사』. 현음사.
- 박봉배(1987), 『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봉배(1988), 「교과교육학으로서의 국어과교육」, 『인산 김원경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김원경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박순애·배종각(2000), 「일제말 국어보급운동의 전말」, 『일본어문학 제12권』, 일본어문학회.
- 성주현(2002), 「일제의 동화정책과 종교계 동향」,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 - 1910년대』, 신서원.
- 유성희·박은경(1998),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인문사회과학연구』 1, 용인대인문사회과학연구소, 141-157.
- 윤여탁 외(2005), 『국어교육 100년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정일 외(1991),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 이기문(1976), 『주시경전집』(상, 하), 아세아문화사.
- 이병혁 편저(1986), 『언어사회학 서설—이데올로기와 언어』, 까치.

- 이성연(1988),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 이연수(1985), 『일본의 식민지언어정책과 한국인의 대일의식』,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용호(1975),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 이용호(1976), 『미군정기 한글운동사』, 성청사.
- 이용호(1994), 「갑오경장과 어문정책」, 『새국어생활』 제4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종국(1991), 『한국의 교과서-근대교과용도서의 성립과 발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종국(2002),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 이해명(1991), 『개화기 교육개혁 연구』, 을유문화사.
- 이현희(1991), 「주시경 선생이 후세에 남긴 업적과 영향」, 『주시경학보』 제8집, 주시경연구소, 250-256.
- 임홍빈(1991), 「주시경에 대한 전기적 기술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제8집, 주시경연구소, 236-249.
- 장태진(1971), 「국가어의 개념 -언어사회학적 고찰-」, 『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 한글학회.
- 정용화(2004), 「유길준의 생애와 사상」, 『한힌샘 연구』 제17집, 한글학회.
- 정인문(2006), 『1910·20년대의 한일 근대문학 교류사』, J&C, 9-65쪽.
- 정재철(1985), 『일제의 대 한국 식민지 교육정책사』, 일지사.
-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진석(1999), 『문자보급운동 교재』, LG상남언론재단.
- 정태수(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 (상), (하)』, 홍지원.
- 조선어학회(1933), 『한글마춤법통일안 집성』(역대문법대계 3-20), 탑출판사.
- 조선총독부(1912),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역대문법대계 3-15), 탑출판사.
- 조선총독부(1930), 『언문철자법-제3차 개정안-』(역대문법대계 3-17), 탑출판사.
- 조용만(1982), 「일제하의 우리 신문화 운동」,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현음사.
- 조정봉(1995), 「일제하 야학의 갈등구조에 대한 교육사적 연구」, 『교육철학 제13집』, 한국교육철학회.
- 차기벽(1985), 「일본 제국주의 식민정책의 형성 배경과 그 전개 과정」, 『일제의 한국 식민 통치』, 정음사.
- 차석기(1999), 『한국 민족주의 교육의 생성과 전개』, 태학사.
- 최경봉(2008), 「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의 지향」, 『제47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학회.

- 최옥경(1993), 『일제의 대한 식민지 언어정책의 배경과 언어관 고찰』, 전남대 석사 학위논문.
- 최현배(1940), 『한글갈』(1960, 정음사).
- 하동호 편(1977), 『국문론 논설 집성』, 탑출판사.
-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 한글학회(1976), 『동인지 한글』 영인본(1927년 7월 창간호-1928년 10월 2권 2호), 한글학회.
- 허만길(1994), 『현대의 국어 정책』, 국학자료원.
- 허웅·박지홍 엮음(1980),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과학사.
- 허재영(2004),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정책 연구」, 『일제강점기 일본어 보급 정책 자료』, 역락.
- 허재영(2005), 「국어정보화와 전산 기초 자료 구축-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한글』을 중심으로-」, 『한글새소식』 2005년 7월호, 한글학회.
- 허재영(2009ㄱ), 『근대계몽기 어문 정책과 국어교육』, 보고서.
- 허재영(2009ㄴ),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
- 허재영(2010ㄱ), 『근대계몽기 어문 정책과 국어교육』, 보고서.
- 허재영(2010ㄴ), 『통감시대 어문교육과 교과서 침탈의 역사』, 경진.
- 허재영(2011), 『일제강점기 어문 정책과 어문 생활』, 경진.
- 헨버트(1886~1892), 『스민필지』(복사본).
- 호사카 유우지(2002),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조선과 만주, 대만을 중심으로』, J&C.
- 홍용선(1963), 「한글첫걸음 시대, 교과서, 교육과정」, 『국어교육』(현대교육학총서1), 현대교육학총서출판사.
- 홍윤표(1987), 「근대국어의 표기법」, 『국어생활』 9. 87년 여름. 국어연구소.
- 황민호(2002),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언론정책과 매일신보」,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 신서원.
- 加田哲二(1940), 『植民政策』, グイアモント社.
- 乙竹岩造(1938), 『日本教育學教授法摘要』, 培風館.
- 帝國地方行政學會(1923), 『綜合教育學教科書』, 朝鮮印刷株式會社.

2. 자료

舊韓國時代 新聞類 : 『皇城新聞』, 『帝國新聞』, 『大韓每日申報』, 『萬歲報』 影印本.

舊韓國時代 學會誌類 : 亞細亞文化史 影印本.

亞細亞文化史(1977), 『舊韓國 官報』, 亞細亞文化史.

日帝強占期 新聞類 : 『東亞日報』, 『朝鮮日報』.

朝鮮教育會, 『文教の朝鮮』, MT出版(總87冊 中 目次), 1925. ~1945.

朝鮮新聞社,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1936.

朝鮮總督府, 『施政年譜』, 國學資料院(總24冊), 1910. ~ 1945.

朝鮮總督府, 『月刊朝鮮』, 高麗書林(總47冊), 1920. ~ 194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亞細亞文化社 (總 144冊), 1910.~1945).

허재영(2011), 『일본어 보급 및 조선어 정책 자료』, 경진.

허재영(2011), 『조선교육령과 교육 정책 변화 자료』, 경진.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1부 조선어학회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제 발표 2 || 발표문

조선어학회의 수난과 현대 한국어의 발전

최경봉

원광대학교 교수

kbchoi@wonkwang.ac.kr

1. 머리말

조선어학회 사건은 우리 어문운동사의 가장 큰 상처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가 조선어학회 사건과 맞물려 논의되고, 오늘날 우리의 국어의식을 성찰하는 일이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회 사건을 의식하며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21세기에 이르러서까지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회 사건을 의식해야 하는 국어 현실을 불편해 할 수도 있지만, 아래 질문에 답하다보면 왜 조선어학회가 남긴 유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1)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의 역사에서, 하나의 어문단체가 식민지 문화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식을 지속적으로 일깨웠던 경우가 있었던가?
- 2)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의 역사에서, 하나의 어문단체가 국가의 어문정리에 준하는 민족어정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족어의 위기 상황을 돌파한 예가 있었던가?

3)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 중 독립이 되자마자 자신들의 모어로 국어를 정립하여 교육한 예가 있었던가?

세 가지 질문 중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질문이다. 이 글은 조선어학회 수난의 유산이 해방 이후 국어정립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밝히면서 현대 한국어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글은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가 국가를 대행하는 단체가 되어 국어정립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 진행된 국어정책의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까지의 국어정책을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2. 국어 정립 활동의 동력, 저항적 어문민족주의

저항적 어문민족주의의 형성 맥락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본의 동화정책이 극심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일어난 민족주의 탄압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일본은 전시동원 체제 확립을 위한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1930년 후반부터 교육 현장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전 사회에서 일본어 상용을 강요하였다. 20년대 들어 시작된 소위 문화 통치기에 민족주의 단체를 일부 허용하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변하였다. 수양동우회사건(1937-1938), 흥업구락부사건(1938), 조선, 동아 등 조선어신문의 폐간(1940) 등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1942년에 일어난 조선어학회 사건은 사실상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위에 열거한 사건에 최현배, 이운재, 김윤경 등 조선어학회의 핵심 성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은 1937년 이후 전시 동원 체제의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민족운동을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어학회 사건 연루자들의 기소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어학회 사건을 처리하면서 일본 경찰은 조선어학회 관계자들에게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내란죄로 기소하였고, 조선어학회를 학술단체를 가장하여 국체(國體) 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어학회 활동 특히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을 내란 선동을 목적으로 한 일로 몰고 간 것은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 조선어사전은 1939년 조선총독부의 출판 허가까지 얻은 상태였고, 원고의 일부에 대한 조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9년 당시까지 조선총독부는 조선어학회가 주도하는 조선어 정리 운동을 비정치적인 활동으로 봤던 것이다. 조선어학회 또한 일관되게 학회의 성격을 순수 학술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총독부의 이개언어병용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민족어운동을 전개한 조선어학회의 저항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어학회는 한글 강습 활동, 조선어사전 편찬, 철자법 및 표준어 제정 등과 같은 기능적 사업을 주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조선어학회가 주도함으로써 조선어 정리라는 기능적 사업이 비로소 민족 문화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어학회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조선어 정리 사업이 대한제국 시기의 국어운동에서 연원(淵源)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조선어 정리의 정통성을 환기하였기 때문이다.¹⁾ 이때 정통성에 대한 확신은 “우리말이 소멸되면 민족도 소멸된다.”는 위기의식과 결합하여 저항성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일본어 사용 정책으로 인해 민족어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었던 1940년까지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과 규범화 사업이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이러한 저항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어 정리 사업과 조선어학회가 주도한 조선어 정리 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²⁾ 이런 이유로 조선어학회의 어문 정리 사업은 일제의 파시즘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성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어를 명실상부한 공용어로 확립하고자 했던 조선어학회의 시도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지만, 개화기 국문운동시기부터 형성되어 오던 어문민족주의는 식민지 현실에 부딪혀 굴절되고 좌절되는 와중에 더욱 공고해졌다. 조선어학회의 공고해진 어문민족주의와 우리말 정리에서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은 해방 이후 국어 정립 활동의 성격을 규정할 만큼 강력했다.

- 1) 조선어학회가 ‘한글’을 강조하고, 형태주의철자법을 고집한 것은 곧 조선어정리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완수하겠다는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조선어정리를 기능적으로만 보는 논의 그리고 조선어정책 문제에서 조선총독부와 조선어학회의 협력 관계에 주목한 논의에서는 조선총독부와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정리 사업을 같은 차원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조선총독부와 길항하며 조선어규범화를 완성한 조선어학회 활동의 의미를 도외시한 결과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최경봉,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나타난 인식태도를 비판하며-』, 『민족문학사연구』31, 2006에서 논의한 바 있다.

국어 정립의 논리와 국어 문제에 대한 인식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는 비로소 국가어의 규범을 제시하고 우리말 교육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었다. 식민통치에서 해방됨으로써 표준화된 근대어를 향한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문민족주의는 국어 재건 논리로 재구축되었다. 일제강점기라는 폭력적 상황을 견딘 힘이었던 수세적 어문민족주의는 독립국가의 국어를 건설한다는 적극적 논리로 진화한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국어정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어의 규범에 대한 논의가 차단되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의 치열했던 철자법 논쟁을 생각한다면, 해방 이후 국어 규범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소지는 있었다. 실제 일부 논쟁은³⁾ 있었으나 이는 국어 정립 활동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53년 이승만 정권기에 추진되었던 한글간소화방안 또한 퇴행적 해프닝으로 인식되면서 철회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내내 민족어 수호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조선어학회의 어문정리 결과를 국어의 규범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당시 국어 정립 활동의 핵심 목표는 다른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까지는 남북한은 공히 규범의 확립과 사전의 편찬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국어교육의 기반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에, 이는 국어학계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는 또한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어문 정리 사업 중 미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 특히 해방 공간에서 조선어학회가 사전편찬에 집중하면서 어문규범을 일부 손질했던 것은 국어 정립 활동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해방 이후 국어 정립 활동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내내 진행되었던 민족어 정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띠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활동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반면, 국어에 스며든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국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은 대중적 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우리말 도로찾기’로 상징되는 일제잔재 청산의 과제는 당시 국어 정립 활동의 논쟁적 이슈였다.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어문운동은 전사회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본어 잔재의 청산은 이론의 여

3) 홍기문은 『경향신문』(1947.2.13)에 철자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난삽한 철자법보다는 실용상 簡易便利한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조선어학회의 형태주의 철자법을 비판했다. 그러나 신영철과의 지상논쟁이 있었을 뿐 실제 철자법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다.

지가 없는 과제였지만, 국어 정립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구체화된 국어관은 한자 문제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한자폐지론이 강조되면서 조선어학회 내부에 균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남긴 어문민족주의라는 유산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어관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조선어학회를 이끌어온 주축 중에서 이희승은 한자폐지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선어학회에 대립하던 국어문화보급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조선어학회 초대간사였던 이병기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지양한다는 원칙하에 조선어학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다.

시대적 요구를 의식하는 국어정책이란?

조선학술원 원장 백남운은 『자유신문』(1946년 3월 5일자)에서 ‘과거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 조선과 중국의 교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자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점, 한자를 섞지 않고 우리말로만 모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한자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선학술원 대표 자격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볼 때 백남운의 견해는 조선학술원의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조선학술원은 한글전용 정책을 주도하던 조선어학회와 대립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전용 정책이 본격화되던 1946년에 결성된 ‘국어문화보급회(國語文化普及會)’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어문화보급회’는 조선어학회 중심의 ‘한글문화보급회’와의 대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이 단체의 성격은 아래 기사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의 자랑이요 우리의 생명인 국어의 연구와 보급은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 긴급한 문제임에 비추어 國語文化普及會가 새로이 탄생되었다. 동회는 訓民正音의 근본정신을 옳게 이해하여 통일된 국어의 연구 보급에 힘쓰는 동시에 옳은 민주주의 노선 위에서 크게 국어문화를 일으키어 세계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터이라고 하여 장차 전선 각지에 지부, 분회를 두어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리라고 하는 바 앞으로 활동이 자못 기대되는 바이다.”⁴⁾

4) 『서울신문』 1946.2.12.

“訓民正音의 근본정신을 옳게 이해하여 통일된 국어의 연구 보급에 힘쓰는 동시에 옳은 민주주의 노선 위에서 크게 국어문화를 일으키어 세계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터”에는 ‘옳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국어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어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한 것은 훈민정음의 근본정신이 한글전용이 아님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노선이 한글전용에 있지 않음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문화보급회의 참여인물들 또한 이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단체에 참여한 홍기문, 이승녕, 김수경, 이희승 등은 조선어학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으며, 비판적 민족주의를 견지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 중 민족주의를 포용하여 학술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던 유응호, 신남철, 홍기문 등은 조선어학회의 어문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는데, 이들은 한자폐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승녕, 이희승 등과 연합하였던 것이다. 국어문화보급회의 관점은 미군정청과 조선어학회의 일방적 국어정책에 반감을 지닌 지식인 사회에서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 한자폐지론자라 할 수 있는 김기림(金起林)이 국어심의회 참석을 거부한 것은 당시 지식인 사회의 기류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다.

“1945년 겨울에 군정 문교부에서 부른 국어 심사위원회에 필자도 당시 문단 측 관계자의 한 사람의 자격으로 다른 몇 분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주최한 편에서 다짜고짜로 교과서에서만이라도 한자를 폐지하자는 一路로 휘몰아가는 바람에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면밀 주도한 과학적 예비 공작 없이, 더군다나 학교 문밖에서 일어나는 언론, 출판의 무통제한 현상을 그대로 둔 채 학교 교과서에서만 과감한 실험을 해가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있고, 국어 심의회의 토론은 결국 사후승인으로서 요구될 것밖에 아닌 것임을 알았을 때 그 이상 참석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을 느끼고 다른 몇 분과 함께 물러나오고만 일이 있다.”⁵⁾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학계와 일반 대중의 언어 정서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실증주의자의 연합에 일부 민족주의 어문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학계에서는 어문민족주의가 힘을 잃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어학회가 어문교육을 장악한 상태였고, 당시 한자폐지 정책이 교육 부문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국어문화보급회의 활동은 대중과 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⁶⁾ 더구나 당시의 문맹률을 고려할 때 한자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5) 김기림,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1950

6) 미군정청학무국 사회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동아일보』 1946.1.11)를 보면 한자폐지 찬성이 72.5%였다. 미군정청이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문제는 있지만 찬성 비율이 압도적인 것에서 이 당시 여론을 짐작할 수 있다.

기층 민중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도 안고 있었다. 특히 어문정책에서 민중적 관점을 강조했던 마르크스주의 어문학자들이 한자폐지에 반대했다는 것은 당시 한자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조선학술원, 국어문화보급회 등의 활동은 남북한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특히 조선학술원과 국어문화보급회에서 활동했던 홍기문, 유응호, 김태준, 김수경 등이 대거 월북하여 북한의 어문학계에 편입하였지만, 조선어학회 출신의 민족주의자들이 어문정책의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들의 견해가 수용될 여지는 없었다. 북한에서는 이극로를 비롯한 조선어학회의 민족주의자들이 김두봉 등 민족주의 성향의 마르크스주의자와 연합하여 한자폐지와 국어순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어문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인물들은 한자폐지 및 국어순화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국어 정립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이룬 조선어학회의 성과와 권위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하였다. 특히 독립 국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박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었는데 남북 국어학계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말 발전을 계획하는 정책에서 시대정신을 간과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 인지를 말해주는 사례이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 공고해진 어문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국어 정립 활동을 펼쳐나갔고, 이는 당시 민족 정체성을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국어문화보급회의 활동이 점진적 한자폐지론에 힘을 실어준 점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글을 전용하는 학교와 한자를 혼용하는 사회의 괴리 문제가 부각되었고, 한자교육이 체계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어학회의 정책을 견제할 어문운동 단체가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3. 국어 인식과 국어정책의 정체와 퇴행

해방 이후 전개된 국어 정립 활동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유보되었고, 1953년 이후에야 남북한 국어학계는 사전편찬과 표준문법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었다. 남한에서는 1957년 『큰사전』이 완간⁷⁾되었고, 1963년 학교문법통일안⁸⁾이

마련된다. 북의 경우에도 1960년 사전편찬이 종결되고 1964년 표준문법이 정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이는 국어 규범화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한국어의 범위와 특성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1960년대는 국어 정립을 위한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진행된 논쟁의 수준이다. 특히 학교문법과 관련한 논쟁은 학교문법의 방법론보다도 용어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한자폐지 논쟁의 연장선상일 뿐이었다. 다음 글은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최현배씨는 ‘이름씨 안용근이름씨 갈말 바탈그림씨 월갈’이어야 민족정신이 양양되고 민족문화가 발전한다고 ‘애국심’에 호소하려고 한다. 이런 이론은 낡고 케케묵은 소비니즘의 속임수이며 20세기 후반기에 한국에서만 보는 18세기 이론이다. ‘날뜰’ 식 복고주의의 고어풀이 같은 조작으로 어떻게 국민이 애국심을 자극 받을 것인지.”¹⁰⁾

위에 인용한 글에서 이승녕은 어문민족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학교문법 통일을 위한 논쟁은 문법과동이라고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논쟁의 초점은 한자어 품사 용어를 채택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3년 5월 10일 ‘학교문법통일 준비위원회’가 한자어 품사 용어를 채택하자 한글학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승녕은 위의 글을 써서 한글학회를 비난했다.

그러나 논쟁은 품사 용어에 대한 논쟁으로 그쳤다. 이승녕의 비판은 한글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실제 문법교육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이다. 논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학교문법을 과학적 연구방법론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실증주의 국어학자들의 주장을 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주장이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문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

7) 『큰 사전』은 이후 편찬된 모든 사전의 모태가 되었고, 『큰 사전』 완간 이후 이를 토대로 50년대 말과 60년대에 걸쳐 여러 종의 국어사전이 편찬되었다.

8) 1962년 3월 학교문법 통일 준비 위원회가 구성되고, 1963년 통일문법이 결정된다. 1963년 2차 국어과 교육과정 검토위원회에서 채택된 학교문법 통일 방안은 근거하여 교과서를 구성하게 된다. 문법교육사와 관련한 사항은 이관규, 『문법 교육 연구사』, 『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9) 현재의 북한 국어문법은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가 1960년에 발행한 『조선어문법』 1과 1964년 김수경·림종률·김백련·송서룡·김영환 등이 집필한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등에 기초한 것이다.

10) 이승녕, 『허위조작의 일방적인 은폐-최현배씨의 문법시비를 비판함』, 『새교육』, 1965.2.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학교문법에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문법교육이 국어학 논의에 종속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법과동 이후 국어학계는 실증주의자들이 주도하고, 대중을 상대하는 어문운동은 어문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어문운동이 언어 이론에서 괴리되어 진행되고, 국어 연구가 언어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아내지 못한 언어관이 분열적으로 공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1970년 진행한 한글전용 정책 및 유신체제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과행적인 국어 순화 운동은 이론에서 괴리된 어문운동의 귀결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어현실 문제를 도외시하는 국어 연구의 귀결점을 보여준다.

1970년 모든 교과서에 있는 한자를 삭제한 순한글 교과서를 출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한자 사용도 금지했지만, 성근 정책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1972년 한자교육을 재개하고 상용한자를 정비하게 된다. 그러나 강압적인 한글전용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책의 초점을 한자 문제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어정책의 논의 수준 또한 다시 해방 직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버렸다.

게다가 1970년대 국어 순화 운동의 진행 상황은 국어정책의 문제점과 국어국문학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76년 당시 대통령이 국어 순화를 지지하자, 국어정책은 곧 국어 순화 정책이라고 할 만큼 모든 역량이 국어 순화에 집중되었다. 여기에 더해 국어국문학회, 국어학회, 백산학회, 진단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어문학회 등 9개 학회 대표들이 공동명의로 1976년 4월 25일 국어 순화 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고, 외래어 순화와 관련한 크고 작은 행사가 대학마다 학회마다 유행처럼 열렸다. 어문민족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성장한 학회들이 역사상 가장 과행적이었던 국어 순화 운동을 지지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지만, 이는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아내지 못한 국어관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당시 국어 순화 정책의 문제는 왜곡된 국어의식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데 있었다. 특정 외래어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특정 고유어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정작 우리말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둔감하였다. 국가는 각종 행정조치와 사전 검열 등을 통해 국어 순화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지만, 난해한 문장과 비문으로 가득 찬 행정문서와 법률문서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정책을

견인해야 할 민간학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글학회가 어문민족주의에 경도된 국어정책을 주도하였다면, 국어학회와 국어국문학회는 국어정책과 국어 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전망도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국어 순화 운동의 문제의식이 해방 이후 진행된 ‘우리말 도로찾기’의 문제의식에서 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1년에 국어정책의 연구 동향을 설명한 다음 글¹¹⁾은 정체된 인식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이 동향 보고에서 빼어 버린 부분이 있다. 양적으로는 무려 반이 넘는 정도를 차지한 한글과 한자 사용에 대한 논쟁이다. 두루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오래된 논쟁이다. 오랜된 논쟁일수록 더욱 더 발효되어 진국의 논쟁을 보여 주어야 할텐데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빼어 버린 까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대부분이 지나간 50-60년대의 화법에서 거의 진화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 주었다는 말로 대신한다.”

1970년대를 휩쓴 국어 순화 운동과 관련하여, 국어국문학계가 국어 순화의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국어 순화 운동은 사회적 의사소통 도구인 우리말의 사용 능력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2000년 이전까지 우리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국어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한 적이 없었다. 이는 파행적인 문법 파동과 국어 순화 운동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4. 현대 한국어의 발전이 의미하는 것

국어의 건설에서 국어의 관리로

해방 직후 조선어학회는 독립국가 건설과 민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직시했었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당시 국어 정립 운동을 주도했다. 국어 정립이 과제이던 시대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상징되던 저항의 경험은 국어 정립 활동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문법 파동과 국어 순화 운동의 파행성은 국어 정립의 시대

11) 김하수, 「국어정책」, 『국어학 연감』, 2001.

에서 국어 발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국어정책의 주체들이 문법교육과 국어 순화 정책에 대해 발전적 전망을 지니고 접근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국어정책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의 시대정신과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어떻게 다른가?

해방 이후 진행된 국어 정립 과정은 국어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한글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어를 제정했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당시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조선어학회는 표준어 정립과 사전편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국어 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표준어, 맞춤법 등과 같은 어문규범을 재규정하는 활동이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전편찬이 한국어를 재정립하는 일이라 여길 수도 없다.

국어규범과 관련되는 국어정책은 규범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규범을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어 규범 정책은 국어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대중들을 계도하는 것보다는 국어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기술하는 데 방점이 찍히게 될 것이다. 실제 2000년 이후 ‘국어 정보화 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제작 사업이 추진되는 점 등은 국어정책이 국어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어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국어관이 아니라 국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어관이 힘을 얻어가면서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국어정책론 분야에서 국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논의가 증가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의 관리가 원활하면서도 품격 있는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국어 관리 정책은 국어 사용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정책, 국어교육 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어문정책 기관의 주도하에 진행되기보다는 어문단체, 교육계, 출판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역동성을 띠게 될 것이다.

국어의 다양성 보장

현재 국어 현실에서 어문규범으로서 표준어규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음 글¹²⁾은 국가 규범으로서의 표준어규정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적으로는 지금까지 국가가 고시한 어문 규범에 언급된 3,500여 개의 이런 단어들만 표준어가 되며, 이것만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을 표준어 사용자라고 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조건 하에서는 우리나라에 표준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준어가 현실성을 지니려면 언어적 실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어를 어휘 및 발음의 규범이 아닌 공통어의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의 표준어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정책 안에서 현실 언어와 규범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언어 사용의 통일성을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¹³⁾ 국가가 모든 어휘의 형태를 결정하여 공통어를 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계한 표준어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제 역할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공통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서울말이 공통어라고 한다면, 서울말의 실제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공간과 지역 언어가 분명하게 연결되던 시대와 달리 현대는 지역 공간과 지역 언어의 연결 고리가 분명하지 않은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통어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로 한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통어를 서울말이라고 특별하게 한정하는 것은 언어 정책상 거의 의미가 없다. 서울말 화자를 서울 지역 거주민으로 한정할 수도 없는 것처럼,

12) 김선철, 표준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2008.

13) 이런 점에서 볼 때, 2011년 8월 22일은 표준어 정책사에서 의미 있는 날이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39개의 단어들을 표준어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39개의 단어가 얻은 표준어의 지위를 다음과 같은 단어가 얻지 못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결판지다, 꺼림칙하다, 어쭙잖다, 으시대다’가 비표준어이고 그에 대응되는 ‘거방지다, 꺼림칙하다, 어쭙잖다, 으스대다’가 표준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결국 복수표준어는 확대되어야 하고, 복수 표준어의 확대는 결국 표준어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규정 방식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통어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과 지역 간의 실시간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생활 비중이 늘어나면서 언어의 지역적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말이 전국적으로 사용되면서 공통어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공통어의 생성과 활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공통어를 서울말로 한정하는 것의 언어 정책상 의미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 내에서 공통어의 변화를 불러올 만큼 지역적 세력권이 재편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남북통일에서 비롯되는 국가 영역의 변동을 기점으로 공통어가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일의 방식에 따라 공통어의 정립 방식도 달라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공통어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통어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⁴⁾

그러나 국어정책이 국어의 변화 추이를 따라 이를 정리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국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 또한 국어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어의 공공성 보장

탈근대적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근대적 국어인식의 산물인 표준어정책이 비판받고 있지만, 언어의 공공성 보장은 국어정책의 핵심적 목표이다. 이 중 현실적으로 절박한 것은 언어적 일탈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탈적 언어사용은 이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전자매체의 확산과 더불어 심화된 면이 있다. 규범 우선의 언어관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규범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비속어, 외래어, 인터넷상에서의 특정 언어습관을 과장하여 언어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속어나 외래어나 언어 질서를 과

14) 남북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공통어의 형성을 자연적인 흐름에 맡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같은 작업의 결과는 공통어의 형성이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위적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괴하는 표현들이 우리말 문화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모범적인 글이나 담화가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이러한 글과 담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언어 습관을 형성해가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는 입시제도 등 사회제도의 개혁과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어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국어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좋은 글을 접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말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곧 국어순화의 문제 의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국어순화가 한자와 한글의 대립에 매몰되었던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어순화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말의 소통 문제를 국어정책적 관점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법률문을 쉽게 풀어쓰는 것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우리말 사용 능력을 기르는 문제와 관련하여 글쓰기 지도 기관을 설치한 것도 중요한 진전의 예이다. 2000년 문화관광부의 연구보고서로 “세계 문장상담소(writing center) 운영 상황 조사 연구”¹⁵⁾가 있었는데, 이는 글쓰기 교육을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문장상담소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국어상담소가 설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국어상담소가 국민의 문해력과 작문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때 한국인의 국어 능력과 한국어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공동체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공적 언어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공적 영역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언어 통제의 방법론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언어 통제가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 표준어 규정이 전체 언어의 통제로 확대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관공서의 공공문서를 중심으로 통제된 어휘와 문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의 관공서, 학교 등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어휘와 문장의 규범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어휘와 문장의 규범화는 간명한 한국어로

15) 윤여탁, 세계의 문장상담소 운영 상황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2000.

공공문서가 작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수자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국어정책의 주체 세력을 확장하는 일

국어정책의 주체는 국립국어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정책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연구나 국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을 포괄한다고 할 때, 국어정책의 주체에는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국어학자, 국문학자, 교사, 작가, 언론인, 출판업자, 국어운동 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립국어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제외한 여러 주체들이 국어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책임을 느껴야 할 주체는 국어국문학계이다.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학문의 전문화 경향과 함께 국어학은 국어운동과 관련 없이 영역을 구축하며, 국문학은 국어학의 전문성을 존중 혹은 경원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어정책에서 방관자 역할을 자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정책론이 학문적 체계성을 띠지 못하고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어정책에 대한 논의가 학술담론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 글¹⁶⁾은 이러한 상황을 가장 아프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현 단계의 국어정책론은 자체의 고유한 쟁점 개발이 불충분한 상태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허점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필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급박하게 터져 나오는 사회적 문제에 그때그때 다급하게 단편적인 답변을 해 나가기에 바쁘기만 하다. 언어 정책에 대한 일반성 있는 논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어라는 특수한 개별언어의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것을 다룰 때 각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개념의 발견, 그 핵심 개념에 대한 각 부문에서의 논점 개발, 각 논점들에 대한 통합적 논의 등으로 흘러 나가는 학술 담론의 흐름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국어정책론의 끝마무리를 대변하는 자아비판이자 동학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우리의 국어정책론이란 국어학자들의 시사 단평 정도에 그쳐서는 아닐 것이다.”

16) 김하수, 「국어정책」, 『국어학 연감』, 2001.

2001년에 쓰인 국어정책론의 현황 평가는 2012년 현재 좀 더 나아졌을까? 구체적인 사업이 확장되었다는 점은 발전으로 볼 수 있지만, 국어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의 빈곤과 철학의 빈곤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학술적 담론으로서의 국어정책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통일문제, 소수자의 언어적 권리문제, 재외동포들의 언어문제 등이 철학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겨레말사전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북한어 연구와 남북언어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연구의 축적과 함께 문제의식도 깊어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의 언어적 권리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 또한 국어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런데 많은 정책 연구들이 대부분 기능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어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철학을 숙성시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 일이 국가의 주도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말 관련 학술단체와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국어운동이 국가의 정책과 길항하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어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17) 민현식, 『국어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 문제』, 『세계한국어문학』3, 2010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다민족국가로 변해갈수록 ‘민족정체성교육’보다 ‘국가정체성교육’을 강조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가 나타난 것은 국어문화의 담론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㉞ 참고 문헌

- 고영근,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2008.
- 김민수, 『국어정책론』, 고려대출판부, 1973.
- 김선철, 「표준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2008.
- 김하수, 「국어정책」, 『국어학 연감』, 2001.
- 민현식, 「우리 말글의 살아온 길과 나아갈 길(2)—제2부 우리 말글의 현재와 나아갈 길—」, 『선청어문』37·38, 2010.
- 민현식, 「국어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 문제」, 『세계한국어문학』 3, 2010.
- 이관규, 「문법 교육 연구사」, 『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2005.
- 이병근, 「근대국어학의 형성에 관련된 국어관: 대한제국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2, 2003.
- 이상규 · 조태린,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표준어 넘어서기—』, 태학사, 2008.
- 이연숙 저, 고영진 · 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 2006.
- 조태린, 「국어라는 용어의 비판적 고찰」, 『국어학』 48, 2006.
- 조태린, 「근대 국어 의식 형성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언어문화』 39, 2009.
- 최경봉,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나타난 인식태도를 비판하며—」, 『민족문화사연구』 31, 2006
- 최경봉, 「근대적 언어관의 전개와 국어정립이라는 과제의 인식 양상」, 『동방학지』 158, 2012.
-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2005.
- 최경봉, 『한글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2.

제 2 부

조선어학회 정신의 계승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 기념 강연 /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2부 조선어학회 정신의 계승: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기념 강연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의 필요성과 역할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wonpark@ewha.ac.kr

1. 서론

언어와 문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근간 요소임.
효과적인 어문정책의 존재 여부는 민족의 흥망과 성쇠를 좌우하게 됨.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위협받던 70년 전을 되새기
면서 어문학 관련 전공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함.

2. 21세기 현재 한국의 상황

- 가.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력에 대비되는 중산층의 약화
- 나. 해외 한국학 내지 한국어 교육의 확산에 대비되는 국내 국어교육 내지 국어 정책의 빈약
- 다. 한국 대중문화의 한류 바람에 대비되는 한국적 정체성의 파괴
- 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공생과 조화의 철학 부재
- 마. 사교육 열풍 등 사회적 신분 전환의 욕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치관의 부재
- 바. 인터넷 등 매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에 관련된 언어 사용의 규범 부재

3. 연합회 결성의 당위성과 필요성

3.1. 연합회 결성의 당위성

- 가. 공동주의
- 나. 융합주의
- 다. 혁신주의
- 라. 국제주의

3.2. 연합회 결성의 필요성

가. 한국학의 메카로서의 한국어문학을 정립해야 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문학의 메카가 필요하다. 그러한 한국학의 메카 육성은 ‘국어국문학’과 관련분야에서 시작해야 한다.
- 언어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한국어학은 한국학 나아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그러기에 한국학 및 제반 학문의 용어나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또 그러한 용어의 정합성을 논의하는 일은 한국어학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
- 문학은 삶의 바탕이 되고, 삶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이 된다. 국문학은 우리 민족이 살아온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문학 관련 분야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나. 어문학 관련 전공자의 대동단결이 필요함

- 한국 인문학의 메카로서의 《국어국문학과 관련 분야》가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어국문학과 관련 분야 전공자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 한국학이 전 세계의 학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 동시에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한국학 나아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제반 학문이 세계 학계의 중추로 성

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학문의 기초로서 국어국문학이 세계의 관련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공자가 모두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4. 연합회의 역할

4.1. 한국적 인문학의 비전 제시

- ◆ 21세기 한국의 인문학이 가져야 할 비전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비전 : 공존과 도약을 선도하는 인문학

다언어 사회의 공존과
민족의 도약을 선도하는
인문학 연구 · 정책 수립 · 보급의 중심



목 표

1. 인문학의 세계화
2. 인문학의 토착화
3. 인문학의 중심화
4. 인문학의 체계화
5. 인문학의 문화적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4.2. 한국적 비전의 공동 연구

가. 훈민정음

- 세종 28년 9월 상한의 훈민정음 반포
-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등 8인이 공동 저술한 <훈민정음>은 문자의 창제자, 제자 원리, 제자 과정 등을 서술한 인류의 유일한 보물

나. <한글마춤법통일안>

-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 경과의 개략을 말하면, 1930년 12월 13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마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인(권 덕규, 김 윤경, 박 현식, 신 명균, 이 극로, 이 병기, 이 운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열모, 정 인섭, 최 현배)으로써 2개년간 심의를 거듭하여 1932년 12월에 이르러 마춤법 원안의 작성을 마치었다. 그리고, 또 위원 6인(김 선기, 이 갑, 이 만규, 이 상춘, 이 세정, 이 탁)을 증선하여 모두 18인의 위원으로써 개성에서 회의(1932년 12월 25일~1933년 1월 4일)를 열어 그 원안을 축조토의하여 제1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위원 10인(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운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었다. 그 후 6개월을 지나 대체의 수정이 끝났으므로, 또 위원 전체로써 다시 화계사에서 회의(1933년 7월 25일~8월 3일)를 열어 그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여 제2독회를 마치고, 또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위원 9인(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운재, 이 희승,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어 최종의 정리가 다 마치었으며, 본년 10월 19일 본회 임시총회를 거치어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완성을 고하게 되었다.”

- 3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회의 회의
- 대화와 토론의 대장정
- 소리와 문자의 통일과 조화

다. 그 외의 과제 개발과 연구

4.3. 공동 연구의 새로운 과제 개발

- 가. 위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과제를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수행함.
- 나. 어문학의 기초 연구를 튼튼히 하여 한국어, 한국어문학, 한국어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임.
- 다. 우리 말과 글의 문제점과 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
- 라. 국어와 국어생활의 문제,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

4.4. 국가 어문정책의 방향 제시와 과제 제안

- 가. 어문정책 기구의 구성에 대한 제안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의 확대 개편 방향 제시
- 나. 어문정책 관련 기관의 정비와 조화를 위한 제안
 -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한글박물관 등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체제 구축
- 다. 기타 국어정책의 방향 제시와 조언

5. 마무리

과거는 흘러간 것이 아니고, 현재에 누적되어 살아 있는 것임.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신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임.

70년 전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우리 조상들의 대처 방안을 오늘에 되새겨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어문학술단체 연합회의 결성으로 민족과 국가의 도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2부 조선어학회 정신의 계승: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기념 강연

한국어 세계화 시대의 국어정책 과제

조남호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chonh@korea.kr

1. 국어가 놓인 환경

- 말레이시아에 부는 한국어 학습 열풍(동아일보 2009년 12월 8일)
- 중동 '우리말 열풍' 갈수록 후끈(서울신문 2009년 12월 12일)
-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네팔의 '한국어 열기'(조선일보 2010년 8월 27일)
- 美 공립고교서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세계일보 2011년 5월 19일)

해외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을 전하는 신문 기사들이다. 실상보다 기사 제목이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부의 통계에서도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음이 드러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가 121,550명이고, 결혼이민자 수는 145,000명, 외국인 유학생은 88,468명이다. 불과 수십 년 전 주변에서 외국인을 보기가 극히 어려웠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에서 세계인의 언어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국어 세계화'라는 말도 귀에 설지가 않다. 일제 강점기 우리말을 잃을 뻔한 아픈 경

힘을 가진 우리에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에 인용한 기사의 출처가 각기 다른 데서도 한국어 보급이 많은 사람의 관심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국어가 놓인 환경이 그동안의 환경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당연히 한국어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일이 국어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세계화에 부수되는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한국어 세계화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혹은 문화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기는 했지만, 세계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영어의 중요성도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현실과 크게 어긋나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에서조차도 경제적인 이유로 영어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졌다. 사내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기업이 생기고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영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로고에 영어를 섞어 쓰고 회사명을 영어식으로 개명하는 곳도 많이 늘었다. 이런 배경에서 사회적으로 영어 광풍이 불면서 영어가 생활 속에 침투하는 일도 훨씬 늘었다. 전문 분야에서는 영어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는 토씨로만 사용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한국어가 가정 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어 교육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어 교육을 소홀히 하여 사회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도 나타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필자는 한국어 세계화 시대에 정책적으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국어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국민의 의식 변화 중에서도 특히 필자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꼽는다. 첫째는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거의 국어정책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소 무심하게 추진되었던 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그런 만큼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국어정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표준어에 대한 헌법 소원, 두음법칙에 어긋난 성씨 한글 표기 인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둘째는 한국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한국어를 바라보는 시각도 국제화되었다는 점

이다. 외국과의 교류가 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외국을 경험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과 섞여 그들과 교류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만큼 과거의 어문민족주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시되던 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었고 어문민족주의 자체에 대한 지지도 많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맞춰 국어정책도 그에 걸맞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2. 한국어 보급 정책

필자의 기억으로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정책이 국어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다. 1990년대에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없지 않았고 일부 사업으로 추진되기는 했지만 국어정책에서 한국어 보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고 예산도 많지 않았다. 한국어 보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0년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 보급을 지원할 한국어세계화재단도 2000년에 생겼다. 학계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한국어 교육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국어정책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보급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예산도 매년 늘어갔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어 교육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 급증하여 교재 및 교육 자료의 개발, 교원 양성 등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될 때도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고 한국어 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심사를 통해 매년 교원 자격증을 국가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이 주축이 되어 각종 교육 자료와 교재가 개발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교재나 교육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국외 학습자 대상

- 초급 한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8개 언어
- 중급 한국어 1, 2
- 세종한국어 1, 2, 3, 4

○ 국내 학습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 3, 4, 5, 6
- 부부 공동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중국어, 베트남어)
-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2

○ 멀티미디어 교재 등

-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한국어 ‘온리유’ 1, 2(영어, 중국어, 일본어)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방송(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실용 한국어 방송(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 다문화 사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방송(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등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늘면서 한국어 교육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도 늘었고 예산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에서의 교육에는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에서의 교육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관여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관여함에 따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 사업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이를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학당’을 한국어 교육의 통합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으로 관계 부처와 합의하고 이를 위해 세종학당재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2012년 세종학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8월 24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해산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총괄 관리 기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세종학당재단 출범을 문화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말에 출범할 예정이다.

세종학당에서 담당하게 되는 업무로 법에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 (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말한다. 재외문화원 및 현지 대학 등에 개설하고 운영비, 교재, 교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2007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었는데 2012년 7월 현재 43개국 90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한국어 학습 시스템으로 ‘누리-세종학당’도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종학당을 한류와 관련된 문화 전략 지역과 국내 기관 또는 기업의 진출 필요성이 높은 산업 전략 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 중심의 편중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단계별 기본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되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보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하나의 세종학당에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이상의 자격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있을 수 있도록 2012년 한국어 전문 교원 20명을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이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 연수도 늘릴 예정이다.

한국어 세계화 시대에 가장 우선되는 국어정책은 한국어 보급에 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이미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어 보급은 단지 우리의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정책적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맞춰 교재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이 해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해지는 교육 현장의 요구와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재가 지역, 대상, 교육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교재 개발보다는 현장의 교사와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 연구를 하고 교재를 만들거나 교수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만들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성패는 좋은 선생님의 확보에 좌우되므로 한국어 교원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쳐야 한다. 또한 이제 출범하는 세종학당재단이 자리를 잡아 한국어 교육의 통합 브랜드인 세종학당이 잘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3.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바른 말 고운 말. 오랫동안 국어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언어 순화 사업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표현에서 묻어나는 계도적인 느낌에 거부감이 생기고 무엇이 바르고 고운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이제는 예전만큼 이 표현을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잘못된 국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의 보도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언론에서 국어 문제를 다룰 때

관심을 갖고 다루는 중요 주제 중의 하나가 잘못된 국어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신문에서 기사로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 2)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게 고쳐야 한다
- 3) 방송에서는 방송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언어폭력, 막말 사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 5) 청소년들이 외계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 지적된 문제들은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어 사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다. 그런 만큼 국어정책적으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개원 이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공공언어지원단을 두어 집중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되도록 하고 여러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문제로 지적되는 여러 사항들이 개선되기 보다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이라는 과제를 국어정책에서 포기할 수도 없다. 국어를 모어로 익힌 한국인이든, 제2언어로 배운 외국인이든 국어를 사용하는 데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문제점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이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위에 지적된 문제점들은 도덕적인 당위나 국어의 순수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전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인 당위나 국어의 순수성이 국어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워졌다.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국어 사용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과의 교류가 늘고 외국인 또는 외국계 한국인과 섞여 살게 되면서 국어의 개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영어와의 관계 설정도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문제점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내부에서도 이에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중의 하나로 이제는 국어 사용의 문제를 당위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의사소통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논의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은 논의만 할 뿐 정책으로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어정책 추진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어정책의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론으로 형성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에 창립하는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외국의 언어정책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유사한 경험을 한 외국의 정책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다. 특히 다문화처럼 우리 사회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외국의 언어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제한적으로 접근한 면이 없지 않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인식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미 학계에 외국의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도 외국 정책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국어정책은 소수의 전문가가 담당할 몫이라고 인식되어 온 면이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는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관 주도로 국어정책을 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으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국어정책 과제의 하나이다.

4. 국립국어원 2012년 사업

마지막으로 이미 소개했던 것들을 포함하여 국립국어원의 2012년 주요 사업을 사업 제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국어정책의 과제들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다.

- 언어정책 기반 조성 및 지원
 - 국어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환경 개선
 - 어문규범 관리 및 감수 지원
 - 문장 부호 개선
 - 특수 언어 표준화 및 보급
 - 국어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실태 조사
 -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 국어정책 통계 조사 및 활용
 - 국어 분야 학술 교류 및 세계 언어기관 간 국제 교류
 - 언어정책 국제 학술대회 개최(11월)
 - 외국 언어정책 기관 방문 교류 및 공동 연구 모색
- 국어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 국어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 지역어 보존 및 활성화 연구
 - 사라져 가는 생활어의 보존 발굴을 위한 민족생활어 조사
 - 재외동포 언어 실태 조사
- 우리말 정보 통합 관리, 지원 체계 구축
 - 디지털 한글 박물관 구축, 운영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건 구축
 -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구축
- 공공언어 개선
 - 공공기관별 맞춤형 감수 지원제 시행
 -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진단 및 개선
 - 방송의 저품격 언어 실태 조사 및 대안 제시

- 청소년 언어의 실태 조사 및 개선안 개발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보급
 - 청소년 언어 개선 자율 활동 프로그램 기획, 지원
- 표준 언어 예절(2011)의 보급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 국어문화학교 운영
 - 일반인 및 공무원 대상 정규 과정 운영
 - 기관의 요청에 따른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 새터민 교사, 언론 출판인 등 대상 특별 과정 개발 운영
 -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한국어 교육의 기초 연구 강화
 - 한국어 교육 내용 연구 강화
 - 한국어교육 문법 문장 표현 내용 개발
 -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
- 내실있는 한국어 교육 자료 구축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발간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체제 강화
 - 한국어 전문가 초청 및 파견
 - 국내 한국어교원 공동연수회 개최
 - 국내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과정 운영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2부 조선어학회 정신의 계승: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문

우리 말과 글은 우리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핵심이 되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불과 7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우리는 말과 글을 빼앗기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다. 다행히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한 선열들과 선배 어문학자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말과 글을 지킬 수 있었다. 광복 이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말과 글은 크게 발전하였으며 한국어는 세계어로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어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국력의 성장과 한류 바람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고 있는 한편으로 우리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갇혀 있거나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져 분열의 언어만 생산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외국어와 외국 문자를 남용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청소년들의 언어는 물론 성인의 언어도 욕설과 막말이 뒤섞여 우리말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불신과 불통이 팽배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는 일념으로 연구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언어 현실을 깊이 우려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다. 그렇지만 연구자 개인의 노력으로 국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공이 세분화되어 연구자들이 개별 학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학계 공동으로 사회적 현안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였다. 우리말을 지키고자 자기희생도 불사하였던 선배학자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어문학술단체들은 조선어학회 항일투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구성하여 국어와 국어생활의 문제,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 한국어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국어 문화에 애정이 있는 많은 분들의 깊은 관심을 바라 마지않는다. 아울러 선배 학자들의 국어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본받아 우리말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하여 같고 다듬는다.
- 우리는 함께 어문학의 기초 연구를 튼튼히 하여 한국어, 한국어문학, 한국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
-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말과 글의 문제점과 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한다.
-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불편 없이 쉽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우리는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의 문자 문제를 초월하여 바람직한 국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한다.
- 우리는 한글에 대한 문화적 긍지를 드높이고 창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12일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참가 학회

한글학회(1908년 8월)	국어국문학회(1952년 11월)
한국어교육학회(1955년 2월)	한국언어학회(1956년 10월)
한국어문학회(1956년 11월)	국어학회(1959년 11월)
겨레어문학회(1960년)	한국언어문학회(1963년 2월)
한국국어교육학회(1963년 9월)	한국어문학연구학회(1964년 3월)
국어문학회(1965년 3월)	국어교육학회(1969년 12월)
한국어문교육연구회(1969년 7월)	한국문학언어학회(1970년 1월)
배달말학회(1973년 3월)	우리어문학회(1975년 3월)
이중언어학회(1981년 9월)	반교어문학회(1981년 12월)
우리말글학회(1982년 3월)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1983년 12월)
국제한국어교육학회(1985년 7월)	한국어학회(1985년 7월)
한국알타이학회(1985년 10월)	한말연구학회(1986년 4월)
청람어문교육학회(1987년 3월)	구결학회(1988년 2월)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1989년 2월)	국어교육학회(1990년 11월)
한국사회언어학회(1990년 12월)	한국텍스트언어학회(1991년 12월)
한국현대소설학회(1992년 11월)	한국중원언어학회(1994년 10월)
한국문학교육학회(1996년 8월)	국어사학회(1997년 5월)
한국지명학회(1997년 9월)	한국화법학회(1998년 8월)
영주어문학회(2001년 3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2001년 9월)
한국사전학회(2002년 2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2003년 11월)
한국문법교육학회(2004년 3월)	한국방언학회(2004년 9월)
한국작문학회(2005년 6월)	

*이상 43개 학회(창립순). () 안은 창립 연월.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제2부 조선어학회 정신의 계승: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 선언
2012년 10월 12일 (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어문 학술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학술과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 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 회원 학회의 공동 관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3. 국어정책 건의 등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학회로 한다.
- ② 회원의 구비 요건 및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이 회칙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의 납부

2.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3. 각종 회의의 참석
4.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 회칙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 내외(어문, 어학, 문학, 교육 분야 내 대표 이사 3인 포함)
2.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학회 대표가 교체된 경우 후임 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 ① 대표 이사와 감사는 회원 학회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회원 학회의 대표 혹은 대표로 위임받은 이 중에서 대표 이사가 지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대표 이사는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대표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 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대표 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근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기능)

-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
- ②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대표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표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대표 이사는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대표 이사는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모든 회원 학회는 동등하게 1인의 자격을 가지며, 회원 학회의 대표 또는 대표로 위임받은 사람이 회원에게 부여된 1인의 권리를 행사한다.
- ③ 여러 학회의 대표를 겸임하는 사람은 한 회원 학회만을 대표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 학회는 대표를 따로 위임해야 한다.
- ④ 회원은 서면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항의 출석 회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 심사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안건
6.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 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대표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3항에 준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 이사가 결정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회 의결에 있어서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실무위원회) 이사회가 의결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 이사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3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및 접수입금

4. 기타 수입금

② 회비의 금액, 납부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회계 연도)

①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본 회의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잔여 재산)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28조(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규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29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시행한다.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조선어학외 양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

발행인 민현식

발행일 2012. 10. 12.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http://www.korean.go.kr>

편 집 한글학회

© 2012 국립국어원

※ 이 책은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학술 행사를 위한
논문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